희망리포트

2015-01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유혜승 · 김지헌 · 이민영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연구책임 유혜승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hsyoo@makehope.org)

공동연구 김지헌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kimjihun@makehope.org)

공동연구 이민영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mignon@makehope.org)

목차

연구 요약 9

Part 1
서론 21

1장 광복 70년, 그리고 소셜픽션 22
1. 왜 지금 우리는 22
2. 소셜픽션이란 무엇인가 23

2장 소셜픽션 콘퍼런스 27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1. 행사 개요 27
2. 진행 과정 28

3장 연구보고서 32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1. 연구 방법 32
2. 주요 내용 33
3. 특성 및 과제 34

Part 2
배움 37

1장 청년, 어떤 배움을 원하는가 39
1. 청년의 교육 인식 39
2. '내'가 가장 중요한 교육 42
3. 어디서 누구와 배울 것인가 46
4. 언제든지 누구나 배운다 48
5. 무엇을 배울 것인가 49

2장 미래 배움을 위한 제언 52
1. 부모를 돌려주자 52
2. 배움의 주도권을 배우는 이에게 56
3. 학교의 경계를 넘어 59

Part 3
일자리 65

1장 청년, 어떤 일자리를 상상하는가 67
1. 존중받는 일자리 67
2. 여유 있는 일자리 68
3.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일자리 69
4.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70
5. 상상노조 선언문 71
6. '좋은 일자리'의 미래지표 72

2장 미래 일자리를 위한 제언 75
1. 노동권 교육 도입 75
2. 삶의 안정성 확보 77
3.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의 균형 79
4.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 82
5. 노동자의 경영 참여 84
6. 소결: 미래 일자리를 위한 제언 84

Part 4
복지 87

1장 청년, 어떤 복지를 꿈꾸는가 89
1. 청년도 복지의 대상이다 90
2. 복지의 완성은 공동체로 95
3. 일과 가정이 어우러지는 삶 99
4. 청년의 미래복지 상상 101
5. 20대가 상상한 복지 미래지표 107

2장 미래 복지를 위한 제언 109
1. 청년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전략 109
2. 미래 복지의 열쇠, 마을 116
3. 패러다임부터 바꾸자 117

Part 5
민주주의 123

1장 청년, 어떤 민주주의를 그리는가 125

1. 내 곁의 민주주의 125
2. 정치와 나 129
3. 민주주의, 제대로 하려면 131
4. 시민성에 대한 성찰 132
5. 20대가 상상한 민주주의 미래지표 135

2장 미래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137

1. 투표율을 높여라 138
2.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146
3. 민주주의의 미래, 숙의 151

Part 6
결론 155

참고문헌 158

표 목차

[표 1-1] 20대들이 상상한 30년 후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 33

[표 2-1] OECD 국가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 42

[표 2-2] 학교가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46

[표 2-3] 꼭 배워야 하는 게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50

[표 3-1] 미래의 일자리 평가 기준의 내용과 의미 73

[표 3-2] 영국 노동교육 교과 내용 요약 76

[표 3-3] 장시간 노동체제의 결과 79

[표 3-4] 노르웨이의 출산휴가제도 81

[표 5-1] 주요 국가의 사전투표제 운영 현황 140

[표 5-2] 주요 국가의 기탁금 현황 141

그림 목차

[그림 1-1] 소셜픽션의 그라운드룰 24

[그림 1-2]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20대 참가자 분포도 28

[그림 1-3] 상상확장판 예시 - 교육 29

[그림 1-4] 소셜픽션 워크숍 1의 진행 과정 30

[그림 1-5] 소셜픽션 워크숍 2의 논의 주제 30

[그림 1-6] 소셜픽션 참가자들의 결과물 (예시) 31

[그림 2-1]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3,4조 미래상상 그림 47

[그림 4-1] 20대들이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꼽은 제약조건 90

[그림 4-2] 2045년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 중 '복지' 관련 분포도 92

[그림 4-3] 20대가 상상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생태 마을에서의 삶 118

[그림 5-1]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상상확장판 125

[그림 5-2] 2045년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 127

[그림 5-3] 2045년 전주의 가족공동체 상상테이블 지도 153

연구 요약

Part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내용

Part 2 배움

Part 3 일자리

Part 4 복지

Part 5 민주주의

연구 요약

Part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20대 청년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 모습을 영역별로 정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의 얼개를 묘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현재의 청년을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많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을 주어로 삼아 이들이 원하는 사회를 체계적으로 그린 연구는 드물다. 이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비전이 현재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제시에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

연구팀은 이를 위해 2015년 희망제작소와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에 참가한 20대 청년 59명이 진행한 토론 및 워크숍 내용을 기초자료로 삼았다. 더불어 영역별 전문가 자문, 활동가 인터뷰, 문헌조사를 병행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영역별 20대 참여자들의 사회적 열망을 도출해 특성별로 분류했다. 둘째, 분류한 특성들을 범주화해, 청년들의 사회적 상상으로부터 30년 후의 이상적인 사회 비전을 그려냈다. 셋째, 20대 참여자의 현실과 이상적인 사회 비전을 비교한 후 그 차이를 분석, 문제점을 찾았다. 넷째,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수립했다.

연구 내용

20대들이 진단한 영역별(배움, 일자리, 복지, 민주주의) 현재의 모습과 이들이 상상한 30년 후 미래의 모습,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대들이 상상한 30년 후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

구분	분석틀	현재	미래	대안
배움	주체	교사	교사 너머, 학생 참여권	부모와 이웃
	장소	학교 내 교육, 사교육	학교 밖	마을
	목적	교과 중심의 스펙 쌓기	살면서 필요한 지식	관계성, 삶의 기술
일자리	특성	경직, 불안정	유연성, 안정	노동시간 단축, 유연화
	문화	수직적, 존중 없음	수평적, 존중(귀천 없음)	노동권 교육, 노동자 경영 참여,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
	목적	소득 우선(그마저 불안정), 개인 시간 없음	소득 이외의 가치, 행복	자아실현, 취미
복지	주체	국가: 선별주의적, 불공정, 관주도 전달체계, 가족책임주의	국가: 보편주의적 기본권 / 공동체: 자립적, 유연성, 비례적	지방분권화, 공공·민간 통합체계, 탈가족주의
	장소	시설복지 중심	지역사회, 마을	재가복지, 일-돌봄 시민모델, 세대통합형
	목적	경제적·고정적 욕구, 일회적·시혜적(수동적)	개인주의, 다양성, 유연성, 예방적·투자적(능동적)	지속가능성, 다기능적
민주주의	대표성	보수·엘리트 중심, 관료적, 권위주의	시민사회, 숙의적, 생활정치	공공부조 확대, 투표제 보완, 피선거권제한 보완
	책임성	87년 민주화 이후 위기, 정부 무능, 부패	생애주기별 정치인(10대부터)	조직화, 정치세력화 네트워킹
	목적	소극적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자유, 평등, 시민성 회복	공론장, 토론문화

Part 2 배움

청년, 어떤 배움을 원하는가

◎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20대 청년들은 교육이 권리가 아닌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현재 짊어지고 있는 '교육의 의무'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졸업이라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 받아온 입시교육, 특히 소위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초점을 맞춰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 2015년을 사는 20대가 상상하는 교육은 그들이 누리고 싶은 일상, 곧 삶의 모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부모 또는 이웃들과 동네에서, 나를 알고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사는 방법을 익히고 싶어 했다. 또한, 사회에서 부여받은 역할과 무관하게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제약 없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배움에 대한 욕구는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보다는 자신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삶의 지혜를 실질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래 배움을 위한 제언

◎ 청년들은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교원보다 일상에서 부모나 이웃과 더불어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영유아 시기부터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육아휴직제 현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양육의 책임을 부과하는 한국사회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남성의 육아휴직제 실행을 보편화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영유아 시기부터 돌봄을 균등하게 지원받기 위해서 아동수당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다.

◎ 기존의 교과과정이 교과 중심 기간학제라면, 청년들이 원하는 교과과정은 '나'를

중심으로 한 개인 맞춤형에 가깝다.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목표에 근거해 현실과 연동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의 배움을 도와야 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 그리고 학교를 둘러싼 지역의 일에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자치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자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또는 초 중등교육법 17조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여, 학생이 학교와 지역 안에서 자치와 자율을 배울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 및 기술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는 청년들에게는 학교 밖 교육의 기회를 더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지역과 만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는 학교 밖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밖에서의 학습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학교 밖에서의 학습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Part 3 일자리

청년, 어떤 일자리를 상상하는가

◎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는 소득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상상을 펼쳤다. 이에 따라 미래 일자리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① 존중받는 일자리 ② 여유 있는 일자리 ③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일자리 ④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이다.

◎ 존중받는 일자리란 각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고,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소통이 원활한 일자리다. 즉 조직 내 문화는 청년들이 상상하는 일자리 구현에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직급이 아니라 역할이 중요한 수평적 조직형태를 선호했다.

◎ 여유 있는 일자리란 일에 지친 자신을 회복할 수 있으며, 무언가를 창작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일자리다. 청년들은 현재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스스로에게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

고 있었다.

◎ 또 청년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일자리를 상상했다. 생계에 대한 공포가 줄어 직장과 직업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환경을 꿈꾸었다. 청년들은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의 입장에서 유연한 일자리, 동시에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는 일을 통해 내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를 가진 이들은 소득 확보가 아니라 자아실현과 사회 변화를 일의 목적으로 추구한다. 청년들은 궁극적으로 단순히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여가 모두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꿨다.

◎ 20대가 상상한 '좋은 일자리'의 미래지표를 요약하면, '차별 없는 일자리와 사회',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자리', '삶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일자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소셜픽션을 진행하며 청년들이 꿈꾸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행복이 보장되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소셜픽션 콘퍼런스가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추구해야 할 가치가 공유되지 못한 점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 일자리를 위한 제언

◎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여한 청년들이 상상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① 노동권 교육 강화 ② 삶의 안정성 확보 ③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의 균형 ④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⑤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의식이 달라져야 하며, 모든 이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 시간을 설계할 여지가 커져야 하며, 노동자와 사회의 공감도가 높아져야 한다. 노동자가 더 많은 결정권과 책임을 갖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청년들이 창조적인 일에 도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북유럽 사례에서 보

듯이 안정된 실업급여제도와 연금제도, 적극적인 노동시장개입정책 등을 통해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생활임금제 등 최저소득 상향 방안을 찾아야 한다.

◎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르웨이의 일-돌봄 시민모델(Worker-Carer)처럼 일과 돌봄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청년들의 상상처럼 여유 있게 일하면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삶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회 전체와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스웨덴의 '민중의 집'과 노동자 교육협회의 활동, 지역사회복지와 노동조합의 연계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 노동자와 지역사회주민이 만나고 연계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유럽의 공동결정제도나 노동자 협동조합처럼 노동자의 기업 경영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노동자 개인의 수준에서 이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학교에서부터 갖춰져야 한다.

◎ 일자리의 변화는 각 개인의 삶의 변화, 공동체 및 사회의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좋은 삶'과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일자리'의 모습, 좋은 일자리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와 사회문화는 무엇인지 비전과 세부목표, 실현방안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Part 4 복지

청년, 어떤 복지를 꿈꾸는가

◎ 청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015년 20대로 살고 있는 청년세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은 사회복지의 5대 불안 요소(일자

리·보육 및 교육·주거·노후·건강 불안)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괴로운 중간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대들의 미래상상 속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없었다. 복지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할 청년세대는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을 원하고 있었다.

◎ 20대들의 복지에 대한 상상은 '더불어 사는 삶'을 '제도화'해달라는 요구로 인식된다. 그들이 상상하는 복지사회는 일과 가정이 어우러지는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한 사회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없애는 '일과 돌봄'의 대안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청년들이 제시한 것은 마을공동체 안에서 혈연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가족'과의 융합이었다.

◎ 생존권과 주거권, 기본사회권의 보장 아래 마을 민주주의를 이루는 삶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추구하는 미래사회의 4대 핵심가치는 안정(주거와 일자리), 정서적 유대감, 유연한 삶, 자아실현(꿈)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소통(이웃), 융합, 협동, 공감(세대), 공유, 문화예술, 지속가능성, 열린 교육(배움의 자유), 건강, 참여, 평화가 개인의 미래 핵심가치로 도출되었다.

◎ 20대들은 생애주기별 프레임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영유아에게 '부모와 함께할 권리'를 주어야 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에게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주거권과 최저임금만큼은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장년층을 위한 '이모작 프로그램'의 보완과 노인층을 위한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도 제안했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은 통합적 정책서비스를 통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했다.

미래 복지를 위한 제언

◎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청년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전략은 '얼마나 보장해주고, 늘려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권 확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무엇보다 우선하여 청년의 주거권 확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권 통합정책패키지 개발을 제언했다. 둘째, '일-돌봄 시민

모델'의 도입을 제언했다. 셋째, 학자금 부채로 압박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주거지원, 구직지원 정책패키지 개발을 제언했다.

◎ 20대들이 추구하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생태 마을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삶을 재구성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제도, 대안적 교육체계, 참여체계, 법률체계(기본소득, 기초임금 등 사회권 보장), 안전체계, 보건체계, 편의구조, 여가 구조의 여덟 가지 사회구조 체계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 사회적 인간으로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Part 5 민주주의

청년, 어떤 민주주의를 그리는가

◎ 2015년 한국 사회에서는 '생활정치의 실현'이 최우선 과제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더 이상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기기를 거부했으며, 청년들 스스로 참여해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성하기를 희망했다. 구체적으로 10대부터 생애주기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20대들은 민주화를 가늠하기 위해 참여와 소통, 자율성과 투명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5년을 사는 20대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가족 내 민주주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주의가 일상의 영역에서 실현되려면 사회적인 것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성찰과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바랐다.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과 학습자의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책임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20대들은 정치 냉소, 정치혐오, 정치 무관심 등의 단어로 일컬어지는 청년세대가 아니었다. 청년들이 30년 후 구현되길 바라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우선 1인 1표의 조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 투표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의 확대는 필수요소가 된다. 더불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2015년 청년들을 위해서 높기만 한 피선거권의 진입 장벽을 보완해야 한다.

◎ 시민성과 주인의식을 키울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가장 먼저 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학교 밖에서 민주시민교육체계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시도를 널리 알리고, 시민이 시범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 민주주의의 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시민참여 모델과 방법론이 확산되어야 한다. 더 나은 시민과 더 나은 삶을 이루며,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민민주주의의 공론장이 마련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숙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방법론에 대한 시도와 실험을 지속해 성숙한 토론문화를 끌어내야 한다.



Part 1
서론

1장 광복 70년, 그리고 소셜픽션

2장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3장 연구보고서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1장

광복 70년, 그리고 소셜픽션

1. 왜 지금 우리는

1945년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오랜 착취로 인해 피폐한 경제 현실과 혼란스런 정치·사회적 상황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의 역사가 가져온 빈곤과 혼란 속에서도 현실의 제약을 대담하게 넘어서 '살만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은 있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이들은 적절하게 교육받으며, 풍요로울 뿐 아니라 정의로운 경제가 운용되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평등한 나라의 꿈이었다.

광복 후 70년이 지난 2015년.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꾸었던 1945년의 꿈은 어떤 부분은 현실이 되었지만, 많은 부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현실은 자주 우리를 한숨짓고 좌절하게 한다. 암울한 미래를 그리게도 한다. 하지만 과거 당대인들이 그랬듯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대담하게 상상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제안과 모색을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

연구보고서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는 1945년의 꿈을 이어받고 발전시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색의 일환이다. 본 연구보고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광복 70년을 기념하며 광복 당시 가졌던 꿈을 회고

2015년은 광복을 맞이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 1945년 광복 당시 피폐한 국토와 강대국의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민족의 염원을 담아 나라의 미래를 꿈꾸었던 당대인들의 염원을 함께 기리기에 마땅한 시기다. 또한,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대한민국 헌법 제1호)은 당시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의 미래를 담고 있는 자료로 현재의 기준으로 봐도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광복 70년을 맞아 제헌헌법과 광복 당시 가졌던 꿈의 성취와 한계를 돌아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다.

◎ 2045년 광복 10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미래를 상상

2045년은 30년 후 광복 100년을 맞이하는 해로, 상징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상상해 보기에

좋은 시기다. 과거 당대인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갔듯 현재를 사는 우리도 현실의 한계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더 밝은 내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의식하며 본 연구는 출발했다.

◎ 시민의 상상력이 갖는 창조적 힘을 공동의 상상을 통해 사회에 적용

사회·문화·과학·경제적으로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는 긍정적인 상상과 희망을 통해 이상적 미래를 그릴 때 생기는 창조적인 힘이 필요하다. 공상과학 소설(Science Fiction)에서 꿈꿨던 미래가 시간이 흘러 구현되듯, 소셜픽션(Social Fiction)은 평범한 시민들이 사회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꿈꾸고 불안과 좌절을 넘어설 힘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2. 소셜픽션이란 무엇인가

1) 소셜픽션의 개념

◎ 소통. 나만 열 수 있는 문은 마을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문화를 가진 마을이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게 할까요?
◎ 주거. 집이 모이면 마을이 됩니다. 문화서울의 집과 주거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 경제. 성장이 경제의 동의어이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나누고 공유하는 문화를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경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 안전. 안전은 좋은 마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안전을 위해 가져야 할 문화마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 생태. 키우고 지켜야 할 것이 문화만은 아닙니다. 마을 속 자연과 생태는 어떻게 가꿔야 할까요?
◎ 예술. 아무리 문화의 의미가 넓어져도 그 가운데는 전통적 의미의 문화와 예술인이 있습니다. 문화서울을 위해 문화·예술인들과 예술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 마을 공간(공공 공간). 공간은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우리의 마을 공간은 어떤 문화를 담고 가져야 할까요?
◎ 육아/교육. 문화는 아이의 마음을 키웁니다. 풍성한 마을 문화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 어린이. 아이들은 마을의 씨앗이고 새싹입니다. 어떤 문화를 가진 마을에서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 청년. 머나먼 삶의 여행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어떤 문화를 가진 마을이 이들의 멋진 삶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 중장년. 아마 대부분 일생 가운데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는 분들입니다. 어떤 문화를 가진 마을이 중장년층에 진정한 힘이 될까요?

◎ 어르신. 어르신들은 가장 오랫동안 마을을 만들어 오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며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마을이 될 수 있을까요?

◎ 여성. 어쩌면 여성이야말로 마을의 수호자이고 기둥입니다. 어떤 문화를 가진 마을에서 여성이 행복할까요?

◎ 남성. 치맥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관심해 보이지만 남자들도 문화를 바랍니다. 남자들도 행복한 마을문화는 어떤 것일까요?

◎ 소수자.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이 가진 것입니다. 어떤 문화를 가지면 소수자들도 존중받는 마을이 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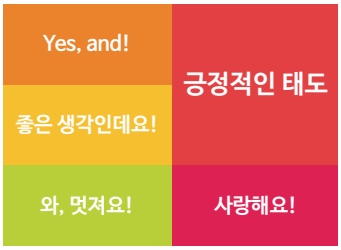
위에 열거한 질문들은 모두 실제로 소셜픽션 행사에서 사용된, 단순하지만 명료한 질문들이다. 소셜픽션이란 사회에 대해 제약 없이 상상하고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는 기획 방법이다. 이때 '상상'은 공상이나 예측과 달리 의지가 담긴다. '이런 미래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염원이다. 즉 여기서 상상이란 예언자나 공상과학 소설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나 조직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염원을 확인하는 일이 된다. 상상을 통해 먼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나면, 거기서부터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생각하고 기획하는 일이 가능하다. 소셜픽션은 사회 전체에 대한 역방향 기획을 가능하게 한다.(이원재 외, 2014.)

예를 들어 당장 일자리 문제 해법을 생각하는 대신, '30년 뒤 직장'의 모습을 상상해 그려보는 것이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문제를 당장 찾고 해결하려 나서는 대신, 우리가 염원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20년 뒤 서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사회적 상상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소셜픽션의 주요 관건이다. 소셜픽션은 이렇게 비전과 목표를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오래 일을 추진해 갈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기획 방법론이기도 하다.

[그림 1-1] 소셜픽션의 그라운드룰



소셜픽션이란



소셜픽션의 그라운드 룰

소셜픽션은 갈등의 원인을 확인한 후, 미래 상상을 통해 현재의 이해관계 충돌의 돌파구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상상'이라는 도구로 참가자들이 집단지성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탐색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① 뒤집어 생각하기
② 다른 언어로 같은 목표를 정할 수 없음을 인식하기
③ 이미 있는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
④ 새로운 기획은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
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여러 방법이 있음을 인식하기
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기
⑦ 남기려 하지 말고 최대한 모으기
⑧ 다름을 발견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기
⑨ 개인보다는 '관계'를 상상하기

2) 소셜픽션의 실제 활용

소셜픽션이란 기획방법론을 다수의 사람과 함께 현실에서 활용하기 위해 워크숍과 콘퍼런스 형태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워크숍과 콘퍼런스를 결합해 소셜픽션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① 소셜픽션 워크숍

소셜픽션 워크숍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현실의 제약사항을 벗어난 사고를 통해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는 워크숍이다. '혼자 하는 상상'에서 '함께 하는 상상'의 순서로 참가자들의 상상을 자연스럽게 모으는 과정을 거친다.

모든 결과물은 문자보다는 그림이나 콜라주와 같이 다양한 시각적 효과가 있는 매체로 구성하는 것이 더욱 폭넓은 상상을 이끌 수 있다. 참가자들의 상상 결과가 워크숍의 최종결과로 이어지도록 주최자의 개입은 최소로 한다. 뛰어난 상상이나 실현 가능한 상상을 참가자의 투표로 선정하기보다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 다른 참여자의 상상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소셜픽션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현실에 관해 토론할 수 있다.

② 소셜픽션 콘퍼런스

소셜픽션 콘퍼런스는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공공 영역의 큰 주제에 대해 대규모의 인원이 함께 모여 미래를 상상하는 형식의 행사다. 소셜픽션 콘퍼런스는 구체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조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행사가 가진 자유로운 분위기와 결과물이 주는 시각적 효과는 시민참여형 정책의 홍보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소셜픽션콘퍼런스@원전하나줄이기'[1], '소셜픽션콘퍼런스@혁신파크'[2]를 통해 자발적, 비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소셜픽션 콘퍼런스의 진행과 성공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다.

③ 소셜픽션 기획단+콘퍼런스+워크숍

'소셜픽션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소셜픽션 워크숍과 콘퍼런스를 결합한 '소셜픽션 기획단+콘퍼런스+워크숍' 형태로 구체적인 정책 도출을 시도하는 것이다. 소셜픽션을 요청한 주최 측과 함께 소셜픽션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를 발전시킬 기획단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기획단은 콘퍼런스의 형식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콘퍼런스의 각 모듬에는 사전 교육된 토론 진행자(퍼실리테이터)와 기록자가 참여해 상상을 모으고 기록한다. 최종적인 결과는 기획단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이 내용을 발전시켜 실제 정책·사업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친다. '소셜픽션콘퍼런스@마을중심문화도시 서울'[3], '소셜픽션콘퍼런스@최용신기념관'[4]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

1. 2014년 3월 서울시청 다목적홀과 대회의실을 동시에 사용해 3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행사(강연: 김산, 진행: 김승수, 이창림). 상상을 주제로 한 대규모 행사의 대중성을 확인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 시작을 앞두고, 특정 내용에 대해 시민의 반응을 측정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기획을 포함해 상상 분야를 제시했고, 각 그룹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상상케 했다.

2. 2014년 5월 진행된 혁신파크의 미래를 그리는 소셜픽션 워크숍. 지역주민,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집중형 워크숍이 아닌 분산형 워크숍으로 혁신파크 내 여러 포인트를 순회하며 워크숍을 진행했다. 현장성이 두드러진 워크숍으로 추상적 대상이 아닌 구체적인 지역, 건물의 미래를 상상하는 워크숍의 진행 형태를 실험할 수 있었다.

3. 2014년 8월 서울크리에이티브랩에서 개최된 소셜픽션 콘퍼런스. 서울시 정책 수립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 분야별 전문가 중심 회의체를 구성해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 후 다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정책 형태로 가공해 제안할 상상과 개념, 아이디어들을 정리했다.

4. 2014년 8월 안산 최용신기념관에서 개최되었고 지역활동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서 모인 아이디어는 최용신기념관을 중심으로 안산시와 지역활동가가 함께 다각적으로 구체적인 실현을 시도하고 있다.

2장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1. 행사 개요

본 연구는 20대 청년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영역별로 정리해 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의 얼개를 묘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현재의 청년을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많으나, 현재의 청년을 주어로 삼아 이들이 원하는 사회를 체계적으로 그린 연구는 드물다. 이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비전이 현재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제시에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망제작소는 우선 대한민국 20대 청년 및 시민과 함께하는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 주최·주관 : (재)희망제작소, 한겨레신문사

◎ 기간 : 2014년 12월~2015년 3월(약 4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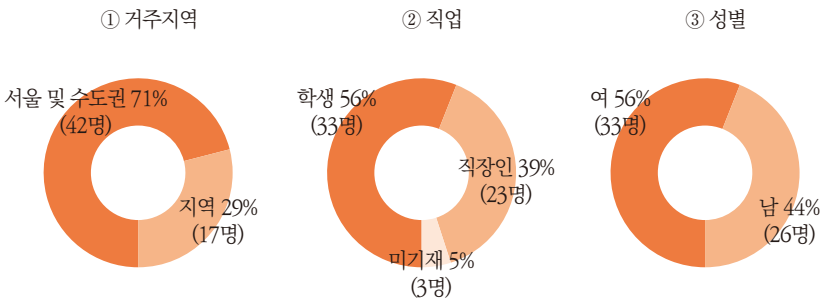
◎ 대상 : 대한민국 20대 청년 및 광복 100년의 미래에 관심 있는 전국의 시민

◎ 구성 :

프로그램	내용
소셜픽션, 20대가 그리는 대한민국 (2/28~3/1)	◎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볼 주요 6개 분야 (교육·일자리·복지·민주주의·통일·환경) 선정 ◎ 6개 분야의 미래를 함께 상상해 볼 20대 청년 70명 모집 ◎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30년 후를 함께 상상하는 소셜픽션 콘퍼런스 행사 개최

상상테이블, 온 국민이 함께 그리는 미래 (3/2~3/8)	◎ 주제에 상관없이 30년 후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언콘퍼런스(Unconference) ◎ 전국 각지에서 30년 후의 미래를 논의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모임 사전 등록 ◎ 3.1부터 일주일간을 '상상테이블 주간'이라 명명하고 사전 등록한 모임들을 신청자 스스로 개최 ◎ 개최한 모임들의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
토크콘서트 (3/28)	◎ 일주일간의 미래상상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대중들과 이야기 나누는 자리

이번 소셜픽션 콘퍼런스에는 20대 청년 59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참가를 신청했으며, 이들의 거주지역 및 직업, 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20대 참가자 분포도

2. 진행 과정

1) 상상확장판

상상확장판은 소셜픽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각 주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대상과 영역을 놓치지 않고 상상하도록 분류체계를 알려주거나, 본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예를 들어, 교육을 주제로 소셜픽션

을 진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게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까', '학교가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등을 묻는 상상확장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는 각각의 참가자들이 선택한 주제를 포함하여 각 분야의 상상확장판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참가자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상상에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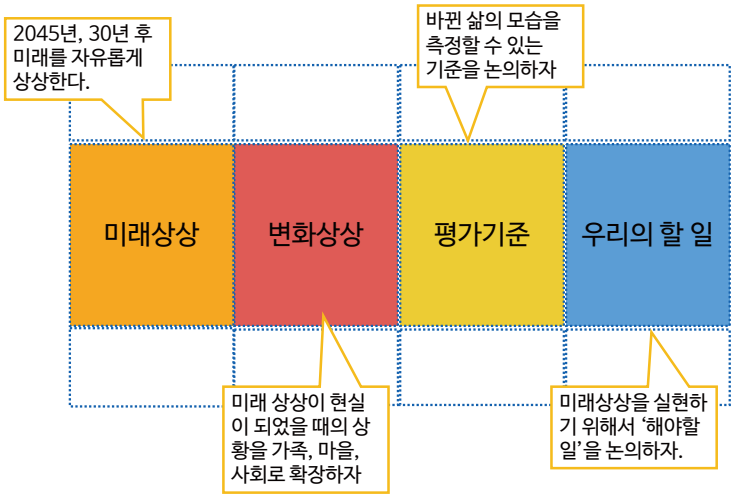
[그림 1-3] 상상확장판 예시 – 교육

2) 소셜픽션 워크숍 1

교육, 일자리, 민주주의, 복지, 환경, 통일 등 주제별 상상확장판에 공유된 59명의 참가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주제별로 조[5]를 나누어 '소셜픽션 워크숍 1'이 진행되었다. 소셜픽션 워크숍 1에서는 조별 참가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2045년 미래의 모습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가는 과정(미래상상)을 거쳤다. 이후 주제마다 미래상상에 따라 변화된 모습이 가정, 마을,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주제별 미래상상을 확장(변화상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래상상과 변화상상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제약사항과 이해관계를 넘어선 이상적인 미래를 설정한 후에는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논의해 이상적인 미래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전략을 고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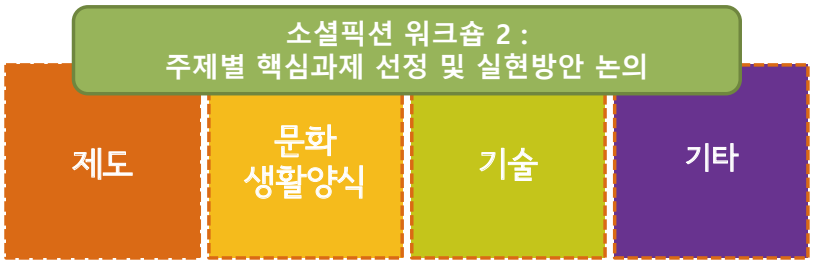
5. 주제별 조는 참가자의 사전신청을 통해 정해졌으며, 이후 본문에서는 각각의 조를 '상상테이블'이라 명명한다.



[그림 1-4] 소셜픽션 워크숍 1의 진행 과정

3) 소셜픽션 워크숍 2 : 핵심과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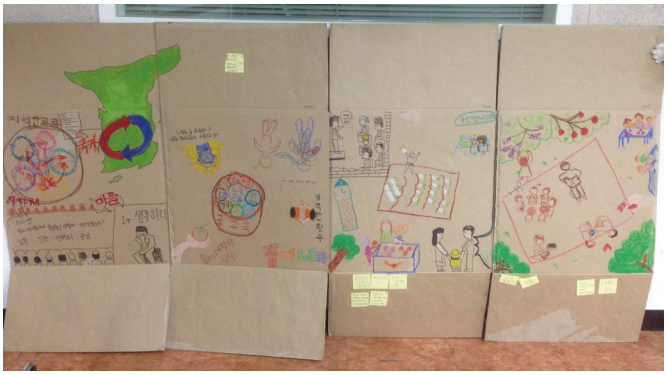
'소셜픽션 워크숍 2'에서는 소셜픽션 워크숍 1을 통해서 도출된 평가 기준, 해야 할 일 중 조별로 더 논의가 필요하거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했다. 제도·문화·기술·기타 등의 분야로 세분화해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그림 1-5] 소셜픽션 워크숍 2의 논의 주제

4) 결과물의 구현

소셜픽션의 결과물은 미래상상·변화상상·평가 기준·해야 할 일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상그림판에 구현했다. 참가자들이 총 네 장의 그림(또는 글)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그림 1-6] 소셜픽션 참가자들의 결과물 (예시)

① 미래상상 :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본다.

② 변화상상 : 미래상상을 통해 우리가 상상한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려본다.

③ 평가 기준 : 변화한 사회에서 우리가 상상한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그려본다.

④ 해야 할 일 : 상상한 내용과 평가 기준을 고려해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려본다.

3장

연구보고서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1. 연구 방법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은 60여 명의 청년과 함께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본 연구보고서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는 소셜픽션 콘퍼런스의 토론 및 워크숍 결과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발언 내용을 충실하게 참조하면서, 당사자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반영해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을 담고 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첫째,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영역별 20대 참여자들의 사회적 열망을 도출해 특성별로 분류했다. 둘째, 분류한 특성들을 범주화해, 청년들의 사회적 상상으로부터 이상적인 사회 비전을 그려냈다. 셋째, 20대 참여자의 현실과 이상적인 사회 비전을 비교한 후 그 차이를 분석, 문제점을 찾았다. 넷째,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수립했다.

이와 같은 과정과 더불어 연구팀은 영역별(배움, 일, 복지, 민주주의) 전문가 자문, 활동가 인터뷰, 문헌조사를 병행했다. 또한, 희망제작소 내부 자문위원으로부터도 자문을 구했다.[6] 자문 및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자문 및 인터뷰	분야
남경아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단 단장)	배움
장희숙 (격월간민들레 편집장) 외	배움

6. 희망제작소 내부 자문위원은 소셜픽션 콘퍼런스 콘텐츠연구팀 팀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각 복지 및 민주주의 영역을 담당했고, 영역별 사전연구 및 외부 전문가 인터뷰, 워크숍 상상확장판 질문 작성,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및 핵심과제 도출 정리 등을 실행했다.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 교육팀장)	배움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일자리·기술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청년·일자리·복지
여진 (그리다협동조합 활동가·어슬렁정거장 매니저)	복지
인은숙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복지
김승수 (똑똑도서관 관장)	민주주의
서정원 (서울대부모학생조합 맘인스누(Mom in SNU))	민주주의
유시주 (희망제작소 기획이사)	민주주의
임은영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민주주의

* 분야별 가나다순

2. 주요 내용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100년, 대한민국의 상상'은 교육(배움)·일자리(노동)·복지·민주주의·통일·환경 등 모두 여섯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는 '청년정책의 부재'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통일과 환경 분야는 제외하고 교육(배움), 일자리(노동), 복지, 민주주의의 네 가지 분야에 집중했다. 청년들이 소셜픽션 워크숍을 통해서 논의한 미래의 배움, 미래의 일자리, 미래의 복지,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을 본문의 각 파트(Part 2~Part 5)의 1장에서 분석했고, 각 파트의 2장에서는 청년들이 상상한 미래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희망제작소의 제언을 정리하였다. 20대들이 진단한 영역별 현재의 모습과 이들이 상상한 30년 후 미래의 모습,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20대들이 상상한 30년 후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

구분	분석틀	현재	미래	대안
배움	주체	교사	교사 너머, 학생 참여권	부모와 이웃
	장소	학교 내 교육, 사교육	학교 밖	마을
	목적	교과 중심의 스펙 쌓기	살면서 필요한 지식	관계성, 삶의 기술

일자리	특성	경직, 불안정	유연성, 안정	노동시간 단축, 유연화
	문화	수직적, 존중 없음	수평적, 존중(귀천 없음)	노동권 교육, 노동자 경영 참여,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
	목적	소득 우선(그마저 불안정), 개인 시간 없음	소득 이외의 가치, 행복	자아실현, 취미
복지	주체	국가: 선별주의적, 불공정, 관주도 전달체계, 가족책임주의	국가: 보편주의적 기본권 / 공동체: 자립적, 유연성, 비례적	지방분권화, 공공·민간 통합체계, 탈가족주의
	장소	시설복지 중심	지역사회, 마을	재가복지, 일-돌봄 시민모델, 세대통합형
	목적	경제적·고정적 욕구, 일회적·시혜적(수동적)	개인주의, 다양성, 유연성, 예방적·투자적(능동적)	지속가능성, 다기능적
민주주의	대표성	보수·엘리트 중심, 관료적, 권위주의	시민사회, 숙의적, 생활정치	공공부조 확대, 투표제 보완, 피선거권제한 보완
	책임성	87년 민주화 이후 위기, 정부 무능, 부패	생애주기별 정치인(10대부터)	조직화, 정치세력화 네트워킹
	목적	소극적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자유, 평등, 시민성 회복	공론장, 토론문화

3. 특성 및 과제

본 연구는 청년들의 사회적 상상력과 사회적 열망 사례를 대상으로 가상의 니즈를 체크하고 각각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솔루션 매트릭스를 도출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거나 실행되었음에도, 20대 참여자들의 선행지식이 부족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정책이나 실험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표명된 청년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을 읽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각 파트의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제언'은 청년 당사자의 핵심 의제가 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오로지 긍정적인 미래상상에 따라 가정의 틀을 세우고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칫 연구 결과가 추상화될 수 있다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다. 또한, 현실적 제약조건을 넘어선 사회적 상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셜픽션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시도로서 청년들의 사회적 상상을 분석하고, 그 사회적 상상력을 실현하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 연구에 대한 토대연구로서 청년의 목소리와 상상력을 담아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업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역별로 제안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및 전략 연구라는 후속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소셜픽션의 연구 방법론과 분석 결과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논의와 평가 역시 별도의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Part 2
배움

1장 청년, 어떤 배움을 원하는가
2장 미래 배움을 위한 제언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20대 청년들은 교육이 권리가 아닌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현재 짊어지고 있는 '교육의 의무'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졸업이라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 받아온 입시교육, 특히 소위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초점을 맞춰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2015년을 사는 20대가 상상하는 교육은 그들이 누리고 싶은 일상, 곧 삶의 모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부모 또는 이웃들과 동네에서, 나를 알고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사는 방법을 익히고 싶어 했다. 또한, 사회에서 부여받은 역할과 무관하게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제약 없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배움에 대한 욕구는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보다는 자신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삶의 지혜를 실질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움 영역에서는 크게 세 부류의 정책을 제언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과 이웃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자는 취지에서 의무 육아휴직제,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와 아동수당제를 제시했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구조적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정책을 재조직해야 함을 강조했고, 학습자에겐 참여가 곧 배움이라는 전제하에 학생자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교육은 가정과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므로, 학교의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학교 밖 교육기관 예산 지원과 학교 밖 학습의 수업시수 인정 등 학교 밖 교육의 인정을 제언했다.

1장

청년, 어떤 배움을 원하는가

1. 청년의 교육 인식

1) 교육은 권리가 아닌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의무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말하며, 여기서 의무를 지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 제12조),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아동의 보호자(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말한다. 즉, 교육의 의무를 지는 자는 정부와 부모(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를 일컫는다.

하지만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만난 2015년의 20대들은 정부나 부모가 아닌 피교육자였던 본인들이 교육의 의무를 지고 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을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아닌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기에,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그리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수행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학력에 따라 임금 격차가 심한 한국의 노동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의무적으로 배워야하는 것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썼다는 게… 저는 질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나, 획일적인 교육이 교육의 본질과 떨어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상확장판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저것도 다 중요한 회의감이… 그런데 또 현재 의무교육의 폐해 때문이기도 하고.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
>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따라서 짊어져야 하는 의무인 교육이 가능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들이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할 필요도 있다고 여기는 의무교육의 범위는 고등학교까지였다. 법적인 의무교육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인 것과는 무관하게 청년들은 사회 관념상 고등학교 졸업까지를 의무교육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초중고까지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런데 대학까지 가서 또 한 번 리바이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2) 대한민국의 대학은 의무 교육기관

또한 20대는 교육을 구직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자 의무사항이라 생각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의무교육이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은, 대한민국 사회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을 최소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진입 장벽을 낮춰달라는 요구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가 체감하는 사실상의 의무교육 범위는 대학교 졸업이며, 이는 국민의 권리로서의 교육과는 무관하다.

◎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면 학벌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 것이다. 가방끈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지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 배움은 나를 위한 건데 학교과정에서는 내가 실수한 게 계속 남는다. 지금은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교육과정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개선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최소한 배움 내에서의 평가는 배우는 대상 자체를 위한 평가라기보다는 선발을 위한 평가가 좀 많은 것 같다. 30년 뒤에는 온전히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만(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배움의 틀 내에서만큼은.

◎ 청년은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라서 인증이 필요하잖아요.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그런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같고… 저는 현실에 부딪혀서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요.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그런데도 청년들이 대학에, 그것도 서울 및 수도권 내 4년제 대학에 가고자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근로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고졸과 같은 중간학력을 가진 근로

자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 근로자보다 29%나 임금을 더 받는다. 반면 중간학력을 가진 근로자는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근로자보다 임금을 47%나 적게 받는다. 이런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각각 8위, 10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하다.

문제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20여 년 동안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저학력과 중간학력 간 임금 격차는 2012년과 같은 29%였고, 고학력과 중간학력 간 임금 격차는 43%였다.(김기찬, 2015.)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교육받는다. 좋은 일자리를 급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소위 첫 직장이 끝까지 가는, '한번 비정규직은 끝까지 비정규직인 사회'(고동우, 2007.)다. 오랫동안 학벌이 계층상승의 사다리였던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또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학교라는 동아줄을 붙잡는다.

이는 20대들이 표현하는 대학진학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도 연결된다. 청년들은 분명하게 대학이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수준 높은 학습이 필요할 때 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누구나 가기 때문에 남들에게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으며, 어떤 이는 대학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시간 보내러 가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조소까지 드러낸다.

◎ 고등학교 이후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 배움이 필요할 때
◎ 더 큰 배움, 더 수준 높은 교육,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 순수학문
◎ 학문이 미치게 재밌어!
◎ 학문이 필요한! 꼭 20대가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할 때
◎ 자신의 꿈(장래)을 파악하고 적성이 맞는지 확인 후 교육 이후 과정까지 기획된 사람들
◎ 대학은 말 그대로 원하는 적성이 있을 때 가야 합니다.
◎ 삶의 한 부분을 더 이롭게 하고자 궁금한 것을 더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확장하기 위해
◎ 교육 과정의 일부라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고 가면 좋다니까 그냥 간다.
◎ 대학에 가지 않으면, 나만 동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가고 있다.
◎ 학자, 전문가가 되기로 한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 대학 안 가도 사는 데 지장 없어야 한다. 대학은 지식의 보고다. 대학은 취업사관학교가 아니다. 지금의 대학은 기업이 이용하고 학생과 교수는 이에 복무한다.
◎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이 시간 때우러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확장판 '대학은 누가 이용하고 있을까?' 질문에 대한 응답

이에 반해 청년들은 현재 법적인 의무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등학교 과정 이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학 교육과 비교하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14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2001년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OECD 국가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

국가	한국	OECD 평균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	미국	독일	영국
단위 (%)	98	82	94	92	90	89	87	85

출처: 2014 Education at a Glance, OECD

2. '내'가 가장 중요한 교육

교육을 기획, 설계하는 주체와 수용하는 주체 사이에는 교육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을 구상할 때 같은 사안을 두고도 사람들은 입장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곤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개편이다.

1) '나 중심'의 기술을 원한다

◎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마이크로 칼리지
◎ MOOC, TED, 코세라, 칸 아카데미
◎ 뇌 기능 향상을 통한 교육의 속도와 지능 향상

- 출처: 박영숙 제롬 글렌 (2015), "유엔미래보고서 2045", 주요 교육 이슈 중

에드엑스를 필두로 코세라(Coursera), 유다시티(Udacity), 퓨처런(FutureLearn) 등 무크(MOOC 온라인 공개강의) 사이트에는 지금 전 세계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울란바토르에서 자란 몽골 소년 바투시 미안간바야(Battushig Myanganbayar)는 열다섯 살

때 몽골에서 인터넷으로 미국 MIT의 공학강좌를 수강해 만점을 받았다. 이 수업을 인터넷으로 수강한 학생은 약 15만 명에 달했으나, 만점을 받은 학생은 단 340명뿐이었다. 바투시는 이 성적을 바탕으로 MIT에 지원했고 입학허가를 받았다.

– 출처: 류현정 유진우, "몽골서도 MIT 강의 '접속'… 美 대학 절반이 사라진다", 『조선비즈』, 2014. 09.01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제공 및 참여 방식이 다양해지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정부와 각 교육기관은 발 빠르게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융 복합 기술, ICT(정보통신기술)와 '인간, 창조, 행복' 등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혁명이 도래해 사회 변화 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글로벌 트렌드와 부합하는 교육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현재 상황을 정의하고 있다.[7]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은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생활여건과 지역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온 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으로 구현될 예정이다.[8]

그런데 정부와 교육기관에서 기술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방식과 체계를 준비하는 노력과 별개로 2015년 소셜픽션에 참가한 20대 청년들은 자신들의 상상이 구현되려면 아래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A: TED라든가 굉장히 좋은 강의가 많은데, 나의 관심사에 맞는 자료 추출 기술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 B: 인터넷에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걸로 부족해. 토론이 필요해. 베이징이나 이런 데서 하면 다른 나라친구들과도 토론할 수 있게.
◎ C: JTBC '비정상회담'처럼 토의를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홀로그램처럼 떠서 같이 있는 것처럼 토의를 하는 것이지.
◎ A: 홀로그램도 좋고, 오프라인에서 같이 해도 좋고. 도서관 안에서만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3조 / '기술' 분야 '핵심과제도출' 대화 내용 중

7.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p.2.

8.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p.22.

〈교수법〉
◎ 교육자 : 잘 가르치고자 하는 노력, 피교육자에 대한 관심
◎ 피교육자 : 능동적인 자세
◎ '교육은 배움이다'

〈미디어〉
◎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함 (예) 칸아카데미, 거꾸로교육, 배움의공동체
◎ 지식 & 재능 공유

〈기타〉
◎ 듣는 마음
◎ 나누는 마음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4조 '기술' 분야 '핵심과제도출' 응답

청년세대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들은 최신의 ICT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대화 중 ICT 기반으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언급되고 있다), 교육의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서 기성세대처럼 기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다.

청년들은 단순히 기술을 중시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내 관심사 관련 자료 추출기술 등 '나'를 기준으로 기술을 이해함)를 보였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기술에의 적응과 숙련보다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한 교류에 방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2) 공부하기보다 배우고 싶은 청년세대

A: 공감하는 교육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교육시스템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B: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이 읽히는 것은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C: 교육이 그냥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제도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교육의 장은 필요한 것인지.
D: 교육과 공부는 따로 가야 한다. 공부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교육은 아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친구들이나 진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입시공부가 아니라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고 싶은 게 있을 때 가르쳐야 한다든가 개개인의 조건에 맞게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든가.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3조 대화 내용 중

교육, 공부, 학습(배움) 등은 대화 중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인데,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의 대화에서는 각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만의 문제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분명하게 구분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 [敎育]

◎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술이나 기능을 가르침.

공부 [工夫]

◎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힘.

학습 [學習] (배움)

◎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기술을 배워서 익힘. 또는 기능, 지식을 의식적으로 습득함.

출처: 포털사이트 DAUM 제공 "고려대한국어대사전"

학술적 정의와 별개로 앞의 대화에서 사용된 교육, 공부, 배움과 같은 단어의 의미와 사전적 정의를 비교해보면 각 단어의 쓰임이 추론 가능하다. 청년들은 그들이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공부'라고 부른다. 흔히 '주입식', '입시 위주'로 표현되는 높은 성적을 획득하기 위해 교과서 중심으로 암기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개개인이 배우기 위해서 국가 또는 기성세대에게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하며, '학습(배움)'은 배우는 주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청(소)년 세대가 자신의 동기에서 출발해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알고 체화하고자 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교육'은 상반된 얼굴을 지닌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학교, 입시 등을 포괄하는 교육제도로 '공부'를 시키는 악한 얼굴을, 다른 하나는 B의 의견에서처럼 그들의 판단에 따라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 '학습(배움)'은 얽혀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건 주로 후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들이 보기에 배우고 싶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이다.

기성세대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중시했다면, 청년세대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본인의 흥미와 관심사에 부응하는 교육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야만 배울 수 있고 배울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교사가 여럿을 모아두고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형태의 교육에 만

족하지 못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후부터는 소셜픽션에 참가한 20대들의 상상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바라는 배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어디서 누구와 배울 것인가

1) 동네에서 함께

지금의 20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에게서 1986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나, 1997년 IMF 구제금융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목걸이 열쇠[9]를 매고 다녔고,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구호가 무색하게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 벌어질 만큼, 외동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자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보급되면서, 현재의 20대의 절대다수가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아파트 키즈이기도 하다.

그런 20대가 상상하는 교육의 모습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동네와 가족, 이웃들로부터 시작된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의 결과물인 미래를 상상한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마주보거나 손을 붙잡고 있으며, 이런 활동들이 주로 자연에 둘러싸인 마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표 2-2] 학교가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10]

구분	응답 사례
공간	마을·모든 일상공동체에서·체험 삶의 현장·동네·자연에서

9. 2000년 출간된 황선미의 청소년 소설 "목걸이 열쇠"(시공주니어)의 제목이기도한 이 단어는 맞벌이 부부 아래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징한다.

10.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확장판 "학교가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정리.

사람	경험자와 어르신·마을 사람들에게 배워요·부모님과 주위 어른에게·애인·친구와 어린이에게·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생, 지식의 살아있는 교과서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지혜로운) 동네 어르신·부모의 자세, 태도·친구와의 경험·진짜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전문가, 장인에게 부탁·한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의 집, 직장·함께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방법	서로의 장점을 배운다·삶에서 느끼다·현장 체험·삶에서 느끼다·대화·경험·자신의 도전 경험·살아가면서 얻는 경험, 만난 인연 등 모든 것

A : 학교에서 배운 걸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가정과 학교의 교류랄까. 가족 교육, 학습교육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 아기, 엄마, 아빠가 있고, 말풍선으로 하고, 여기는 마을 공동체가 있는 거야. 육아 협동공동체처럼, 청년과 아이들 간의 교류도 있겠지. 마을 공동체에선.
B : 포도나 과일 만든 것을 부모나 아이들이 같이 파는 것.
C : 아이들하고 청년들과 마을 어른들이 무를 봅고, 같이 마을 가꾸기.
A : 체험교육이니까 부모님의 직장에 같이 따라가는 거야. 부모 직장 체험 교육.
B : 퇴근이 빨라졌다는 얘기를 그렸으면 좋겠다.
D : 시계탑 그리자.
B : 아이한테 어른이 배우는 느낌?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3조 조원들이 그림을 그리며 나눈 대화 중





[그림 2-1]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테이블 3,4조 미래상상 그림

2) 가르치는 사람 아닌 경청하는 사람이 필요

20대 청년세대가 원하는 교원의 역할과 태도는 명확하다.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나 '전

문성'은 강조되지 않았다. 배우고자 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혹 그가 부족해도 차별하지 않으며, 애정으로 대할 수 있는 인격을 지닌 사람을 원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친구, 부모, 현명한 지역 어르신에게 배우고 싶다'는 의견과 결을 같이하며, 특정 분야에 대한 배움의 의지가 확고해지고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가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청년들은 일상에서 상시적으로 자신과 교류하며 배움을 독려해줄 교원과 일정한 수준에 다다랐을 때 수준 높은 지식을 가르칠 교원을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전자의 교원이 더욱 절실하지만 지금은 후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교원이 비중이 높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진학사가 고교생 5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할 만하다. 이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는 교사가 좋다'는 응답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다'는 응답보다 두 배가량 더 많았다.(김용래, 2015.) 청(소)년들은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존경하는 어른에게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학생의 의견을 평등하게 들어주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공감능력,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애심·배우겠다는 마음·지도력과 인성·존중하는 자세·듣는 귀·깊은 마음·자신만이 옳다는 생각보다 학생의 관점을 존중할 줄 알아야·가르치는 데 있어 아랫사람 손윗사람이 아닌 자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인격·사람을 좋아함. 아주 많이·나도 상대에게 배울 수 있다는 마음·가르친다기보다 나의 지식, 지혜를 공유한다는 마음가짐·누구나 스승이다·shut up & listen의 태도·잘 가르치고자 하는 노력·피교육자에 대한 관심·저는 자부심을 가진 전문성이 있는 교사와 선배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전문가에 한한) 지식·전문성·가르칠 수 있는 지식*
>
>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확장판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질문에 대한 응답 중*

4. 언제든지 누구나 배운다

대한민국의 기간학제(基幹學制)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6·3·3·4제다. 해방 직후인 미 군정기에는 6·6·4제와 6·3·3제를 병행하기도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1951년 지금의 학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부분적인 제도의 수정 보완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간학제에서 수

용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를 위해 설립된 비정규학교를 통해, 학력인정 검정고시라는 검정 절차를 거쳐 정규 학력을 인정하기도 한다.[11]

현행 학제는 10대와 20대 초반의 학생을 주 대상으로 삼아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이 연령대의 국민을 교육의 주 대상자로 삼는다. 그러나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만난 20대 청년들은 누구나 배우고 싶다면 나이를 포함해 어떠한 제약 없이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 *공부하고 싶은 범위 전부! (대학원, 유학 포함)·원하는 누구나 원하는 모든 것·요람에서 무덤까지·배우고 싶다면 언제나·평생·사형수에게도 해야 한다·원하는 사람 모두에게·필요한 모든 곳에·모든 사람. '배움=삶'이므로·배우고 또 배우고^^싶게 만드는 사회·나이와 상관없는 배움·배움에서 도출되는 결과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
> *–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확장판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까?" 질문에 대한 응답*

5.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현행 교육에 대한 불만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8.0%가 '잘하고 있다(수+우)', 34.2%가 '잘 못하고 있다(양+가)', 42.7%가 '보통(미)'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두 배 이상 많다. (한국교육개발원, 2014: pp.34~35.) 같은 설문조사에서 던진 "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46.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 2014: pp.36~37.)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청년세대가 현재의 수업내용 및 방법에 가진 불만을 말해주는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해당 설문 조사 응답자들이 기대하는 학교 수업내용 및 방법과 청년세대가 기대하는 그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13년에 실시한 동일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에 대

11. 위키피디아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 검색결과(ko.wikipedia/wiki/대한민국의_교육_제도) 참고.

해 유사한 응답 결과가 나온 점에 비추어볼 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현재 학교 교육의 수업내용 및 방법의 개선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나, 너, 사회를 알고 싶다

> *"나는 곧 18세가 된다, 하지만 세금, 집세, 보험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시를 분석하는 데는 능하다. 그것도 4개국 언어(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
> *독일 쾰른의 한 김나지움(인문계 중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17세 여학생이 학교 교육을 비판하는 글 두 문장을 트위터에 올린 뒤 격렬한 교육 논쟁이 독일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 학교에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산지식을 배울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
> *출처: 남정호, "17세 소녀의 '두 문장', 독일을 달구다", 『시사인』, 2015.01.30*

20대 청년들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할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가려면 알아야 하는 산지식이다. 그들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이야말로 누구나 교육받아야 하는 항목들이라 여기고, 이를 위한 교육을 중점에 둘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표 2-3] 꼭 배워야 하는 게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12]

구분	응답 사례
자아	내 인생의 나만의 철학을 세우는 것·꿈을 찾고 이루는 법·나, 자신 알기·왜 사는가? 삶의 이유·스스로 생각하는 법·자기 삶에서 주인 되기·나를 찾는 법·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 횟수
타인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법·나와 너·공동체적 삶·사랑·관계·연대 정신·갈등을 해결하는 법·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성적인 것 이외의 감정 그대로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서로를 사랑을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이유·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서로 협력한 횟수·서로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공유한 시간

12. 소셜픽션 콘퍼런스 '교육' 상상확장판 "꼭 배워야 하는 게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질문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정리.

사회	역사와 도덕·인권, 동물권, 생명권·민주주의·노동3권·자유, 사랑, 평등과 같은 개념의 철학적 고려·역사(미래를 그리는 밑바탕이니까)·노동법, 차별금지법·공교육 안에 노동, 인권, 공감, 역사, 토론, 민주주의, 성과 사랑 등의 교과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2장

미래 배움을 위한 제언

미래 배움을 위한 제언에서는 0세에서 20세 사이 연령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정책 사례를 주로 제시했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 청년들은 본인이 경험했고 일과 중 많은 시간을 교육기관에서 머무르는 0세에서 20세까지의 배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상했고, 그중 상당수가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기관인 학교와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사례로 제시한 것은 청년들이 상상한 내용 중 다수가 이미 현실에서 정책으로 실험되거나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 정착하거나 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실행되거나 실행이 확정된 경우가 많다) 혹은 자신이 이런 정책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미 존재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상상이라는 이름을 빌려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들의 상상은 이와 같은 정책 사례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일반화되길 바란다는 희망의 반영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청년들의 상상은 자신이 배움을 나누는 주체가 되거나 누군가와 함께 배움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모습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1. 부모를 돌려주자

청년들이 말하는 배움의 장면에는 늘 부모가 있었다. 부모와 동네 텃밭에서 무를 생산하고 판매하며 경제를 배우고, 마을을 함께 가꾸고, 부모의 직장에 찾아가는 진로 체험교육을 하고 싶어 했다.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는 장면도 꿈꿨다.[1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은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과 환경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은 최우선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 육아휴직의 보장

13. 앞의 그림 〈2-1〉 참고

① 의무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육아 휴직자 수는 76,833명으로 매년 증가세이나 여전히 출산 전후 휴가자 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률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근무지에서는 현행법보다 상사와 동료의 '눈치법'이 더 가까운 현실을 방증한다.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을 구하는 일 등 과거의 기업에는 낯선 대비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보험성' 조항까지 법에 명시돼 있지만,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안승찬, 2013.)

하지만 최근 육아휴직을 회사 내 규정으로 보장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롯데그룹은 2012년 9월, 국내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육아휴직 의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여성 직원이 출산을 하면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여기에 출산휴가 3개월을 더하면 총 1년 3개월간 '의무 휴직'이 가능하다.(유성열, 2014.)

의무 육아휴직제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롯데하이마트다. 롯데가 인수하기 전인 2011년 하이마트 직원 중 아이를 출산한 여성 직원은 65명이었고, 이중 절반 정도인 35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55%다. 하지만 하이마트가 롯데와 합병한 후 변화가 생겼다. 2012년 출산 전후 휴가자 대비 육아휴직 비율은 89%로 높아졌고, 2013년에는 120%로 상승했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 직원 전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20%의 직원이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11년 기준 64.3%로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3명 중 1명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평균치와 비교하면 롯데하이마트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안승찬, 2013.)

이를 한 대기업에 국한된 사례로 치부하기보다, 특정 법률을 기업이 제도화해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법률의 시행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KT는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 기준의 두 배인 최장 2년으로 늘리고, 자녀 취학 전까지는 주3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본인의 근무지까지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국 20여 곳에 '스마트워킹센터'를 설치했다. KT 측은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99%이고, 이 중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비율 역시 99%

에 달한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 2014.) KT의 사례 역시 일과 가정은 양립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할 때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양육은 오롯이 가정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여성에게 책임이 편중되어 맡겨져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육아휴직 성별 이용인원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73,412명인데 비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421명에 그쳤다. 그나마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이 매년 많이 증가해 현재의 3.3~4.5%에 도달한 것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노르웨이는 1993년 부모 육아휴직제도에 남성할당제를 시행했다.(김호정, 2014.) 부부의 총 육아휴직 기간 중 남편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14주다. 14주 이상 쓰지 않으면 아내의 육아휴직까지 몰수한다. 이러다 보니 노르웨이의 남성 육아휴직률은 80%에 달한다. 이웃나라인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실시했다. 남성 60일, 여성 60일에 360일을 더해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일이 총 480일이다. 남성이 쉬지 않을 경우 부부의 총 휴직 가능일이 줄어들고, 남성은 아기가 태어나면 10일의 추가 연가를 받는다.

이에 비해 한국은 육아휴직 혜택이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육아휴직 동안 보장받는 비용이 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40%로 정해져 있다. 육아휴직 사용 시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도 육아휴직 사용의 장애요인 중 하나다. (위키트리, 2014.)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제안은 양성이 평등하게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뿐만 아니라, 온 마을과 온 국가가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의 실마리라 할 수 있다.

2) 양육수당제 개정의 필요성

유럽의 선진적 아동정책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제'다. 이 때문에 곧잘 아동수당제가 유럽 일부 나라에만 도입된 것으로 오해되지만, 현재 아동수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 90개국에 달한다. 특히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아동수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1926년 최초로 아동수당제를 도입한 이래 주로 1930~50년대에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제 도입이 이뤄졌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관할로 시행됐다. 만 0살은 월 40만6천 원, 만 1살은 35만7천 원, 만 2살은 29만5천

원, 만 3~5살은 22만 원을 어린이집 비용으로 제공받는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에는 만 0살은 월 20만 원, 만 1~2살은 15만 원, 만 3~5살은 10만 원이 지급된다.[14]

다른 나라의 아동수당은 얼마일까. 1932년부터 아동수당제를 도입한 프랑스를 예로 들면, 두 자녀 이상을 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가 만 20살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또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수당도 더 많아진다. 2010년 기준으로, 한 달에 124.54유로(약 15만 원)를 받고,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159.57유로(약 19만 원)를 추가로 받는다. 또한, 자녀가 만 11살이 되면 한 달에 35.03유로(약 4만 원)를 추가로 받고, 만 16살이 넘으면 한 달에 62.27유로(약 7만5천 원)가 또 추가된다.(송채경화, 2015.)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 제도는 양육수당제로,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제와는 차이가 있다. 아동수당제의 경우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아이 한 명당 보육비용을 부모에게 지원하지만,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제는 지원금을 양육기관에 지급하며 가내 양육의 경우 비용이 차등 지급된다. 두 제도에서 드러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자녀 돌봄과 교육에서 국가와 사회가 얼마나 공동보육의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 시점을 기점으로, 아이의 취학 이전에는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이후에는 학교에 전가하는 것을 기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부모가 자녀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보내면 자녀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해 아동수당제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만 16~20세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함에서 학교는 최소한의 역할을 할 뿐이며, 취학 자녀의 교육에도 여전히 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하기에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보다 GNP가 훨씬 낮은 몽골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를 비교적 잘 갖췄다. 보육료 지원 정책의 결정과 실행은 경제력, 즉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과 안정화에 힘쓰는 한 사회의 문화와 합의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3) 총론

지금까지 제안한 정책은 주로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 영유아 돌봄 영역은 아동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 대상 정책 영역 중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축에 속한다. 만 7~12세에 해당하는 어린이 정책은 더 열악한 상황이며, 해당 정책의 예산마저 아이들의 교육·인성 함양에 편중되어 있다.(송채경화, 2015.) 그럼에도 영유아 돌봄에 관한 정책을 제안

14.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영유아편' 참고.

한 것은 그나마 예산 배정과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영역이고, 현재의 정책은 만 7세 이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와 아동의 보호자인 가족에게 맡기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 확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는 외벌이로는 먹고살 수 없는 사회 경제구조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청년들은 아동기에 부모와 이웃의 부재를 느꼈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한 배움을 지향했다. 배움 그 자체에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배움을 위한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회가 기여해야 한다. 교육혁신의 수레바퀴와 사회혁신의 수레바퀴는 함께 굴러야 한다.

2. 배움의 주도권을 배우는 이에게

1) 학습자 중심 교육정책

빅 픽처 러닝(Bic Picture Learning)은 1995년 교육이론가 엘리엇 와쇼(Elliot Washor)와 데니스 리트키(Dennis Littky)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데니스와 엘리엇은 30년간의 공립 고등학교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교육에 집중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주 정부에 제안했고, 이 제안이 성사되어 빅 픽처 스쿨(Big Picture School)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빅 픽처 러닝의 사명은 '거시적 차원에서 한 나라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한 학생의 교육에도 집중하는 것(the education of a nation, one student at a time)'이다. 개인에게 맞춘 학습 환경을 만들어 미국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게 이들의 비전이다.

빅 픽처 러닝의 교육이 기존의 교육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한 번에 한 학생을 교육하는 개인 맞춤 교육이라는 점이다. 빅 픽처 러닝은 한 학생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도와준다. 각 학생의 작업은 개인 학습 계획에 기록되는데, 이 학습 계획은 학생, 부모, 어드바이저, 멘토가 함께하는 학습팀에서 작성된다. 한 반은 15명 규모로 제한하고, 다년간 한 명의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게 한다. 또한, 학생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 실용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생활 능력과 사고력을 기르게 한다는 점이 빅 픽처 러닝의 교육 모델이 갖는 큰 장점이다.

빅 픽처 러닝 교육의 여러 요소는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디자인된다. 첫째, 배움은 각 학생의 흥미와 목표에 근거해야 한다. 둘째, 한 학생의 커리큘럼은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

이나 장소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한 학생의 능력은 그 학생의 작업의 질에 따라 엄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빅 픽처 러닝은 개인의 흥미에 기반을 둔 실제 현실 세계에서의 배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는 전문가 멘토가 함께하게 된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각 학생에게 맞춘 개인화된 커리큘럼이 존재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인턴십을 통해 구현되는데, 시청부터 지역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판매점까지, 학생들은 직접 인턴십을 경험하고 자신이 배우기로 선택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간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학생들이 어른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어른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며, 자신이 신뢰하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고, 그 전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로드 아일랜드에 빅 픽처 스쿨이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 5개국에 131개의 빅 픽처 스쿨이 세워졌을 정도로 이들의 교육 모델은 확산했다. 또한, 미국에 있는 67개 빅 픽처 스쿨의 전체 졸업률은 92%로 이는 미 전국의 학교 졸업률 66%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빅 픽처 스쿨이 이 같은 성과를 내는 한편,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에서는 빅 픽처 러닝의 교육 모델을 활용한 학교들이 생겨났다. 빅 픽처 러닝의 교육 모델이 탄생한 배경 원인은 어느 지역에나 존재하며, 해결방안 역시 복제 가능한 것이다.(이성은, 2014.)

2)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에서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통해 조직을 구성하고, 교육적 활동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을 키우고, 고유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련의 활동이다. 학교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많은 학생이 학급규칙 제정, 학급 부서 조직과 운영 등 초보적인 수준의 자치활동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학생이 자치활동을 통해 얻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학 진학과 학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입시와 직결되지 않는 학생자치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미 학생회 운영위원의 학교운영위 배석, 학교장과 학생회 운영위원 간담회 상설 운영, 학생회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학생회 주관 공개포럼과 공청회 개최 활성화, 인근 학교 학생회 간 연계와 협력, 학생 스스로 만드는 학생생활협약과 학교자치법정 운영 등 다양한 제안이 이뤄졌으나 바뀌지 않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치활동의 현실화는 더디기만 하다.(한유경 외, 2012, pp.146~147.)

이는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2013년 현재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가 단위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다. 청소년특별회의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역회의가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 청소년 수련시설마다 설치, 운영되고 있다.(최창욱 외, 2013: pp.10~20.) 하지만 이 또한 시간부족,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참여기구 활동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의견반영 미비 등이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참여 청소년들은 학업 병행으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위원회 활동을 대학진학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최창욱 외, 2013, pp.80~82.)

주로 각 시도 교육청의 인권조례를 중심으로 학생 자치의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의 자치 체감도를 높이려면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에 구체적으로 참여와 자치를 보장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는 17조에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만 언급되어 있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12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13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학생자치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입시 위주의 학교 구조에서 학생의 자치 참여권을 보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에 참고할만한 사례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있다. 은평구는 주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각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시했다.[15] 각 위원회 중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다. 은평구에서는 구정 주요업무 결재 시 주민참여위원회 협의를 의무화(2012.03)하고, 관급공사 시 주민참여 의무화를 시행(2013.02)했다.[16] 말로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실행하는 주요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학생참여가 갖는 함의와 가치가 진정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학생자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초중등교육법 17조에 따른 시행령의 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

3) 총론

배움의 주도권을 학습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주제와 방식 등을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과제와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제반환경 구성에 학습자 스스로가 참여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전자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낸 사례로 '빅 픽처

15.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웹페이지(yesan.ep.go.kr),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페이지 참고

16.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웹페이지(yesan.ep.go.kr), '주민참여예산제란?' 페이지 참고

러닝'을 소개했고, 후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자치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했다. 배움의 주도권을 배우는 자 스스로가 갖게 하는 과제는 해법의 부족이 아닌 의지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3. 학교의 경계를 넘어

헌법에는 교육의 권리와 의무가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곧 학교를 가야할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일까. 현재는 아동·청소년기의 국민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 외엔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학력인정 검정고시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한 아이가 배우는 모든 것을 학교가 제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되어 왔다. 국가는 학교 밖 사회와 학교 안 아이를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

1) 학교와 마을 잇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더는 부모와 학교만으로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배움을 충족시킬 수 없다. 최근 마을 곳곳을 배움터로 만들고 마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배움의 대상이 되는 마을교육공동체(시흥저널, 2015.)를 꿈꾸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런 생각의 반영이다.

이중 경기 시흥시의 사례가 눈여겨볼 만하다. 시흥시는 73개 학교에 230억 원의 교육 예산을 쓰는데, 무상급식비를 제외하면 158억 원 정도다. 시흥시교육지원청은 이 교육 예산으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학교와 마을에 필요한 지역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을 집적하고 공급하는 일을 한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도내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오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했고, 2012년 화성시와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 2014년 성남시와 성남형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에서 공교육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3대 7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한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시 교육 예산의 용처는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흥시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모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콘텐츠 중심'이라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가 단순 매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시흥시 내에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 단체의 프로그램을 수집하여 교사들이 중심이 된 교육혁신연구회가 이 프로

그램을 검토하도록 하고, 지역 단체와 사회적기업들은 이 의견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행정 편의를 위해 교사가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만 하면 행정 절차와 비용은 센터가 담당한다.(조현경, 2015.)

창의체험학교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이다. 창의체험학교는 시흥시청 산하 부서별로 시 공무원과 현직 교사가 협업해 정식 수업 교과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학교와 이어주는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가 통합하여 관리한다.(홍용덕, 2015.)

교육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아이들의 배움이 지역과 사회로 확장되려면,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이 마을의 주민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럴 때 학교와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유용하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와 지역이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연결되면,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배움이 현실 사회와 이어지고 확산한다.

2) 학교 밖 교육의 인정

① 학교 밖 교육기관 예산 지원

덴마크는 취학 의무는 없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교육의 의무만 존재하는 나라다. 19세기 중반에 제정된 헌법에 교육을 반드시 학교에서만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교교육법 제33조에는 '가정학습을 받는 아이들은 학교 교육에 참가하지 않아도 좋다'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다.(송순재, 2010, p.153.) 우리나라도 초중등교육법 60조에서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각종 학교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보다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의 범위가 더 넓다.

덴마크의 자유학교는 한국의 사립학교보다는 대안학교에 가깝다. 덴마크의 공립기초학교인 폴케스콜레(folkeskole)에 대응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자유학교는 사립학교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유학교의 전반적인 활동을 감사하는 일은 학부모가 담당하고 학부모회는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시행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또한, 아이들이 공립학교 정도의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자유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학교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다. 지역 행정당국은 사립학교와 자유학교 운영에 관여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초중등교육법 6조)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자유학교 전체 예산 중 70%는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물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고, 공립학교와 자유학교의 균형을 잡기 위해 별도의 보조금 산정 방법을 택하고 있기는 하다.(송순재, 2010, pp.161~162.) 하지만 학부모의 학교(공교육제도)로부

터의 자유를 국가가 공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심히 살펴볼만 하다. 또한, 홈스쿨링 등의 형태로 교육하면서도 학부모는 일정한 조건 아래 국가에 학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국가는 학생 개개인에게 학비의 75% 정도를 지원한다.(송순재, 2010, pp.161~162.)

카를 크리스티안 에기디우스 자유학교협회 국제위원은 정부가 필수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1855년 국회 논의 내용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그 내용인즉 시민의 문화적,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교육이라면 어떤 형태이든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국가는 특정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관여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EBS, 2013, 인터뷰 중.)

② 학교 밖 학습의 수업일수 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학생은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각 학년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데, 수업일수는 단위 학교가 관할청에 보고해야 조정할 수 있다. 학생이 아닌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교장이 수업시수의 선택과 조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수업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학습부진아 정도만 가능하다(시행령 제54조).

최근 교육부의 중점사업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오디세이 학교와 같이 학교 테두리 안에서 잠시 기존 교육과정과 거리를 두고 본인이 자유롭게 배우고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잠시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롭게 자신과 주변 관계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

덴마크의 자유중등학교(Efterskole, 영어로 afterschool로 번역한다)는 학생에게 학교 밖 학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자유중등학교는 우리나라의 중2부터 고1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형 자유학교로, 공립학교나 자유학교를 졸업, 혹은 졸업하기 직전인 8~10학년 학생들이 선택해 입학할 수 있는 1년 교육 과정이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에 다닌 지역 학교에 싫증이 나기도 하고, 새롭게 색다른 환경을 경험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이때 자유중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미술,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학교 공부와 접목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1년 간 부모를 떠나 지내다 보면 좀 더 성숙해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한다. 또한, 자유중등학교에서는 지역 공립학교와 똑같은 과목을 공부할 수도 있고,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이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제약이 없다는 뜻이다.(송순재, 2010, p.118.) 이곳 역시 정부가 운영비의 약 50%를 지원한다.(오연호, 2014, p.194.)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자유중등학교와 비슷한 구조의 꿈의학교를 추진할 예정이다. 꿈의학교에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참가하되,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기획·운영하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학교다. 방과 후, 계절형, 쉼표형, 혼합형 등 운영방식에 따라 네 가지 모델을 시도할 계획으로, 2015년에는 50개 내외를 시범 운영한다.(경기도교육청, 2015.)

쉼표형 꿈의학교 모델에 가까운 국내 사례로는 마을엔문화예술학교의 '한 시간 학교'가 있다. 마을엔문화예술학교는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마을엔카페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마을엔카페는 대조동 꿈나무도서관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꿈꾸며 만든 곳으로 마을엔도서관의 거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공동체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다 심리치료를 접하게 되었고, 함께 안고 있는 아픔을 예술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시작한 사업이 마을엔문화예술학교다.

마을엔문화예술학교가 만든 또 다른 변화로는 한 시간 학교를 얘기할 수 있다. 한 시간 학교는 마을엔문화예술학교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학교 안에 있지만,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십대들이다. 대부분 가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깨워줄 사람도 없고, 함께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도 없는 청소년이다. 예술을 통한 치유의 확장을 고민하던 차, 마침 은평교육복지센터의 중개로 학교의 허락하에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마을엔문화예술학교가 품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기간을 아이들의 출석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은평교육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의 하나로 가정의 경제적·문화적 결핍으로 인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의 중심기관인 서울 내 16개 지역교육복지센터 중 하나다.

십대들은 가기 싫은 학교 대신 동네 공방의 '한 시간 학교'에 간다. 처음엔 아이들을 집까지 찾아가 깨워서 데려와야 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내 공방에서의 예술 활동에 재미를 붙여 학교 대신 계속 다니고 싶어 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한다. 공방에서의 작업을 통해 새롭게 공예에 재능을 발견한 친구도 있고, 그곳에서 만든 작품을 아트마켓에서 팔아 용돈을 버는 친구도 있다고 한다. 마을엔문화예술학교는 장기적으로 탈학교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공간 '작공'에서 '한 시간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공방의 일을 배우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가리&이소연, 2014.)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학교 외의 장소에서 배움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좀 더 테두리를 넓혀 지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사례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3) 총론

가정도 학교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배움을 위해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능한 많은 자원이 열려있고 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완해가며 성장하는 것 역시 학습이다. 하지만 이 또한 누군가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서두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추출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체와 이들이 만든 커리큘럼이 학생에게 적합한지 판단하고 보완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교사를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살펴봤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조직은 제공자와 수요자 모두의 만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은평교육복지센터가 은평 마을엔문화예술학교와 학교 사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사례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국가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학교 밖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의 자유학교 사례는 교육의 의무가 곧 취학의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과 학부모가 학교로부터 자유롭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파격을 보여주었다. 또한, 은평 마을엔문화예술학교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역에서 품은 사례이다. 이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Part 3
일자리

1장 청년, 어떤 일자리를 상상하는가
2장 미래 일자리를 위한 제언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여한 청년들은 미래 일자리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① 존중받는 일자리 ② 여유 있는 일자리 ③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일자리 ④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이다. 임금과 고용보장뿐 아니라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고, 자신을 위해 여유 시간을 찾을 수 있으며, 안심하고 회사를 옮길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일터에서 구현하기를 소망한 것이다.

이런 상상이 구현되려면 우선 ① 노동권 교육 강화 ② 삶의 안정성 확보 ③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의 균형 ④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⑤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의식이 달라져야 하며, 모든 이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 시간을 설계할 여지가 커져야 하며, 노동자와 사회의 공감도가 높아져야 한다. 노동자가 더 많은 결정권과 책임을 갖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일에 도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북유럽 사례에서 보듯이 안정된 실업급여제도와 연금제도, 적극적인 노동시장개입 정책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생활임금제 등 최저소득 상향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르웨이의 '일-돌봄 시민모델(Worker-Carer)' 처럼 일과 돌봄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스웨덴의 '민중의 집'과 노동자 교육협회의 활동, 지역사회복지와 노동조합의 연계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 노동자와 지역사회주민이 만나고 연계 고리를 만들어가며 신뢰를 쌓아야 노동조합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이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례처럼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때 더 책임 있는 노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노동자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1장

청년, 어떤 일자리를 상상하는가

1. 존중받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고용안정'과 '임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100년, 대한민국의 상상'에 참가한 20대 청년들의 생각은 달랐다. 물론 '생존할 수 있는 소득'은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들의 상상과 토론 속에서 적절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더라도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의견을 읽을 수 있었다. "모든 노동,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직업 간, 노동 간, 직장 간 노동자들이 느끼는 존중감은 천차만별이다.

이런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이 나왔다.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상상 중에는 '자기 일에 대한 존중감'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 많았다. 적절한 임금과 사회안전망이 주어진다면, 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직업을 선택의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의견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20대 일자리의 현실과도 연결된다. 20대 청년들은 자신이 일터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열정페이'로 대표되는 임금 문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사내 문화, 이른바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등이 그 이유다.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서 미래의 '좋은 일자리'를 평가하는 기준에 관해 물었을 때, '직장에서 내 이름이 불린 횟수', '내가 존중받았다고 느끼는 횟수', '정신과 병원의 숫자 감소' 등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청년들이 일터에서 겪고 있는 인권 침해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상상확장판을 통해서 본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도 그랬다. 각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고, 수평적이고 소통이 원활한 직장 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은 수평적인 직장문화 속에서 구성원이 직급이 아니라 역할로 구분되는 직장이 된다면, 창의적인 문화가 활성화되고 회사와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소득으로 직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보편화한 현실에서는 소득에 신경 써야 하지만, 미래에는 소득이 직업의 질을 좌지우지하지 않길 (바란다.)

◎ 모든 노동에 가치가 있고, 나는 돈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로 평가받고 싶다.

◎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싶다. 그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하지만 받는 것보다 더 일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 주고 착취하지 않는 (사회), 노동한 만큼 경제적 보상이 보장이 되는 (사회)!!

–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상상확장판 메모 중

◎ 제가 직장에서 갑질을 많이 당하면서, 저도 빨리 갑이 되고 싶은 거에요. 빨리 성공해서 빨리 그 자리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나도 물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갑이 되길 원하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 돈 말고 행복을 버는 직장이었으면 좋겠다. 편안한 소통환경과 자유로운 근무시간이 실현되고, 아침에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스트레스 없이 근무할 수 있어서, 계급(직급)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회사든 나라든 경쟁력이 커질 것이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2. 여유 있는 일자리

나를 위한 시간, 자아를 실현하는 삶의 여유가 보장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20대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또 다른 일자리 열쇳말은 '자아실현'과 '나를 위한 시간'이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었다. 이들은 일에 지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노동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노동시간 이후에도 무엇인가를 창작하고 생산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며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받는 삶

–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상상확장판 중

◎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창작한 횟수로 나의 행복을 측정하자.

–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상상테이블 2조 '평가 기준' 중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은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 죽기 전까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여가나 자유시간을 통해 자기를 찾고.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세상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도 만족을 찾고, 자기를 찾았으면 좋겠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3.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일자리

노동시장 유연성은 최근 노동문제에서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의 생각은 노동유연성 담론을 뒤집는다. 주어를 바꾸어서다. '유연한 노동'을 기업 측면에서 보아 해고가 쉬운 노동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거꾸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유연성을 해석했다.

물론 그런 자유가 가능해지려면 삶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선 생존을 위해 고용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년들은 복지의 뒷받침을 통해서 삶이 안정된다면, 창업과 같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일이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봉사와 사회서비스 등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를 요약하면, 직장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회였다.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생계에 위협을 주지 않고,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직업을 선

택하더라도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 지금 청년의 입장에서 일자리의 안정성과 유연성,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삶이 안정된 상황에서 직업의 유연성을 보장받으면 좋겠다.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 같다. 경제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유연화가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청년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다.

◎ (일자리의 유연성은) 복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복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나는 일자리의 안정성(고용보장)을 포기할 수 없다. 창업을 너무 하고 싶지만, 창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창업에 올인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확실한 것이 중요하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 기본 소득이 제공된다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상상테이블 1조 '핵심과제' 논의 중

◎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사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큰 모험이 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직업 간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일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미래사회가 되길 바란다.

◎ 직업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서, 나를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길 원한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상상테이블 1조 '미래상상' 중

4.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은 다양한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을 위한 창조적 활동을 하고 싶어 했다. 사회에 의해 강요된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삶의 시간표와 자신의 목표에 맞게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고, 삶의 행복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이 노동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많은 청년은 '해야 하는 일'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과 삶의 조화를 원하고 있었다.

◎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사장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 30년 후라면, 일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처럼 될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중요해질 것이다. 타인에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나 자신에게 기여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일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할 것 같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상상테이블 '미래상상' 중

◎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내 꿈(소명)을 찾아가는 삶

◎ 소명의식을 느끼는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면서, 여유 시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삶, 웃는 삶

–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상상확장판 메모 중

5. 상상노조 선언문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이 상상한 '상상노조'는 이 세대가 꿈꾸는 노동의 여러 측면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들이 쓴 '상상노조 선언문'에는 이들이 꿈꾸는 노동이 잘 표현되어 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상상노조 선언문

1. 좋은 삶을 상상한다
2. 좋은 일자리를 상상한다
3.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상상한다
4. 미래세대를 상상한다
5. 우리는 계속 상상한다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상상테이블 2조 '상상노조 선언문'

상상노조 선언문은 소셜픽션 콘퍼런스 일자리 분야의 논의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선 미래의 '좋은 삶'에 대해 상상하고, 그런 좋은 삶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조건에 대해서 상

상하자는 것이다. 또한 나만을 위한 '좋은 삶', '좋은 일자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좋은 삶'과 '좋은 일자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6. '좋은 일자리'의 미래지표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은 '2045년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사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상상했다. 회사 내에서 직급, 나이, 갑을 관계 등에 얽매이지 않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임금, 휴가 등에서 차별이 없으며,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년들은 기술의 발달하고 각 구성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존중되어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없는 사회를 상상했다. 각 회사 구성원이 업무 목표 달성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업무 시간과 업무 공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일자리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신을 위한 창작 및 예술 활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고, 1인당 직업의 수 등이 유연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은 '차별이 없고,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삶이 존중받는 미래의 일자리와 삶'으로 변화한 미래사회를 평가하는 미래지표를 선정했다. 그 결과와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미래의 일자리 평가 기준의 내용과 의미

구분	평가 기준 및 관련 설명	의미
차별 없는 일자리와 사회	나의 이름이 불리는 횟수	직장 내에서의 존중, 업무관계에서의 존중, 수평적인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나타낸 지표
	내가 존중받은 횟수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화이트칼라, 블루칼라의 차별이 없음)	직장 내 수평적인 문화와 차별이 없는 환경을 강조한 지표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보장의 내용도 포함
	비정규직의 비율(비정규직 0%)	
	대기업과 미화원의 채용 경쟁률 비교(아이가 자신의 꿈이 환경미화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직업 간에 좋고, 나쁨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지표
	남자 화장실의 아기 기저귀 교체대 개수	양성평등 등 차별이 없는 사회를 상징하는 지표
	평일 놀이공원 아빠 / 가족 수	
삶의 만족 추구	평일 놀이공원 아빠 / 가족 수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지표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은 횟수 / 소통한 횟수	
	간판 내리는 정신과 병원 숫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한 사람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 지표
	줄어드는 카페인 소비	
	하루 중 행복한 시간(의 비율)	개인을 위한 시간이 삶의 만족에 주는 영향을 상징하는 지표
	일주일간 창작 활동한 횟수 (예술, 요리, 영상, 사진 등)	
삶의 안정성	출산율	삶이 안정된다면, 자연히 출산율이 늘어날 것을 예상함
	1인당 직업 수 (요리사 하면서 책도 보고, 청소부로 청소도 하고, 미용사로 빗질도 하고. 피에로 분장하고 놀이 공원에서 일하기)	삶의 안정성과 노동시간 단축을 바탕으로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 사회의 기여를 기준으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음
	대기업과 미화원의 채용 경쟁률 (아이가 자기의 꿈이 환경미화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삶이 안정성이 보장됨
	재충전 인구수	직업이 없지만 불안하지 않을 정도의 삶의 안정성과 재취업의 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

청년들이 제안한 '미래 일자리의 평가 기준'을 분석하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민주적인 소통이 가능한 노동 환경, 개인에 대한 존중과 직업 간 차별이 없는 사회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은 복지의 강화를 통한 '삶의 안정성 확보'가 직업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삶의 만족과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와 연결된다는 인식을 보였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인식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임금 수준,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이 대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 등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속해 논의의 기반이 되는 공통적인 상황 설정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지만, 노동과 일자리 현장에서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가치,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것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 속에도,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을 통해서 청년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좋은 일자리는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 사회가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 청년 실업문제 해결, 청년의 창조적 도전 등 일자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개인의 다양성과 존엄성이 존중받는 삶'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또한. 일자리 문제의 대안을 복지 등 다른 영역과 연계해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2장

미래 일자리를 위한 제언

1. 노동권 교육 도입

청년들은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평가하고 제안하며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상상했다. 이런 상상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노동자 스스로 권리에 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예비노동자인 청소년부터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노동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2015년 4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고교 교과목으로서 '민주시민' 과목을 신설하여 노동권 등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교육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17]

프랑스와 독일,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은 노동 관련 내용을 '시민교육'의 주요 교과 내용으로 지정하여 인권, 헌법, 경제, 사회, 윤리, 역사 등을 통해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다루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와 사회구성원의 연대를 강조하고, 독일의 학교에서는 경영악화에 따른 감원에 관한 단체교섭상황을 상정하고 학생들이 직접 경영자와 노동자로 나누어 역할놀이를 하면서 실제 노동환경을 경험하기도 한다.[18]

영국에서도 시민교육(Civic Education) 과정에서 노동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노동의 개념과 의미, 노동의 형태,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국가정책, 산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실제 노동현장 문제 등을 고민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중요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하며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으로 양성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이현경, 2003, p102)

17. 전순옥, "전순옥 의원, 노동권 교육 의무화법 발의", 전순옥 의원실, 2015.04.23.

18. 최지용, "[어서와, 노동은 처음이지?②] 프랑스·독일·미국의 노동교육 방법", 『오마이뉴스』, 2013.12.05.

[표 3-2] 영국 노동교육 교과 내용 요약 (핵심단계(Key Stage) 4의 시민교육 교과 과정 중)

노동교육 단원 1 주요 내용	1과. 노동이란 무엇인가? - 노동의 여러 형태(유급 노동·무급 노동) - 탐구과제: 질문을 만들고 면담을 유도하여 노동의 여러 형태 및 노동세계의 변화방식에 대해 탐색 - 탐색결과를 발표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기록
노동교육 단원 2 주요 내용	2과. 노동에서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 - 법이 어떻게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을 보호하는가? - 시간제 노동을 하는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 - 노동자를 위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곳에 대한 정보 - 작업장 분쟁을 다루는 전략에 대해서
노동교육 단원 2 주요 내용 (심화 과정)	2과. 노동에서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 (심화 과정) - 권리와 책임 관련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역할극을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정함 -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라는 점이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교육 단원 3 주요 내용	3과. 마무리와 미래학습 계획 수립 - 자신의 성취에 대한 검토와 요약 - 16세 이후 자신의 역할과 권리, 책임에 대해, 그리고 학습요구 및 활용 가능한 학습기회에 대해

출처: 송태수, 2014.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의 학교에서 노동교육은 '적극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된다. 학생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와 인권, 노동과 기업의 관계 등에 관해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파편화되고 인권교육이 부재한 형태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노동교육과는 방법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송태수, 2005)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청소년들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의 대처방법', '노동 인권의 이해에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기법',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인지 활동',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 방법 교육' 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송태수, 2014, pp.24-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노동 인권에 대해서 교

육 받거나 설명을 들은 비율은 16.5%에 불과하며,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은 25.5%, 임금체불 등 부당대우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경우는 71.7%이다.(안선영 외, 2014)

적절한 노동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노동 현장을 접할 경우 이들은 '사회는 어차피 그렇고 그런 것이며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들이 성인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이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노동자성을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배경내, 2005)

2. 삶의 안정성 확보

청년들이 꿈꾸는 대로 '이동이 자유로우며 노동시간이 유연한 일자리'가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안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알려주는 사례를 북유럽 사회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인 "The Nordic Way"는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복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북유럽의 사례를 주목했다. 북유럽 복지제도의 특징은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이 기여(Contribution)가 아니라 시민권(Citizenship)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역시 전 국민이 하나의 체계에 통합된 형태이며, 복지급여의 수준이 매우 높아 소득불평등도가 낮다.(강유덕 외 , 2013, pp.85-86)

북유럽 복지모델이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2014년 OECD 국가의 사회지표를 요약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사회 2014"의 고용 및 실업 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북유럽 국가는 남유럽 국가, 미국, 영국 등 보다 노동 관련 지표가 안정되어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청년(15·16세~24세)실업률은 5.9%, 청년 비활동경제인구 비율은 6.7%이지만, 스웨덴의 청년실업률은 3.7%, 청년 비활동경제인구 비율은 3.5%이고, 네덜란드의 청년실업률은 1.7%, 청년 비활동경제인구 비율은 2.8%에 불과하다.[19]

스웨덴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의료비, 연금, 자녀수당, 주택보조금, 상해보험, 실업보험, 학업수당, 교육비 등 삶의 다

19."한눈에 보는 사회 2014" (OECD 사회지표) 중에서 니트(NEET, Neither in Employment, Education, Nor Training) 관련 통계를 인용하였다. 니트족이란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인구를 의미한다. OECD 통계에서는 실업과 비활동인구를 구분하여 청년 인구의 비활동성 상태를 조사하였다.

양한 부분에 걸쳐 사회보장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정책이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두려움과 해고에 대한 저항을 줄인다. 이들 국가에서 경제위기 이후에 사회보장 정책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실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실업급여제[20]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개입 정책 시행으로 실업자들이 다시 노동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의 모델로 자주 거론되는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해고 요건 완화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 역시 다양한 복지 및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편, 삶의 안정성은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구현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장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의 처우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거나, 기본소득 또는 최저소득을 보장해 전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도록 정책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하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의 대표적인 사례인 덴마크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실업자에게는 2년 동안 기존 월급의 최대 90%에 해당하는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업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비가입자 등)의 경우, 지급기한에 제한 없이 사회보호급여가 지급된다.[21] 이러한 덴마크의 소득보장 정책은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소득 안정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다양성도 함께 높이는 효과를 불러온다.(오연호, 2014)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경기도 부천시 등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더 창조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함께 품는 일자리를 원한다면, 생활하기에 적정한

20. 스웨덴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다음과 같다. 지급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각기금 간 차이가 있으며, 실업급여일액은 이직 전 임금의 75%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다. 연금 수급자는 이직 전 임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으며, 연금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만큼 공제되어 지급된다.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최대 300일까지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55~64세의 가입자인 경우 최대 450일까지 지급된다. (출처: 유길상 외1인(1999),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1. 오연호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와 고용노동부의 국제노동정책브리프 22호(2009.01.22)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오연호에 따르면 덴마크의 법적인 실업보조금 지급 기간은 2년이며, 실업보조금은 기존 월급의 최대 90%에 달한다. (주5일 근무기준, 최소 1만860크로네(약 200만 원), 최대 1만6300크로네(약 300만 원)). 그리고 2009년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국제노동정책브리프 22호에 따르면, 덴마크는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갖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비가입자 등)에게도 사회보호 급여가 지급된다, 독신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상한의 80% 수준의 사회보호 급여가 지급된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에는 지급 기간의 제한이 없다.

수준의 임금 보장, 복지를 통한 기본적인 소득의 보장으로 소득과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의 균형

청년들의 상상처럼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시간을 삶의 형태에 맞게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이다. OECD 평균 1,770시간보다는 약 400시간이 많고, 독일보다는 거의 800시간이 많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요리, 육아, 장보기 등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은, 2012)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체제의 원인, 재생산구조 및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면서 현재의 장시간 노동체제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생애과정과 생애주기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규직이 과도한 노동을 하게 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장시간 노동은 기업의 혁신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배규식, 2012)

[표 3-3] 장시간 노동체제의 결과

○ 노동시간 제도의 제도적 지체 - 고용률, 생산시스템, 직장과 가정의 관계, 생애주기, 노동과 여가 문화, 건강과 산업재해 등에 심각한 결과 초래
○ 노동시간의 독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과중노동(overwork) - 노동시간의 사회적, 세대 간 불균등한 배분 초래
○ 전일제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성들의 고용률을 낮춤 - 어린 자녀들을 가진 여성들이 정규직 시간제 고용으로 일할 기회를 박탈

○ 기업의 노동시간의 효율적, 계획적 관리 부진

- 기업 측의 노동시간의 계획적, 효율적 관리능력 미발달로 시간제 고용의 활용, 노동시간과 연계된 작업조직 혁신, 노동력 투입 위주의 생산체제 혁신 등이 부진

○ 기타결과

- 직장이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여가생활 부재, 가정에서 소외되는 결과 초래
- 노동자 건강위협·산업재해·직업병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생활의 질은 물론 삶의 질도 저하
- 노동시간의 상방유연성을 보장하되 하방경직성 초래

○ 노동시간의 규제 곤란 혹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음

-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2010년 현재 전체 근로자 가운데 52.9%에 적용

출처: 배규식, 2012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근무 피로도 감소, 산재 감소 등 노동생활의 질이 개선되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 일과 가정의 양립 원활화, 취미활동과 필요한 교육, 훈련 기회 증가로 가족관계 및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같은 수준의 생산을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근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개발하고 공공부문부터 적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민주노총에서는 여가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 해결과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교류 확보, 장시간의 휴일·휴가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접근하고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 개인의 건강과 삶,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과의 관계 개선, 시민사회와의 교류와 참여, 산업의 혁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OECD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행화된 초과근무 형태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를 한 단계 확장하면 노르웨이의 '일-돌봄 시민모델(Worker-Carer)'에 이른다. 연세대 김현미 교수는 우리 사회가 '좋은 일자리', '좋은 삶'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좋은 일자리'란 높은 소득을 주는 일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살리고 사회에 기여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말한다. 또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돌봄 시민모델'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현미 교수는 일→경제적 생존→사회적인 공헌 돌봄→좋은 삶의 형태로 선순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신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김현미, 2015)

'일-돌봄 시민모델'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노르웨이는 일터와 가정의 균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22] 기본적으로 유치원이 지역 내에 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워 부모들이 출근길에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퇴근길에 다시 유치원에서 데려올 수 있다. 노르웨이 '일-돌봄 시민모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성에게도 14주의 강제 부성 휴가를 부여하는 출산휴가 제도이다. 출산한 부모는 총 49주, 즉 1년 1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한다. 부모가 상의해서 부성 휴가와 모성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의 양육에서 아빠가 배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빠에게 14주의 강제 부성 휴가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유연근무제에 집중했다. 유연근무제 덕분에 아이들이 어린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 방과 후 생활에 부모가 함께 할 수 있어 서로 친밀감을 높일 수 있고, 여성 고용률 상승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표 3-4] 노르웨이의 출산휴가제도

	현행법 (2013.07.01 이후 출산 아동)	입양아에게 적용되는 법 (2013.07.01 이후)
총 부모휴가 일수	49주(급여 전액지급) 59주(급여의 80% 지급)	46주(급여 전액지급) 56주(급여의 80% 지급)
아이가 태어나기 전	3주	-
엄마의 의무휴가 일수	14주	14주
아빠의 의무휴가 일수	14주	14주
부모가 협의 후 가질 수 있는 휴가 일수	18주(전액지급) 28주(급여의 80% 지급)	18주(전액지급) 28주(급여의 80%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제와 육아기 단축 근로 등 육아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22. 고용노동부 블로그(blog.naver.com/molab_suda) 참조.

선택하는 남성근로자도 증가추세이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육아휴직을 쓰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4.5%에 불과하다. 이처럼 육아와 돌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일터와 가정의 균형정책은 단지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보육시설 등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변을 돌보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육아휴직 수당의 현실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권 보장[23] 등 세부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돌봄 시민모델'은 회사 내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육아시설과 같은 복지시설을 갖추고 회사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델과는 반대 방향을 향한다. 회사에서 더 많이 일하고 임금 소득으로 가사노동, 돌봄 등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서비스의 형태로 구매하는 삶의 방식을 권장하기보다, 스스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실천할 여유를 확보하는 삶의 방식을 권장하는 모델이다.

4.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이 상상한 단체인 '상상노조'는 소속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를 고려하는 단체다. 이는 노동자 사이의 연대 확대, 지역 및 시민사회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유럽 노동조합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금속노조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독일은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노조가입률이 낮다. 그런데 불황으로 비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자, 독일의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을 통해서 파견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다. 노조 소속이 아닌 파견노동자도 노조의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이다.[24]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 문제 등 현실적인 노동 문제들도 해결이 시급하지만, 노동조합이 어떻게 더 많은 노동자와 연대하고, 지역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스웨덴에는 노동자교육협회와 민중의 집이라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있다. 노

23. 한정애 국회의원 블로그(www.hanjeoungae.com),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24. 하이너 드립부쉬(2014), "독일의 노동조합",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동자교육협회는 사민당과 노총(LO), 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만든 단체로서 전국에서 약 3만5천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노동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실무교육에서 교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소규모 스터디 그룹 형태로 운영된다. 노동자 교육협회는 스웨덴의 최대 시민교육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스웨덴 전역 600여 곳에 산재한 민중의 집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5]

다양한 노동자와 서민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인 민중의 집은 노동자, 지역주민이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세기 말에 설립되었다. 민중의 집의 공간 형태는 공연 무대, 모임 장소, 갤러리, 영화관, 스튜디오,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하다. 민중의 집은 열린 음악공연 등 문화를 매개로 노동자와 서민을 연결하고 결집해, 궁극적으로 참여 정신과 주체적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민중의 집은 노동운동과 지역 풀뿌리 정치운동을 같이 수행하고 있다.[26]

교육과 사회적 공간의 공유 이외에도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인수범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의 복지체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공과 같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활동의 공식적인 영역으로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지역사회복지체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연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고용주거분과에 부천노총이 참여하여 지역 사회복지에 함께하고 있다.(인수범 외, 2008)[27]

지역사회의 문제 중 노동이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으며, 한 개인은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한 지역의 주민이기도 하다. 굳이 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의 삶과 지역주민의 삶이 연관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점과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점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 내부의 노동환경 개선에서부터 NGO와의 연대, 다국적기업 감시 활동과의 연계, 사회적 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SRI) 관련 활동 등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을 넓히

25. 정경섭, "스웨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라는 곳", 『한겨레』, 2014.11.21.

26. ICOOP 생협 네이버 블로그, "스웨덴 민중의 집에서 만난 새로운 민주주의" 참조.

27. 인수범 외 1인(2008),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체계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고 있다.[28]

5. 노동자의 경영 참여

청년들은 존중받으면서도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상상했다. 소명의식과 존중감은 소득 등 처우로부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조직의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더 큰 소명의식과 존중감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노동조합이 중요한 경영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의 관리, 실업자의 재교육과 취업알선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노동조합이 회사의 생산현황, 재정상태, 인력정책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장의 보건, 안전, 경영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때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9]

독일에서는 노사공동결정제(Mitbestimmung)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는 자본과 노동의 동등한 권리, 경제민주주의 등을 위하여 노사가 사회복지, 인사정책 등에 관해 공동결정을 하도록 법률로 정한 제도이다. 노사공동결정제에 따라 노동자들은 직장평의회(Betriebsrat)를 통해 단축 근로나 초과 근로를 시행하고 기본임금이나 상여금을 책정하며,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할 때 사회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에 참여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노동자 대표가 감독이사회(Aufsichtsrat)에 참여하여 기업활동과 운영에 관한 결정에 관여한다.[30]

노동자가 경영에 가장 깊숙이 참여하는 형태는 협동조합이다.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에서 노동자는 노동자인 동시에 조합원이며, 모든 조합원은 경영 의사결정에 동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경영 관련 정보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다.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페인 몬드라곤의 경우, 7만4천여명의 직원과 125억7400만 유로의 연 매출을 자랑하고, 103개의 협동조합기업이 연합한 큰 규모의 조직이지만, 노동자 조합원이 이사로서 협동조합 운영에 참여하고, 조합원간 임금의 최대 차이가 8배 이내가 되도록 수익 배분을 하고 있다. 몬드라곤이 위치한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은 스페인이 경제위기를 겪는 동안에도 스페인에서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28. 김영두(2007), "외국 노동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용사례", 한국노동사회연구원.

29.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유럽연합 각국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30. 출처: 독일 개황, 외교부, 2011.

6. 소결: 미래 일자리를 위한 제언

스웨덴이 '국민의 집'이라는 이상을 내걸고 오늘날의 복지국가로 첫발을 내딛던 때는,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실업률이 치솟고,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노동운동이 억압받던 시절이었다. 오늘날, 성공적인 노사협력모델로 평가받는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도 네덜란드를 덮친 오일쇼크로 경제가 침체하고, 실업률이 높던 때 진행된 것이다. 이들에겐 '인간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이에 맞추어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서로 타협점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31]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알아본 미래 일자리 문제에 관한 청년들의 고민도 '임금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을까'와 같은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면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하는 것이 바로 청년들이 가진 고민의 핵심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와 일반시민 연대함으로써 기업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 삶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복지의 뒷받침, 수평적이며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의 형성과 공유 등 관련된 다양한 지점으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청년들은 단순히 기업과 노동자의 양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의제들을 논의함으로써,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개인의 삶, 복지, 법과 제도,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일자리는 각 개인의 삶의 변화, 공동체와 사회의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좋은 삶'을 상상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좋은 일자리'의 모습, 좋은 일자리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와 사회문화는 무엇인지에 관한 비전, 세부목표, 실현방안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프랜차이즈 문제, 건물주와 영세자영업자의 이윤 배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들이 노동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31. EBS,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1편: 노동", EBS 다큐프라임, 2013.01.14.

Part 4
복지

1장 청년, 어떤 복지를 꿈꾸는가
2장 미래 복지를 위한 제언

청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015년 20대로 살고 있는 청년세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은 사회복지의 5대 불안 요소(일자리·보육 및 교육·주거·노후·건강·불안)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괴로운 중간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대들의 미래상상 속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없었다. 복지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할 청년세대는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을 원하고 있었다.

20대들의 복지에 대한 상상은 '더불어 사는 삶'을 '제도화'해달라는 요구로 인식된다. 그들이 상상하는 복지사회는 일과 가정이 어우러지는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한 사회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없애는 '일과 돌봄'의 대안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청년들이 제시한 것은 마을공동체 안에서 혈연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가족'과의 융합이었다.

생존권과 주거권, 기본사회권의 보장 아래 마을 민주주의를 이루는 삶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추구하는 미래사회의 4대 핵심가치는 안정(주거와 일자리), 정서적 유대감, 유연한 삶, 자아실현(꿈)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소통(이웃), 융합, 협동, 공감(세대), 공유, 문화예술, 지속가능성, 열린 교육(배움의 자유), 건강, 참여, 평화가 개인의 미래 핵심가치로 도출되었다.

20대들은 생애주기별 프레임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영유아에게 '부모와 함께할 권리'를 주어야 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에게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주거권과 최저임금만큼은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장년층을 위한 '이모작 프로그램'의 보완과 노인층을 위한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도 제안했다. 소셜픽션에 참가한 청년들은 통합적 정책서비스를 통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했다.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청년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전략은 '얼마나 보장해주고, 늘려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권 확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무엇보다 우선하여 청년의 주거권 확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권 통합정책패키지 개발을 제언했다. 둘째, '일-돌봄 시민모델'의 도입을 제언했다. 셋째, 학자금 부채로 압박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주거지원, 구직지원 정책패키지 개발을 제언했다.

20대들이 추구하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생태 마을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삶을 재구성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제도, 대안적 교육체계, 참여체계, 법률체계(기본소득, 기초임금 등 사회권 보장), 안전체계, 보건체계, 편의구조, 여가 구조의 여덟 가지 사회구조 체계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 사회적 인간으로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1장

청년, 어떤 복지를 꿈꾸는가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20대들이 '2045년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32]으로 제시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20대들의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경쟁·편견(23%) ▲ 패배감(20%) ▲ 복지(13%) ▲ 현실(11%) ▲ 나이주의·권위주의(8%) ▲ 이념(7%) ▲ 타인 시선 의식(7%) ▲ 교육(6%) ▲ 소비위주·물질만능주의·공동체 붕괴(5%)

□ 일자리 관련

◎ 구직활동 관련: 생존, 경제활동에 대한 어려움

◎ 기초보장, 취업지원: 현 체계 안에서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 문화

◎ 혁신제도 관련: 대안적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 체계

□ 사회활동 관련

◎ 기존사회와의 문화갈등: 사회활동에서의 문화갈등

◎ 사회문화적: 대안적 삶을 가로막는 사회인식,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사회인식

◎ 사회참여: 사회, 정치,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

□ 개인적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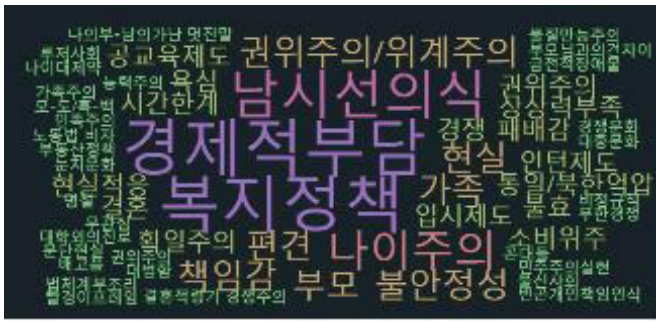
◎ 개인역량: 대안적 삶에 대한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찰, 갈증

◎ 자존감 붕괴, 생존: 사회적응 포기단계에서의 단상

◎ 개인의 갈등: 개인의 욕망, 윤리, 가치

[그림 4-1] 20대들이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꼽은 제약조건

32.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의 본격적인 첫 순서로 3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기에 앞서, 제도적·문화적·개인적·윤리적·기타의 현실 제약조건을 생각해보고 이를 적은 종이를 구겨 날려버리는 순서를 진행했다. 20대들이 선택한 제약 요건의 특성을 파악해보면, 20대들이 처한 현실의 제약과 결핍 요소 및 불안 요소들을 유추해볼 수 있다.



출처 :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 년 , 대한민국의 상상'

1. 청년도 복지의 대상이다

1) 청년정책의 부재

◎ 우리가 복지에요. 복지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인데, 복지라는 걸 앞세워서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않을까 걱정돼요. 지금의 우리가 소외되는 것처럼.

◎ 내 삶의 안정성이 제도의 뒷받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 미래를 상상하는 것보다는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상상과 삶의 괴리가 생기고, 윤리적·도덕적인 편견으로 인해 스스로가 편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복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답게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법전에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하잖아요.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 교육이나 상담이나 서비스를 그냥(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기를 낳고 기르는 걸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사라진 사회가 되어서 모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복지는 꿈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한국의 청년[33]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는 통상 임의로 누군가를 청년으로 지칭하지만, 그 대상이 법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청년'은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정도의 수식어가 붙은 모호한 개념일 뿐이다.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범위를 명시한 법적 근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34] 및 동법 시행령[35]이 유일하다. 이 법은 청년을 15세 이상부터 29세까지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때에 따라 34세까지로 그 범위를 넓혀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고용'과 관련한 특정 영역에서 청년의 연령대를 명시한 것으로서 한계점을 가진다. 청년정책이 곧 '일자리 정책'이라는 공식을 넘어 청년을 사회 전반의 영역, 사회적 시민권의 측면에서 부각하고 법적으로 그 정의와 지위를 규명해야 한다.

2) 청년의 사회권은 어디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20대들은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삶에 대한 패배감을 고백하며 삶의 안정성을 바랐지만, 미래상상 속에서는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삼포, 오포, 칠포세대가 아니었다. 제약조건이 사라진 공동체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그려내며, 사회적 시민권을 재정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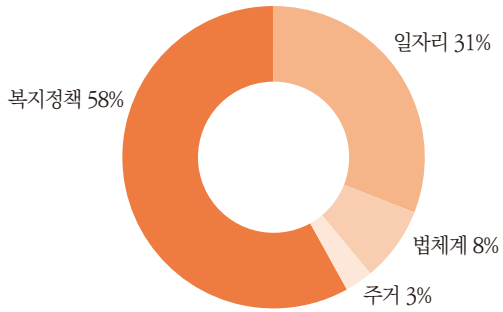
20대들이 '2045년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으로 제시한 내용 중 '복지' 관련 제약조건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복지정책(58%)·일자리(31%)·법체계(8%)·주거(3%)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들이 제약조건으로 제시한 것들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세대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33. –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 성년 남자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 대한민국 통계청은 15~2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법은 19~24세 남녀 모두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19~45세의 당원을 청년당원으로 규정한다. 2013년 출범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19~3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규정한다. (출처: 위키백과(ko.wikipedia.org))

3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4.1.1] [법률 제11792호, 2013.5.22, 일부개정])

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출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4.1.1] [법률 제11792호, 2013.5.22, 일부개정])

[그림 4-2] 2045년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 중 '복지' 관련 분포도



출처 :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 년 , 대한민국의 상상'

청년들이 이러한 제약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한국 청년의 사회권[36]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하며, 청년의 사회적 시민권의 재정립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사회권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생계, 의식주, 노약자 보호 등)로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권, 또는 법률적으로는 사회적 기본권이 인권의 본질적 구성요소로 인정되고 있는데, 2015년의 20대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생존, 교육, 사회문화적 환경 모두 불안정하다. 청년들 삶의 재생산 위기가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이는 단순히 경제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비민주적 제도와 공유 감정 및 협력적 정서의 결핍과 연결된 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의 최소조건을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뒤쳐져 있다. 특히, '청년의 사회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제55차 회의에서 채택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14번 항목에 의하면, 한국은 고용 기회가 부족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년 고용을 위한 국가 정책에 관해 정보

36.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그동안 자유권 신장에는 민주화 과정과 더불어 그래도 꽤 진전이 있었던 것에 비해 사회권은 아직도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에는 큰 차이가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만연한 성희롱, 고령화와 사회보장의 미비, 자녀양육의 부담, 노숙자 등 빈곤층의 문제, 높은 자살률, 다문화가족이 겪는 사회적 차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미비, 개발과 관련된 주거권이나 전세권 보장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이 모든 문제가 사회권으로 통칭되지만, 일반 국민에게 사회권이라는 용어는 아직 낯설고 이를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사회권보다는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더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일 것이다. (출처: 신혜수 (2013),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동향과 주요 논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특집)

가 충분하지 않다고 권고를 받았다.[37]

사회권

사회권은 67 년 전인 1948 년 12 월에 발표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 22 조 ~ 제 27 조) 에 이미 명시된 개념이다 .[38] 1966 년의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 .(조효제 , 2008, p.326.)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즉 사회권 규약 (또는 A 규약) 조항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대표적인 국제인권기준으로 ,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 . 사회권 규약은 노동권 (6,7 조), 노동조합권 (8 조), 사회보장권 (9 조), 가족에의 권리 (10 조),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11 조), 건강권 (12 조), 교육권 (13,14 조), 문화권 (15 조) 을 보장하고 있는 핵심 국제인권협약이다 .(신혜수 , 2013.) 사회권은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노동 , 주택 , 교육 , 문화 , 환경 등과 관련해 국가나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이른바 급부 (청구) 권을 의미한다 .(장은주 , 2006.)

3) 20대의 몸과 정서 상태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참가자들에게 '현재 몸과 정서의 상태'를 물었다.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삶과 자신이 원하는 삶의 중간지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으며, 탈출구가 필요한 세대로 유연안정성을 추구한다. 둘째, 생애 전반에 누적된 피로감(학습 과다·경쟁 과다·엄친아 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력에 있어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여성 및 청년의 고용을 증진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배가하면서, 2010년까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목표율 55%를 달성하기 위해, 아울러 자녀양육 및 경력 단절 이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도록 지원과 적절한 교육 및 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시장 수요에 적합한 직업 교육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도록 권고한다.", (출처: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2012) 모니터링 블로그)

38. 이 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이 권리들의 시금석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자유, 개인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머지 5개 조항에서는 직업, 정당한 보수, 여가와 관련된 경제적 권리, 건강, 복지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사회적 권리,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권리 등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구체화했다.

플렉스)과 분노, 패배감, 피해의식, 무력감이 잠재해 있다.

◎ 사회적 기준으로 일해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
◎ 부끄러운 삶이라고 생각되는 현실이다
◎ 스스로에게 한계를 규정짓고 포기하는 법을 가르치는 중이다
◎ 노력을 멈추지 않고 살아온 삶 때문에 피곤함이 극도로 누적되어 있다
◎ 도구가 아닌 온전한 나로 살고 싶다
◎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원한다
◎ 외롭지 않은 삶을 원한다
◎ 서울에서 나에게 허락된 공간은 고작 4평 남짓한 방이다
◎ 밥 해먹을 공간이 없지만, 밖에서 밥 사 먹을 돈도 없다
◎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할 곳이 없는 동네에 살고 있다
◎ 친구들도 다 취준생들이다– 함께 우울의 구렁텅이에 있는 현실이다
◎ 이상적인 삶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 삶에 최종적인 본인만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현실이다– 탐색이 필요하다
◎ 정상, 비정상 생애주기를 벗어나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싶다
◎ 지쳐있는 현실이다– 자신과 부모 모두를 설득시키는 데 지친 현실이다
◎ 가진 게 너무 없다
◎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 미래에 저당 잡혀 지금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크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참가자들의 '현재 자기 몸과 정서 상태' 중

4) 20대가 '본인에게 주고 싶은 선물'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참가자들에게 '본인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한 답을 분석해보면, 20대들은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마땅한 탈출구를 자력으로 찾지 못하며, 문제 상태에 안주하는 것으로 '정지 상태'인 현재를 합리화하는 심리가 강했다. 그러나 20대들은 경쟁심이 강하고, 주어진 과제를 시간 내에 해결하는 일은 기계적으로 잘 해내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공동체, 사회연대감, 대안적 삶을 일종의 트렌드로서 인식하거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통로, 혹은 '남과는 다른' 성공을 위한 통로로 생각했다. 이 통로에 진입하는 방법에서도 기존에 내재화된 성향(경쟁의식과 과업 지향성)을 보였다. 청년들의 'I-ism(나 중심주의)'적 희망과 열망이 사회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에게 '나'의 희망과 권리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성찰이 요청되는 지점이다.

◎ 300만원만 주고 싶다 –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가서 돈 벌어오고 싶다
◎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안정적 궤도에 올라섰을 때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다
◎ 화끈하게 사고 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 취업 걱정 없이 나의 삶과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공간을 주고 싶다
◎ 나는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주고 싶다
◎ 현실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면 가치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으므로 잠수타고 싶다
◎ 좋은 삶이란, 언제 어느 때든 꿈을 꾸고 실행할 수 있는 삶이다
◎ 나를 복제한 다른 하나가 있어서 주변과 부모님 기대에 맞춰 살게 하고 싶다
◎ 새로운 삶, 새로운 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제약 없는 삶을 살고 싶다
◎ 남들보다 시간이 2배였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
◎ 미래에 저당 잡혀 지금을 살고 있는 내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다
◎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참가자들의 '본인에게 주고 싶은 선물' 중

2. 복지의 완성은 공동체로

개인의 욕구를 공통의 욕구로 만들며 함께 꿈꿀 '공동체'가 등장한 것은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함께 삶의 재배열에 대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이 모여 스스로 필요와 중요성을 정해가는 과정으로서, 결국 자립과 자치의 힘을 강화해 공생과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는 '공공성'을 독점할 수 없으며, 국가 역시 공공성을 떠맡은 일개 행위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사이토 준이치, 2009, p.5.)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방향을 상실하고, 사실상 공동체의 붕괴와 해체 상태에 진입했다. 2014년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3위에 이르렀지만, 양극화, 과당경쟁, 청년실업 등에 시달리며, 근로시간 2위(UN 2013세계행복보고서), 행복지수 27위(UN 2013세계행복보고서), 이혼율 1위(UN 2013세계행복보고서), 저출산율 1위(UN 2013세계행복보고서), 자살률 1위(OECD, 2014), 사회갈등지수 2위(OECD 27개국 중, 2010) 등의 기록이 보여주듯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불행이 병행했다.

국가는 인간의 생존과 '좋은 삶'을 위협하는 실업, 빈곤, 각종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해결에 맡기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대응 없이는 사회문제는 물론 개인의 실존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삶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는 분리할 수 없으므로 시민성 회복의 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1) 이웃이 필요해

> *지방에서 상경해서 지금 사는 집이 4평인데요, 게다가 반지하에요. 습기 안 차고 곰팡이 없고 창문은 넓어 빨래 잘 마르고 요리할 공간이 있는 10평 정도의 집에서 맛있는 걸 해먹을 수 있는 부엌을 갖는 것이 소망이에요. 작은 집에 조리대를 둘 공간이 마땅치 않아, 집에서 먹는 메뉴는 밥과 김, 김치. 사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어요.*
>
>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참가자 발언 중*

20대들은 나이와 인정, 성별, 소득 등과 관련된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이웃과 혈연관계보다 가까이 지내길 바라며, 단순한 주거지 대신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는 공동체를 원했다. '나 홀로'지만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원했다.

가정과 학교의 품을 막 떠난 20대에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반지하, 옥탑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은 '외로움'과 '주거 빈곤'[39]의 이중고에 시달린다. 서울의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2010년 기준 36.3%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전국 가구의 주거 빈곤율 14.8%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2012년 기준으로 청년 가구 중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 비율은 69.9%였다.(김준영, 2015.) 서울 청년 가구의 3분의 2 이상이 주거비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비 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처럼 새로운 주거 빈곤 시대의 현상으로 꼽히는 청년 주거 빈곤은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이 유연한 삶 속에서도 이웃과 정서적 유대를 열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기업이나 정부는 이미 사람들에게 일자리,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능력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경제방식과 활동방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실천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의 사례가 있다. 2014년 1월 개소한 그리다협동조합은 1인 여성 가구를 위한 협동조합이자, 서울시 마을기업이다. '혼자 그리고 더불어 사는 여성들의 잡지'를 표방하는 『1인용 행복』을 펴내기도 한 그리다협동조합은 서로의 자립을 도우며,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익힌다.

39. 주거 빈곤이란 주택법에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지하 및 옥탑, 비닐하우스, 고시원 같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상태를 뜻한다.

'마을' 하면 물리적 공간을 떠올리는데 , '그리다협동조합'의 경우 정서적인 '또 하나의 마을'을 형성한 것 같다 . 점처럼 흩어져 있는 1 인 여성 가구들이 혼자 분리되어 있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 어슬렁정거장[40] 을 플랫폼으로 무언가 이어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사람들에게 이곳(에서의 활동)이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개인이 누군가와 교감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다양한 일을 생산해내는데, 1인 여성 가구들이 잡지 『1인용 행복』을 받아들인 첫 번째 이유는 '동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무언가 다른 것(다름)들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 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격한 공감인 것 같다. 매체에서 다루는 1인 가구나 싱글족은 현실의 내 삶과 동 떨어져 있지만, 여기는 '내 삶'이고 '내 이야기'로 동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격한 공감이 만들어진 것 같다.

– 그리다협동조합 활동가·어슬렁정거장 매니저 여진 씨 인터뷰 중

2) 공감과 소통을 원한다

A: 마을, 이웃에 관심 두기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
B: 지금의 우리는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나'의 욕구에만 신경 쓴다.
C: 이웃에 관심 두고 주변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B: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까?
A: 적어도 관심사가 같은 사람 백 명만 모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렇게 될 것이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논의 중

20대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되, 필요할 때마다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원했다. 1인 가구가 점차 많아지다 보니, 제각기 해야 할 일을 이웃과 함께 협동하며 해결하는 것이 훨씬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더불어 '이웃에 관심 두고 주변 돌아보기'를 20대들이 해야 할 일로 꼽았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 없이 살아가기 바쁜 청년들의 현실과 이웃 간 관계 맺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신자유주

40. 그리다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어슬렁정거장은 1인 여성 가구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카페'라는 공간을 매개로 활동한다.

의 문화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청년들은 미래사회에서는 '공감'과 '소통'이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3) '새로운 가족'의 탄생

20대들은 구체적으로 생태적 삶, 문화예술을 누리는 삶을 포괄하는 복지공동체의 삶을 원했다. 기존 가족의 해체와 동시에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한 '새로운 가족'은 이러한 삶의 필수요소로 꼽혔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청년들은 이를 '대안 가족'이라 명명하며, 가족과 이웃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 핏줄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필요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으로 셰어하우스[41] 거주자들을 꼽을 수 있다.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거리가 있는 새로운 가족도 탄생했다. 신조어 '프래밀리(Framily)'라고도 불리는데, 프래밀리란 친구(Friend)와 가족(Family)의 합성어로 혈연이나 법적 관계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지만,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현대 가족의 형태는 그들 스스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에 필수적인 의무와 기능, 책임을 수행하는 두 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가족의 기능 중 특히 아동양육 기능, 사회화 기능, 가족애정의 원천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42]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20대들을 통해 '세대통합형 마을공동체'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20대들이 상상한 복지공동체적인 삶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동성 부부, 비혼 여성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 가구 구성원이 다양하다.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들은 이미 '한 가족'이다. 20대들은 동성 부부가 입양한 아이를 옆집 사는 어르신이 함께 돌보고,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는 이웃집에 사는 시각장애인 '삼촌'과 함께 매일 오후 동네 산책에 나서는 모습을 상상했다. 덧붙여 20대들은 생태 친화적인 삶의 모습을 상상했다. 주민들이 함께 마을 텃밭을 관리하고, 그 텃밭에서는 유기농 채소와 과일이 자라며, 주택 사이에 마련된 '공동부엌'에서 주민들이 함께 요리하거나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는 모습이었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20대들의 상상은 주로 시골 마을에 존재하는 마을회관을 도심에서도 부활시켰다. 어르신, 청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그림이나 악기 다루는

41. 여러 명의 입주자가 한 집에 사는 공동주택. 침실은 따로 쓰고 거실이나 욕실, 부엌 등은 함께 사용.

42. 딩크족, 1인 가정, 동성 커플 가정, 통크족, 듀크족, 핑크족, 불황형 대가족, 셸프 효도족 등.

법을 배우고,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반상회 겸 파티가 열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자리한 풀밭에서 함께 기타를 치고, 황토로 꾸며진 주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사는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그렸다.

청년들의 이러한 상상은 전혀 불가능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최근 문화 이주(문화 귀촌)[43]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상상이 마을에서 실현되고 있다. 문화와 개인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과 지역재생을 결합한 형태로 문화 귀촌이 시작된 것이다. 자연 가까이에서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실천하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청년과 중년들이 택하는 대안적 장소로 '지역'이 등장한 것이다.(이광준, 2013.) 아예 수도권을 떠나 땅값이 저렴한 비수도권의 땅을 사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청년들이 집단 이주해 문화 생태적 공동체를 만드는 대안적 삶의 시도 또한 잇따르고 있다.

3. 일과 가정이 어우러지는 삶

1) 저녁을 돌려달라

20대들은 일과 가정이 어우러지는 삶, '저녁 있는 삶'을 원했다. 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르며 일터를 오가는 대신, 마을마다 조성된 '스마트워크 센터'[44]에 모여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상했다. 20대들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굳이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스마트워크 센터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홀로그램[45]을 활용해 동료들과 실시간 회의가 가능한 환경을 원했다.

43.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일어난 2007년 세계 금융위기는 한국에서 저축과 펀드와 부동산을 통해 부를 늘려가던 부동산 신화의 붕괴를 가져왔다. 20~30대 청년들은 부모세대의 이념인 도시화와 산업화, 정보화를 통해서 만든 세상이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고 사는 것, 집을 사기 위해 30년을 저당 잡히고 살던 부모의 현재를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과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많은 청년들이 2008년 이후 문화귀촌, 문화이주를 결심한다.(이광준, 2013.)

44. 스마트워크는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를 뜻한다. 스마트워크는 국가는 물론 기업과 근로자에게도 매력적인 개념이다. 스마트워크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 기업에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근로자에게는 일과 삶의 조화 등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어 비즈니스 혁신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스마트워크-비즈니스혁신의 10대 경영도구", 2014.04.15.)

45. 3차원 영상으로 된 입체 사진으로,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즉, 입체상을 재현하는 간섭 줄무늬를 기록한 매체이다. (출처: 두산백과(www.doopedia.co.kr))

또한, 스마트워크 센터 옆에는 어린이집이 있어 일하는 동시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상상했다. 일터에 나가더라도 오후 3시면 퇴근해서 아이와 함께 운동하거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며, 바쁠 때는 이웃집 '이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대신 돌봐주니 바쁘게 집으로 뛰어들어올 필요가 없는 미래도 그려냈다.

◎ 동네아줌마가 선생님이고, 다문화 아이들도 함께하는 학교가 자연 속에 자리한다.
◎ 생태 친화적 공간에서 연못을 보며 자연을 체험하고 교육을 한다. 마을공부방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아이를 돌볼 수도 있다.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공동의 부엌도 있다.
◎ 스마트워크 센터가 있다. 옆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은 필수다. 직장에 갈 필요가 없다. 일해야 하면 아이를 잠깐 맡기고 일하고, 다시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갈 수 있게 한다. 아이와 부모가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변화상상'을 그리며 나눈 대화 중

2)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회

20대들은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회'를 원했다. 오히려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해, 창업이든 학업이든 원하는 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기를 상상했다. 청년들의 가중된 불안을 안정된 '자기기획적 삶'으로 유도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대목이다.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 삶' 속에 사회적 책임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대들은 자기결정권이 있는 삶을 꾸리며 자신의 삶의 가장 적합한 형태의 일자리 탐구가 가능한 사회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시험해볼 권리
◎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상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지지해주길
◎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
◎ 자신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
◎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복지
◎ 도전하고 상상을 실험하도록 실패가 진짜 경험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복지
◎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비정규직, 계약직이 없었으면
◎ 창업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실수,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 미래가 두려움이 아닌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삶
◎ 몇 번을 실패해도 망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확장판 '청년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마음껏 상상하기' 중

4. 청년의 미래복지 상상

1) 청년 빈곤의 재인식

20대들은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복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의 인식과 복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 부족 또한 심각하다고 했다. 한국은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라며, 무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세금으로 인한 적은 복지 혜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호협력 공동체를 일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에 참가한 20대들은 모두 '빈곤'에 대해 언급했다. 청년들이 이렇게 빈곤문제에 몰입하고 발언하는 이유는 현재의 청년세대에 대한 응급조치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이다.

청년빈곤에 대한 이해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청년빈곤 현상은 청년세대가 무능해서 생긴 빈곤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불안정 노동의 전면화가 일국 노동자의 생애주기와 맞물리면서 특정 세대에 그 폐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청년빈곤의 구조적 원인이다.(박권일, 2015.) 취업을 앞둔 청년세대에게 돌아온 일자리는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용 불안정과 함께 빈곤의 일상화가 시작된 것이다.

한 세대의 빈곤은 모든 세대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세대별 필요 복지에 관해 상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들은 선별적 복지로 이해되는 '세대별 맞춤 복지'의 개념이 아닌, 비례적 복지에 가까운 '생애주기별 복지' 프레임으로의 변화와 시스템화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 욕구는 생애주기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며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20대들은 절감하고 있었다.

◎ 저는 직업이 사회복지사로 이제 2개월 된 신입입니다. 복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선 정책이 너무 안 좋아요. 주먹구구식 행정이 많아요. 예를 들어, 아동법이면 복지부에서 하면 되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한다든가, 또는 예산이 없다든가 다들 한계가 많아요. 절차도 많이 복잡하죠.

◎ 복지는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그러려면 의식주가 보장되어야 하잖아요. 지하철에서 자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것이 한국 사회이고, 복지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은 행복할 수 없죠. 물론 노숙자들과 공존하는 우리들의 삶도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 무상보육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혜택) 받을 필요 없는 잘 사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곧잘 들었어요. 혜택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불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꼭 갔으면 좋겠어요.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2) 부모와 함께할 권리

청년들이 꿈꾸는 2045년에는 모든 영유아에게 '부모와 함께할 권리'가 주어진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시간적·물질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다. 엄마는 물론 아빠의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이를 위한 양육휴가를 쓸 수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3년 4월, '여성일자리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주희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여성고용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고용과 관련하여 남성과 유사해지는 동시에, 남성은 돌봄과 관련하여 여성과 유사해지게 하는 시민-노동자 돌봄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한국노총, 2013.)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걸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사라져서, 모두가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20대들은 영유아와 아동에게 필요한 미래 복지서비스에 관해 아래와 같이 상상을 펼쳤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육을 위한 기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특히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은 생물학적 존재를 사회적 존재

로 길러내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맞닿는다. 사회적 재생산의 전 과정이 상품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현재의 20대들은 삶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대가 상상한 영유아·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부모 교육의 의무화·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경험하기·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 보장·무상보육·보육을 위한 기본생활 보장·공공보육 확대·어린이 건강(영양)·육아휴직 의무화·보모의 보살핌·공동육아 확대·마을 육아·마을학교·어린이안전(아동학대 방지)·폭력 예방·친구와 놀 수 있는 자연환경·교육과 생필품 무상지원·주민센터에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의무화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영유아' 상상확장판 중

3) 부모 교육과 공동 부모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부모 교육'과 '공동 부모 시스템'은 미래사회의 필수요소다. 20대들이 상상한 2045년에는 아동학대가 중범죄여서, 아이를 학대한 부모는 친권 박탈을 당함은 물론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된다. 20대들은 아동과 청소년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상담 전문가와 경험 많은 어르신이 번갈아가며 '마을 회관'에서 부모 교육을 시행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또한, 청년들은 동네 어르신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공동 부모'로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마을을 상상했다. 필요한 비용과 물품은 국가가 책임지니 경제적 부담은 없다고 했다. 혼자 지내는 노인들이 동네 아이들의 공동 부모로서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그렸다.

20대들은 영유아와 아동에게 필요한 미래 복지서비스를 상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에서도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보다는 학교 밖 배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20대들의 의견을 통해 현재의 '과도학습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시스템이 재정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0대들이 상상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20대가 상상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부모와 학교, 교사, 사회의 변화가 먼저·부모 교육의 의무화·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경험하기·부모의 능력에 무관한 기회 제공·청소년 인권·배움의 자유·무상교육·관심 분야에 대한 경제적 걱정 없는 학습·선택의 자유·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교육·상담서비스 확대·멘토링·자신의 가능성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시험해볼 권리·자립·사교육 금지·예술과 체육 교육복지·직장체험 서비스·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 밖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권리·다양한 미래를 상상해볼 권리·학업의 강요가 아닌 꿈을 찾을 수 있는 환경 제공·폭력 예방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청소년' 상상확장판 중

4) 청년, 먹고살 만하게 해주세요

20대들이 상상한 청년에게 필요한 미래 복지서비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와 일자리를 둘러싼 생계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청년들이 상상한 2045년의 주거복지법은 누구에게나 1인당 최소 33㎡(10평)의 거주 공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45년에는 더는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을 오가는 주거빈곤층 청년세대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0대들은 자율노동을 원하고 있었지만, 타율노동마저 불가능한 한국 사회의 구조 아래, 주거만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을 보장받기를 원했다. 돈이 없어도 밥 굶을 일을 걱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모습에서, 20대들에게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신감 저하와 패배감은 성장한 청년들이 다시 부모의 보살핌 속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을 빚는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청년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찾을 길은 없어 보인다.

20대들은 복지 분야의 5대 불안[46]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20대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는 청년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와 배움을 제공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아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한 뒤 혹여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국가정책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20대가 상상한 청년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마음껏 도전하고 상상할 수 있는 기반·사회진출 기간의 단축·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생활화·자신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 지원·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46. 민생의 5대 불안은 일자리 불안, 보육 및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건강 불안이다.

복지·무상등록금·기초수당·기본소득·비정규직, 계약직 폐지·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지원·마을회사, 소규모 회사 창업 지원·쾌적한 주거·공공임대아파트·보증금 지원제도·주거안정·무상의료·창조경제의 플랫폼화·예술과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환경·청춘을 즐길 수 있는 청춘 서비스·소박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문화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청년' 상상확장판 중

5) 중장년을 위한 이모작 프로그램

20대들이 상상한 중장년에게 필요한 미래 복지서비스는 '새로운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에는 '국민이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근본 원칙이 존재한다. 은퇴해서 일을 못 하게 되어도 월급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로 정한 연금시스템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20대들이 상상한 2045년에는 은퇴 후에도 월급의 70%를 연금으로 받아 새로운 인생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장년층의 모습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중장년 세대의 삶에 대한 20대들의 상상의 폭은 한정되어 있었다. 현재 20대들이 안고 있는 고민인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 탓인지, 중장년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대다수 역시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는 부모세대로부터 '가치'의 전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피해자 또는 피억압자로 생각하는 20대들이 많은데, 실제 자신이 기성세대가 된다면 이후 세대에게 어떠한 가치를 전수하고 싶은지, '자기 위치를 전이할 수 있는 연습'(김현미, 2015.)이 필요하다.

20대가 상상한 중장년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 보장·퇴직 시기 연장·일할 권리 보장·나이 제약 없이 활동 범위를 확장·노년, 노후 대비 계획 및 지원 서비스(이모작 설계 의무)·중장년 취미생활 다양화·창업 지원·은퇴 후에도 경력/능력/전문성 살릴 기회 보장·새로운 직장 복지 개설·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상육아/무상교육 보장·새로운 공동체의 확립·인생 제2장을 꿈꿀 수 있는 공간과 교육 제공·여가 보장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중장년' 상상확장판 중

6) 노인에게 '관계'를

20대들은 남녀노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마을공동체를 상상했다. 특히, 노인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재, 청년세대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고스란히 이입된 것이다.

20대들은 노인과 어린이가 같이 지내는 2045년의 마을을 상상했다.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고 설계해야 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은 20대에게 마을에서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젊은 세대와 함께 어우러지는 노후세대를 상상하게 했다. 그러나 20대들의 노후세대에 대한 미래상상의 폭은 중장년세대에 대한 미래상상보다 더욱 협소했다.

한국은 한해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3.3명으로 OECD 평균 12명의 3배에 달하고, 특히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80.3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이철환, 2015.)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겪는 노후 불안은 청년세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소득의 양극화, 일과 여가의 불균형, 불완전한 고용, 빈약한 사회안전망 등으로 인해 현실적 행복지수는 최저에 달하고 있다. 20대들은 이런 상황에서 도래할 노년기를 미래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이 상상한 '노년'에게 필요한 미래 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20대가 상상한 노년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기본소득 보장·의식주 지원·연금제도·소득 걱정 없이 자기실현·일할 권리 보장·자원봉사·행복할 권리·노후 맞춤형 의료서비스·치매에 걸려도 존중과 보호받는 돌봄 서비스·노년, 노후 대비 계획 및 지원 서비스·관계(친구, 가족, 애인, 젊은 세대와의 교류)·공간/교육/친구 기회 제공·새로운 직장, 복지 설계·공동체 연계·자존감 높은 노년생활·은퇴 후에도 경력/능력/전문성 살릴 수 있는 기회 보장·새로운 직장 복지 개설·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제도·노인 스포츠스쿨·여가생활 무상지원

–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노년' 상상확장판 중

5. 20대가 상상한 복지 미래지표

2009년 스티글리츠 위원회[47]는 "스티글리츠 보고서(the Stiglitz Report)"를 발표했다.

47. 2008년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세계 통화와 금융 체제 개혁을 위한 유엔총회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통령 직속의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구성했다. GDP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GDP가 상승하는데도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지표들이 다양한 삶의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행복 GDP'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GDP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지표 개발을 위한 논의를 촉발했다. 이들은 행복이 물질적 생활 수준의 일차원적 지표가 아님을 강조하며, 새로운 대안 지표는 건강, 교육, 일상생활(일자리, 주거 포함), 정치적 참여, 사회적 관계,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안정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함을 역설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은 GDP라는 객관적 지표가 포괄하지 못하는 인간의 '역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그룹별(계층·성·세대·이민자) 불평등 정도의 측정도 언급했다.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 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경제성장을 따라잡지 못했다. 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48]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셜픽션 콘퍼런스 '복지' 상상테이블 참가자들이 구상한 복지 미래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숙면 시간*
◎ *얼마나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는가*
◎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자연과 얼마나 소통했는가*
◎ *얼마나 자주 내가 눈물을 흘렸는가*
◎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는 몇 개인가*
◎ *내가 얼마나 씻지 않았는가*
◎ *책을 빌려준 횟수*
◎ *광합성 한 시간 (햇빛을 보며 야외 활동한 시간)*
◎ *여행 횟수 (여권 스탬프 숫자)*
◎ *재활용 횟수*
◎ *신뢰지수*
◎ *문화예술생활 지표*
◎ *직업 (이직 횟수)*
◎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시간*
◎ *여가 활용*
◎ *운동 횟수*

한계를 극복할 새 경제지표 연구가 목표였다.

48. 2014년 기준 한국의 '더 나은 삶 지수'는 OECD 36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삶의 만족도·일과 생활의 균형·시민참여·소득·커뮤니티·건강·환경·주거안전·교육·고용 등 11개 세부 평가 부문을 보면 한국은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부문에서 4.2점으로 34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대들은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부터 깨뜨릴 필요가 있으며, 개인이 민간 주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상상했다. 20대들이 상상한 미래복지는 교육, 일자리, 민주주의와 모두 연결된 통합적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다. 20대들이 그려낸 복지 미래지표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잴 수 있는 대안 지표의 척도가 될 것이다.

2장

미래 복지를 위한 제언

앞 장에서 20대들의 현실진단과 미래상상을 살펴본 결과, 청년의 사회권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청년의 현실과 미래를 잇는 징검다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청년에게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49]의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의 성장 패러다임은 경제 성장 이외의 가치를 상실시켰다. 가치 상실의 시대는 부가 편중되고, 자원의 소비가 불균형을 이루고, 생태가 파괴되며, 공동체가 해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 사회는 이제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사회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인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50]라는 말을 되새기며,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청년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정책 전략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상황은 한국의 사회 정책이 더는 사회권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직접 사회권을 찾고자 벌이고 있는 운동은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문제, 알바권리 찾기
◎ 토익·토플 학원에 대한 환불수수료 논란 집중적 문제 제기
◎ 반값등록금 투쟁

49. 패러다임은 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개념, 가치, 인식 그리고 실천으로 구성되는 총체이다. 공동체는 패러다임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을 결정하고 자신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쿤, 1962.)

50.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언급되었다.

◎ 청년주거권 운동

◎ 청년부채 탕감

위의 문제들만 살펴봐도, 20대의 인권을 억압하는 요소가 사회 전반 곳곳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청년층의 등록금 문제, 주거권 문제,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제는 청년의 사회권 회복을 위한 보편적 모델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20대 유권자 단체 '20's Party'는 '20대의 11가지 정책 디자인'을 구상해 반값등록금, 반값통신비, 반값기숙사 운동을 펼친 바 있다.(김미연, 2010.) 이러한 시도는 20대 스스로 악순환의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년이 참여하는 보편적 모델의 실험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청년과 국가가 함께 청년의 사회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의 사회권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청년의 사회권은 모든 시민의 사회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장해줄 수 있는가, 얼마나 복지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은 아직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국이 아니다. 국제조약의 비준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된다. 사회권 규약은 이미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이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는 의문에 대한 답변은, 쟁점이 된 인권의 종류에 달린 것이 아니라(예를 들어, 자유권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사회권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식으로), 궁극적으로 법원이 자유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조효제, 2009, pp.6~7.)[51] 사회권은 법적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사회권은 자유권처럼 보장 여부가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조효제, 2009, p.7.)[52] 사회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이 있어서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해법을 찾는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은채, 2011.) 이것이 사회권을 만드는 시작이다.

51. 결국, 적극적인 인권보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심사 적합성을 판단할 때 그것이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52.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형식적 법규' 모델이 아니라 '실질적 법이성' 모델에 더 가깝다.

1) 청년 주거권의 실현

현재 만들어진 청년정책 대다수는 일자리 관련 정책이다. 청년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고용 불안을 꼽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는 생활의 문제이다. 청년정책을 일자리 정책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53] 비율은 5% 수준으로, 11.5%인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임대주택 보급 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유럽연합(EU) 평균은 약 13%이다.(황정일, 2014.) OECD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12% 가까이 달하는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 주거 안정성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첫 단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재고의 약 32%(2010년 기준)이며, 수도 암스테르담은 61%에 달한다.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은 주택협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김태섭, 2015.)

한국에서도 청년의 주거권 운동을 벌이는 단체와 조합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청년 주거문제를 정책 의제로 만드는 데 주력해온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014년 주택협동조합을 창립했다. 집 없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처지에 있는 세입자를 모아, 원룸 건물을 통째로 빌린 후, 장기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시세의 75% 정도로 낮춘다는 계산이다.(김하수, 2015.) 도시의 버려진 공간이나 빈 공간을 점거하는 스쾌트(Squat) 운동[54]을 통해 청년 주거권 문제를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필요를 사회적 권리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움직임은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의 소중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청년 주거권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이제 갓 시작됐다. 2015년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 대상 장기 종합계획(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고무적이다.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그동안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주거[55]와 부채 줄이기[56], 미래 설계 등 생활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머니투데

53.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 관련 기관이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의 주택을 지칭한다. 무주택 서민층 주거안정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주택가격 상승 억제의 기능을 가진다.

54. 2011년 12월 하자센터에서 진행되었던 청춘콘서트2.0 김여진의 액션토크 '청년들의 주거문제'에서 주거 및 도시설계 전문가인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열악한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청년들이 행동에 나서라고 주문하며 예로 든 저항운동이다. 김 의원은 덧붙여 신축의 개념을 달리 인식해야 한다며, 더 많은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려면 비어있는 빈집의 적극적인 활용에 초점을 둔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55. 사회초년생을 위해 공공주택 30실, 대학생 임대주택 150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56. 소액 채무로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대환대출과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 2015.04.19.)

청년 주거정책은 청년의 자립과 생존을 돕는 방법의 하나이다. 핀란드의 경우, 사회보험 기관에서 주거비 지원을 담당하고, 스웨덴에서는 18~29세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금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은 주거 수요자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수혜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2014, pp.16~17.) 주거 선택의 자유와 가구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고, 주택 재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이 한국의 주거정책에 도입되어야 한다.

국가별 청년세대 주거지원 제도

◎ 네덜란드: 독립지원금 지급 – 당사자 소득수준을 계산, 평균 임대료의 50% 보조
◎ 덴마크: 학생지원금 지급 – 정부 보조금으로 임대료 일부 지원
◎ 미국(뉴욕주): 주택보조금 지급 18~25세 청년들에게 최대 200달러까지 지원
◎ 한국: 공급 중심 정책 – 행복주택, 행복기숙사,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역점
(수요 일부만 충족 가능한 부족한 공급 물량)

출처: 2014년 주택산업연구원,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주거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공공성에 기반을 둔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협동조합형, 공동체형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적 공공자원형 도시재생사업 모형'(김수현, 2011.)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해 '모든 가구가 자신의 필요와 생애계획에 맞춘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생애 단계에 따라 주거의 이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주거권 확보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책 전략들은 세입자 보호제도 강화, 전월세(임대료) 상한제 도입, 주택바우처 제도[57]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법·임대주택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복지기본법[58], 비영리주거모델 지원, 세입자 모임 지원 등이다.(KBS 뉴스, 2014.07.28.) 2015년 5월 29일,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 2015.05.29.) 주택 공급에서

57. 저소득층의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 일부를 쿠폰 형태의 교환권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의 전·월세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 주는 제도.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꼽힌다.

5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5년 4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주거복지기본법은 국가 주거정책의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 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출처: 손선희, "국회 국토위, 취약계층 주거수준 개선 '주거기본법' 통화","아시아경제", 2014.04.30)

주거 복지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노동 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는 주거권을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사회권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 이를 정책으로 보호하기를 권고한다.[59]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 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주거권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pp.19~27.)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주거권이 안전과 평화 안에서 존엄하게 살 권리로 폭넓게 이해되어야 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단순한 지붕이 아니라 '적절한 주거'[60]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도 나이와 경제적 지위, 소속 집단 등의 요소와 상관없이 적절한 주거의 권리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참여의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거를 단순히 지붕이 있는 공간과 동일시한다든가 단순히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등 좁은 의미 또는 한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주거권은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 해석해야 한다. 적절한 주거는 주택 안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주거자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커뮤니티 안에서 커뮤니티 전체의 주거 관련 계획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 주거 실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일-돌봄 시민모델(Worker-Carer)

노르웨이의 일-돌봄 시민모델(Worker-Carer)은 OECD 국가의 정책 중 최고의 정책으로 여겨진다. 이 모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는 필요하면 노동자에서 보호자로 정체성의 전환이 가능하고, 다시 보호자에서 노동자로의 복귀도 가능하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 소속감을 동시에 해결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모두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시스템이다.(김현미, 2015.)

그러나 한국 사회는 노동의 필요와 개인의 욕구가 충돌할 때, 보통 노동을 선택(거의 강제적

59.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09년 11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60. 적절한 주거권을 누리기 위한 요소로 점유의 법적 보장, 서비스·물자·시설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비용의 적정성, 거주 가능성, 접근성, 위치, 문화적 적절성이 꼽힌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pp.21~23.)

으로)하게 되는 환경이다. 일과 양육의 양립 노하우가 국가 정책의 관점에서 재정비되고, 복지와 돌봄 개념의 재정립[61]이 필요하다. 즉, 일-가족 양립정책[62]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는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그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정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대상을 월평균 가구소득 150% 미만 가구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소득별로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최정은, 2015.)

3) 생애주기별 복지프레임

한국 사회의 복지 담론은 주로 정치인과 지식인 사이에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각자 강조점도 다르고 이제 기존의 모델을 배우는 단계이다. 현재는 복지 담론 형성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시민의 언어로 복지 담론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20대들이 요구하는 복지의 흐름과 방향을 읽는 일이 중요하다. 20대들이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제안한 '생애주기별 복지프레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대들은 생애주기별 복지프레임으로의 변화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최악의 취업난을 뚫고 직장을 구하더라도, 20대에게 결혼, 출산, 양육은 버거운 인생의 숙제이기 때문이다. 주거비, 보육비, 사교육비 등 각종 비용 부담과 더불어 아이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의 부족, 그리고 가난한 노후 등 현재 한국인에게는 모든 생애주기에 위험이 존재한다. 생애주기별 복지프레임 아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선 주기의 복지 욕구를 얼마나 적절히 해결하느냐가

61. 불평등이 내재화된 권력 관계(돌봄 필요자가 돌봄자에게 의존하는 관계·돌봄자가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취약한 상황 발생 가능), 타인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비용을 수반하는 일 등 복지국가 정책의제로서 돌봄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출처: 마경희(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돌봄", 『페미니즘연구』제11권 2호)

62. 일-가족 양립정책의 목표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여성이 양육부담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자녀의 양육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가족생활과 노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해서는 '탈 가족화'를, 남성에 대해서는 '가족화'를 유도함으로써 노동의 영역과 돌봄의 영역에 여성과 남성이 모두 평등하게 참여하고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일-가족 양립정책의 목표는 이미 여러 유럽 국가가 공유하고 있고, 나아가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일-가족 양립정책에는 여느 국가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스웨덴의 일- 가족 양립정책은 소극적인 규제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가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출처: 한지희(2010), "스웨덴의 일가족 양립정책",『경기여성정보웹진 우리』제116호)

뒤에 오는 주기의 복지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생애주기별 복지의 이론적 근간"이라며, 뒤에 오는 생애주기의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선 생애주기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봉주, 2015.)

4) 정책패키지 개발

한국 사회에서는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수가 선진국의 3~4배에 달한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층과 1인 가구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시급하다. 주거문제는 주거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주거문제, 교육문제, 일자리문제를 모두 고려한 정책의 동반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책패키지(학자금 부채 압박이 큰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주거지원 정책·구직지원 정책) 개발을 제안한다.

더불어, 모든 주거 유형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거 이동이 손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패키지 조합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저리융자 제도'를 도입해 독립을 쉽게 하고, 결혼하거나 자녀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택구입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은퇴 후에는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주택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정책패키지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투명하고 단순한 시민 공론장과 정책 합의 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의 사회권 확보를 위해서는 '세대론'을 넘어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 미래 복지의 열쇠, 마을

1) 더불어 사는 삶의 제도화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펼쳐진 20대의 복지에 대한 상상은 결국 더불어 사는 삶을 '제도화' 해달라는 요구로 인식할 수 있다. 청년들이 그려낸 30년 후의 한국 사회는 마을민주주의[63]가 구축되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가 한국 사회 복지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는 마을공동체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말이 있다. 마을공동체 운동의 핵심은 그동안 정치인에게 선거를 통해 위임했던 주권과 시민단체의 운동으로 대변되었던 주권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미시적 재구성 과정이고, 시민사회의 새로운 주체 형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세계에 기초한 주민들의 협동적 생활관계망 구축이 '마을'이다. 그래서 마을이 곧 혁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유창복, 2013.)

마을이 사회혁신의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지금, 청년들 역시 마을을 통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사회를 꿈꾸었다. 20대들이 그려낸 미래사회 재구성의 열쇠는 마을공공성과 관계가 깊다. 마을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공동체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해 '좋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주민 자신이 느끼는 생활상의 아쉬움과 절실한 필요(보육·교육·노후·안전·안심 먹거리 등)를 이웃과 함께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갈등해결 프로그램이나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등 자발적 해결의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공동체는 복수의 주민모임이 연결되면서 공통 의제를 합의하고 마을 차원의 공공의제를 도출하는 마을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필요가 친밀한 이웃의 필요로, 나아가 동네와 마을의 필요로 전환할 때 마을이 눈에 들어오고 실감이 나며, 마을 곳곳의 정책이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2) 개인에서 마을로

63.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일상의 문제를 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적 질서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급속한 노령화와 경기침체로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이 고갈되고 저성장 기조까지 겹쳐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복지문제 해결 방식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유창복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추구하려면,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공성을 확장하는 노력을 통해 국가공공성을 견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64] 그러려면 공론화 과정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필요가 다수의 필요로 전환되는 계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개인의 생활상 필요와 관심을 자연스럽게 공공의 관심사로 확장하는 과정은 의사소통의 장을 여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제 주민모임을 어떻게 마을관계망으로까지 확장할지 고민해야 한다.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는 마을만들기의 핵심이 교육과 학습에 치중된 현상에 대해, 장기적 기획이 결여된 단기 프로젝트의 이벤트화, 외연화된 배움이 아웃소싱되는 시장주의적 기획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따라서 마을만들기에는 소속의 준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가치의 전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김현미, 2015.)

마을 형성의 과정은 마을활동가 발굴과 양성의 과정이기도 하다. 주민을 마을의 형성과 어떻게 연결하고, 활동가는 어떤 방법으로 키워내야 하는지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욱 다양한 생태적 삶의 성공 사례와 실험적 삶의 사례에 대한 꾸준한 소개가 필요하다.

3. 패러다임부터 바꾸자

1) 20대가 상상한 미래의 가치구조

앞장에서는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도출된 20대의 현실진단과 미래상상을 통해 종합적으로 청년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20대의 미래상상 속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없었다. 관계와 공유, 협동과 협치를 중요시하면서 정서적 유대감과 자아실현이 바탕이 된 안정적(주거와 일자리)이고 유연한 삶을 그려냈다. 이는 청년정책의 4대 핵심가치가 된다.

64. 그 때에 정책을 만드는 공공의 영역과 주민이 만든 공공의 영역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동시에 이 두 개의 영역이 만들어내는 공적가치가 서로 좋게 순환되고, 확대, 재생될 때에 한국사회는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로 한발 다가간다.(유창복, 2015.)

20대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생태 마을에서의 삶'을 미래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었다. 20대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로는 소통, 융합, 공감, 협동, 공유, 지속가능성, 열린 교육, 건강, 참여, 평화 등의 11대 가치가 도출되었다. 또한, 20대가 추구하는 사회구조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제도, 대안적 교육체계, 참여체계, 법률체계(기본소득, 기초임금 등 사회권 보장), 안전체계, 보건체계, 편의구조, 여가 구조 등 8대 체계가 도출되었다. 이 가치들을 바탕으로 한 '20대 청년들이 상상한 미래의 가치구조'[65]를 밀브래스의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치구조'의 틀에 맞추어 재구성해보았다.

[그림 4-3] 20대가 상상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생태 마을에서의 삶



2) 삶의 재구성

65. 20대가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상상한 미래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한 후, 빈도수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청년들이 상상한 미래가치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의 한국 사회에는 '사회적인 것의 회복'과 '삶의 재구성'이 절실하다. 20대는 통합적 복지정책서비스를 원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 삶'의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존재로, 사회적 인간으로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재구성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괴로운 중간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단위의 프로그램 기획과 제공은 20대의 새로운 삶을 재구성하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프로젝트 기획과 제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단계로,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탐색하여 삶을 재구성하게 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한다. 다음 단계로, 건강한 대안적 삶을 통해 사회를 재구성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청년이 주인이 되어 자신과 이웃의 삶을 재구성해봄으로써 한 분야 또는 하나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광복 100년에는 어떤 모습의 자유와 상호 인정이 충만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을지 상상력의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지속가능한 발전

2015년 5월 5일 자 『주간경향』 기사 "한국은 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됐을까"에 따르면, 한국 해외 이민자들의 국적 포기 건수가 공식적으로 집계 가능한 아시아 선진국과 유럽 일부 국가 중 가장 많았다고 한다.(윤원철, 2015.) 최근에는 명문대 출신의 20~30대가 북유럽 이민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총체적인 안전망 부재와 불공정한 규칙 속에서의 경쟁에 지친 청년세대의 '삶에 대한 불안과 절망을 더는 느끼고 싶지 않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적인 팽창에 집중하는 한국의 성장 패러다임은 경제 성장 이외의 가치를 상실시켰다. 가치 상실의 시대는 부가 편중되고, 자원의 소비는 불균형을 이루고, 생태가 파괴되며, 공동체가 해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 사회는 이제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66]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성장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경쟁·속도·규모의 신봉이 만들어낸 양극화와 생태계 파괴, 공동체 붕괴의 해결은 개별 사안의 문제점 중 일부를 개선하는 것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장 패러다임에서 발전 패러다임으로, 지속 불가능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할 때, 한국 사회가 잊고 있던 가치가 복원되고, 과거의 구조가 가진 문제점이 치유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임금 차별과 학력차별을 용인하는 노동정책, 사교육에 의해 대체된 교육제도, 중증질환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의료보장제도,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개발정책은 사회권을 보장하는 복지제도가 아니다.

청년의 사회권 강화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만족이 아니라 행복의 추구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만큼 책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복지의 궁극적 목표 역시 경제적 만족이 아니라 행복의 추구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청년들이 상상한 것처럼 미래복지는 물질적 복지를 넘어 '생태 친화적이며,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서로의 가치를 전수받고 전수하면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66.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자연 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는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1987년에 발표된 UN 브른트란트(Brundtland) 위원회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 이 용어가 등장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의하고, 이를 탐색하던 여러 주권국가에 다양한 흐름을 안내하는 것이었다. 1987년 노르웨이 전 수상 브른트란트가 3년에 걸쳐 세계 각지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했다.



Part 5
민주주의

1장 청년, 어떤 민주주의를 그리는가
2장 미래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2015년 한국 사회에서는 '생활정치의 실현'이 최우선 과제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사회에서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더 이상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기기를 거부했으며, 청년들 스스로 참여해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성하기를 희망했다. 구체적으로 10대부터 생애주기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20대들은 민주화를 가늠하기 위해 참여와 소통, 자율성과 투명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을 사는 20대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가족 내 민주주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주의가 일상의 영역에서 실현되려면 사회적인 것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성찰과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바랐다.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과 학습자의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책임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에 참가한 20대들은 정치 냉소, 정치혐오, 정치 무관심 등의 단어로 일컬어지는 청년세대가 아니었다. 청년들이 30년 후 구현되길 바라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우선 1인 1표의 조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 투표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의 확대는 필수요소가 된다. 더불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2015년 청년들을 위해서 높기만 한 피선거권의 진입 장벽을 보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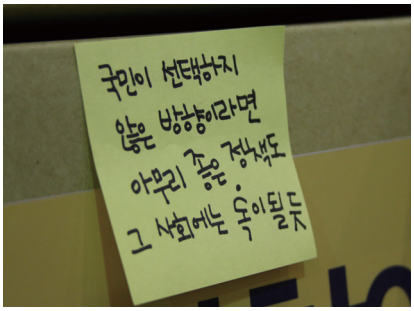
시민성과 주인의식을 키울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가장 먼저 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학교 밖에서 민주시민교육체계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시도를 널리 알리고, 시민이 시범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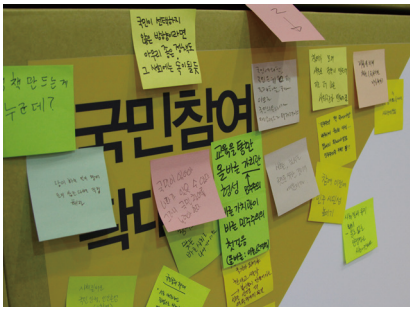
민주주의의 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시민참여 모델과 방법론이 확산되어야 한다. 더 나은 시민과 더 나은 삶을 이루며,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민민주주의의 공론장이 마련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숙의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방법론에 대한 시도와 실험을 지속해 성숙한 토론문화를 끌어내야 한다.

1장

청년, 어떤 민주주의를 그리는가

[그림 5-1]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상상확장판





1. 내 곁의 민주주의

2014년 6월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67]은 2013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노르웨이(9.93), 스웨덴(9.73), 덴마크(9.38) 등 북유럽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0점 만점 중 8.06점을 얻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평화로운 두 번의 정권교체(two turn over)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경이로운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국가로 인정받았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이제 권력자들이 자신의 통치 기한을 연장하고자 헌법을 뜯어고치는 일은 사라졌다. 제도적으로도 공정하고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는 등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5년 지금, 우리의

67.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영국의 시사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로 1946년에 설립되었다. 200여 개국의 국가별 경제, 정치 전반에 대한 공시적 분석, 중장기적 통시적 예측 및 각종 거시경제 산업 지표를 제공한다. 국제적 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관이며 전 세계 200여 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폭넓은 연구 범위를 자랑한다. (출처: 위키백과(ko.wikipedia.org))

가정과 학교, 사회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민주주의를 느끼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과연 얼마큼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지 의문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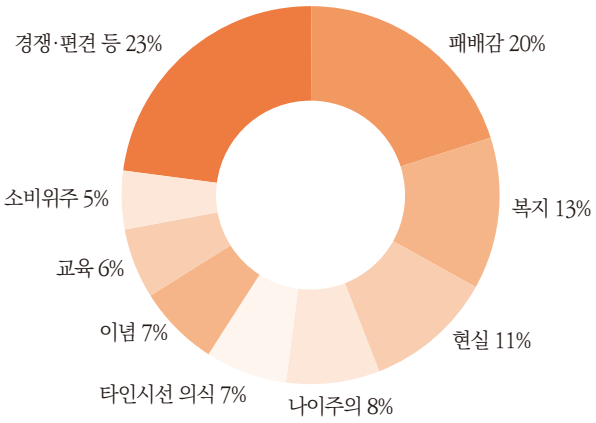
> *좋은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 세 명만 모여서 시작하면 돼요. 먼저 친한 사람을 초대해서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상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스토리가 생겨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닥치고 실천!'이에요. 아주 세세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려고 고민하다보면 평생 못할 거예요. 그보다 작은 실천이라도 하다보면 돼요.*
> *('일상의 민주주의와 생활정치가 활성화되려면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
> *– 30대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 인터뷰 중*

1) 소박한 일상의 민주주의

20대 청년들은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거대담론보다는 '일상적이고 소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상상했다. 이는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와 청년세대 소통 담론에서 늘 등장하는 갑을관계 속 '을'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 20대들의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 20대들은 자신이 일상에서 '주권을 가진 개별화된 시민'임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다.

20대들이 꼽은 '2045년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 중에는 '나이주의 권위주의와 위계주의 수직적 조직문화'(8%)가 존재한다. 청년들이 억압적인 구조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곧 '말대꾸'가 되는 문화'를 탈피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 나의 선택은?'이라는 질문에는 협력 참여 (50%), 경쟁 대립(25%), 양보 순응(22%), 회피 보류(3%)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5-2] 2045년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



출처 :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 년 , 대한민국의 상상'

20대들의 소통 담론은 비단 이번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새롭게 등장한 주제는 아니다. 신자유주의 문화는 불안을 관리하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 능력주의, 자기계발 논리 속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 문화는 '친구'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만들었고, 스펙을 쌓지 않으면,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내몰리게 했다.

앞서 소개한 '2045년 미래를 상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을 살펴봐도 이러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경쟁 편견(23%), 패배감(20%), 타인 시선 의식(7%) 등 20대들이 꼽은 제약조건의 절반가량이 이들이 생존경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세대임을 증명한다.

20대는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와 완고함, 기득권 집착에 반감을 보이기도 한다. 생존경쟁에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들을 더 절망하게 한다. 기성세대는 '노력 부족',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 '사회문제에 관심 없는 요즘 애들',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 등의 말로 청년들을 가볍게 대한다.

그러나 위의 제약조건을 살펴보면, 기성세대의 인식과는 달리 청년들에게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들이 각자의 고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시선 너머의 '두려움'이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태도가 좋은 직장 취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누군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을지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청년들의 미약한 움직임은 좀처럼 한 데 모이지 못하고 있다.

2) 가족 내 민주주의부터

20대들은 가장 먼저 가족과 연인 사이, 학교와 직장에서부터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원했다. 가족 내 민주주의에서 출발해 사회 기본단위의 수평적 관계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비로소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피력했다.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상상테이블에 참가한 청년들은 민주주의가 일상의 영역에서 실현되는 것에 유독 관심이 컸다. 특히,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 소통 문제, 공감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는 '사회적인 것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20대들이 스스로 삶을 생산하고 재생하며, 자신의 힘으로 서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싶어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95%의 인구를 '루저'라는 테두리에 가두는 사회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의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공간을 만드는가에 대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진지한 성찰로도 볼 수 있다.

한국과 유사한 식민, 탈식민과 건국, 그리고 개발의 시대를 거친 싱가포르에서 가족은 '팀워크(teamwork, 공동작업)'를 추구한다.[68]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에게 가족 재생산 노동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자녀들은 거의 주체적인 노동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로 성장한다. 그래서 위기를 맞으면 전통적인 공동체(가족, 어머니)로 회귀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김현미, 2015.) 한국 사회에서 가족 내 민주화부터 이루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 정치에 국한된 민주주의가 아닌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도 존재해야 한다.
◎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직급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제안하지 못하는데 참 안타깝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소통을 했으면 한다.
◎ 총장도 학생이 뽑고, 생애주기별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 노조의 사장 선출이 가능한 사회를 꿈꾼다.
◎ 직장 내 수평적 관계, 토론의 증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 사회적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민주주의도 성숙할 것이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68. 싱가포르는 1987년부터 결혼·가족 패키지 정책(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s)을 마련해 저출산 극복에 나섰고, 2013년에는 지원 영역을 결혼·주거·자녀양육·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일과 가정생활 양립·아버지 양육 참여 등 6개 분야로 확대했다.(연합뉴스, 2014.)

2. 정치와 나

당(새누리당)에서 정치도 해봤는데,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 청년이 정치활동을 한다 하면 "국회 무급인턴에서부터 정치를 배워라"라고 한다. 이러면 세대갈등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도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1) 나를 대변하라

20대들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기를 원했다. 대학 총장, 학교 교장은 학생이 직접 뽑고, 기성세대가 아닌 동년배가 또래의 관심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를 그렸다.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확장판 '내가 고르는 정책 우선순위- 국민참여 확대 vs 사회질서 유지' 선택란에 참가자의 87%가 '국민참여 확대'를 선택했고, 13%만이 '사회질서 유지'를 선택했다. 또한, 20대들은 2045년에는 '15세 중학생 국회의원'이 등장하는 등 생애주기별 대표 국회의원(10~30대 포함)의 비율을 30%대까지 높이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 15세 최연소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젊은 청년의 정치참여율 증가, 참여에 제약을 두지 않는 시스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투표, 투표 접근성의 증대와 함께 쉬운 투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2045년에는 생애주기별로 각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동, 구에서 열리는 행사에 개선점과 제안을 개진하고 논의한다. 문제는 주민들이 개선을 시도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퍼실리테이터 김승수 씨 발언 중

2015년 1월 한국리서치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47.2%로 과반수에 육박했다.(임석규, 2015.) 2014년 『한국대학신문』의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에서는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83.8%)이 '있다'는 응답(16.2%)의 다섯 배를 기록했다.(신하영, 2014.)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청년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정치, 나도 좀 합시다

20대들은 시민이 언제든지 대표를 불러낼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원했다. 필요할 때 대표를 불러 정책을 제안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다. 또한, 풀뿌리 조직에서 마을공동체, 대안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을 하며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내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다. 20대들은 "정치에서도 학력 제한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이유는 그들이 직접 정치의 주체나 수혜자가 되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생활정치'는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의 정치 행위가 지닌 미학적·도덕적·경제적 가치를 경합시키는 것으로, 삶의 불안정성과 피폐함과 싸우기 위해 위계화·범주화된 인간의 삶들 사이에서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김현미, 2009.) 20대는 물건을 고르는 소비자처럼 자신이 정치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를 원했다.

저는 얼굴마담, 혹은 상징적인 인물이 정치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무엇보다 실무능력이 있어야 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의 구성원은 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이고, 시민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비자는 권리만 있죠. 그 의무이자 권리 중의 하나가 자기가 바로 서는 게 아닐까요. 건강한 시민이 되는 게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가 바로 서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고 세력이 되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경쟁하고 문화를 형성해가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여럿이 해야 해요.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같이 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 2014년 용산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서정원 씨 인터뷰 중

◎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있는 곳에서 시민들이 토론하는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2045년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민들이 대표와 함께 모일 것이다. 권력의 집중이 아닌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정치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청년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하면,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 같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3. 민주주의, 제대로 하려면

1) 목소리를 내야한다

스웨덴에서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가능했던 것은 '공동체가 기본 인권과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사회 구성원이 이를 위한 희생(세금)을 어느 정도 감수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공익을 위한 재산권 규제와 분배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내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아 정치 혹은 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정치는 정당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등으로 인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허울뿐인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을 담보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 프레임을 넘어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당과 정치인, 시민단체가 있고, 선거를 통해 이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사법 체계와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학연·지연·혈연에 따라 지지자를 결정하거나 정치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현재의 정치 풍토에서는 누가 정치가가 된다 해도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

◎ 반값등록금 사례처럼, 정치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결책은 낼 수 없다. 청년 활동가와 대표자가 나와야 한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2) 먹고살 만해야 한다

20대들은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원하는 미래사회'로 무엇보다 먼저 '먹고살 만한 사회'를 꼽았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으므로, 공적 부조의 확대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들은 386세대가 민주화라는 승리를 이루어 낸 것처럼, 지금의 청년세대에게도 30년 뒤, 승리로 기념할만한 무언가가 생길 것이라는 바람을 표현했다. 경제적 민주화와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사회적 안정'에 대한 정의를 둘러싼 토론으로 이어졌다.

◎ 승리의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과거로 회귀한다. 청년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역사적 경험, 축제의 방식으로도 (현 체제에)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거리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세력화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직접 일구고 만들어 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2045년에는 우리가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4. 시민성에 대한 성찰

20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민주적 시민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적 시민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자세로는 자신에게 강요된 억압에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세와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적인 자세와 열린 마음이 꼽혔다. 이러한 자세는 공교육과 가정교육(부모교육 포함)을 통해 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도출된 청년들의 의견이다.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과 학습자의 성공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책임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1) 협력과 참여

20대가 민주적 시민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자세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협력과 참여의 태도이다. 소셜픽션 콘퍼런스 20대 참가자의 절반이 상대와 의견이 대립할 때, 또는 본인이 제안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적 자세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의견은 어찌 보면 이들이 겪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반증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20대는 자신의 생존을 염려하며 지내야 하는 세대이다. 입시와 취업 등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 갑갑함을 느끼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 나의 선택은? → 협력과 참여 (응답자의 50%)

◎ 같은 위치라면 협력과 참여를 택하겠다. 단, (상대가) 상사라면 양보와 순응을 택한다

◎ 상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돕는 게 조직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참여가 있어야 협력도 있다. 협력하면 함께 한뜻으로 모이고 갈등이 줄어든다
◎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
◎ 입장을 다 들어야 존중받는 기분이 들고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다른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각 주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 협력해서 최상의 답을 찾는 게 윈윈전략이다
◎ 윈윈을 위해 대화 나누기,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서로의 욕구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 무조건 이야기를 나눈다
◎ 모든 사람은 다 답을 알고 있다.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다
◎ 일은 되어야 하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합의점을 도출한다
◎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해도 끝까지 대화를 시도한다
◎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함께 이야기한 뒤 다시 본론을 이야기하며 협력한다
◎ 다른 사람과 나의 문제이다. 당연히 협력과 참여로 함께 풀어야 한다
◎ 자신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거나, 나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방관자의 태도에서 벗어나 잘못된 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 타협 정치의 복원을 원한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상상확장판 중

2) 저항과 거부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질문에 '경쟁과 대립'(25%)이라는 답을 택한 참가자들의 자세는 '회피와 보류'(3%)를 택한 참가자들의 자세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경쟁과 대립'을 택한 참가자들은 때론 자신에게 강요된 억압에 대해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69] 특히,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받을 때는 저항,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상대의 태도에 따라 동일 인물이어도 대응이 달라졌다. 이러한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민주주의와 소통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 나의 선택은? → '경쟁과 대립'(25%)

◎ 본능적으로 경쟁과 대립을 선택하게 된다

69. 이번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에서 사용된 '경쟁과 대립'이라는 단어는 '자신에게 강요된 억압에 대해 저항, 거부할 수 있는 자세'를 뜻한다.

◎ 시시비비를 가린다.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결판을 낸다
◎ 좁혀질 수 없는 차이로 인한 문제라면 인연을 끊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 협력, 참여하려 하지만 자기주장이 센 편이다
◎ 협력, 참여, 양보 등의 미덕을 알지만, 가끔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 나의 선택은? → '양보와 순응'(22%)

◎ 다른 사람의 의견에 순응하면서 대화와 함께 서로의 이견을 조율한다. 서로가 양보하며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 주로 순응한다. 분란을 좋아하지 않는다
◎ 소수의견도 들을 수 있기를
◎ 사람은 사랑으로 감싸면 된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먼저 실천하며 양보할 것이다
◎ 나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오지 않으면 다 양보 순응한다
◎ 나를 나로 가두지 않고, 배려하고 한숨 돌려 이해한다
◎ 양보와 순응을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 나의 선택은? → '회피와 보류'(3%)

◎ 논어의 '위정', 공호이단 사해야이(功乎異端 斯害也已). 나와 다른 생각의 사람을 공격하면 손해만 될 뿐이다. 이단(異端)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상상확장판 중

3) 교육이 첫걸음

20대들은 민주적 시민의 자세로 꼽은 협력과 참여의 자세를 가지려면, 먼저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하며, 바른 가치관이야말로 바른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필요한 교육은 이론과 경험이 골고루 내재한 교육으로, 지식 전달이나 성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책임질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시민 교육'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정치와 사회참여, 민주주의 교육 등이 기본교육이 되어야
◎ 민주주의와 참여는 기본교육 과정이 되어야
◎ 지역참여 교육제도의 의무화가 초·중·고에 도입되어야

◎ 부부교육, 형제교육의 형태로 가족단위의 민주주의 교육이 확대되어야

◎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참가자 의견 중

5. 20대가 상상한 민주주의 미래지표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참가자들이 구상한 민주주의의 미래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치인들이 온라인에서 욕먹는 횟수

◎ 정치인의 투명성 척도

◎ 정치의 질적 평가 확대 (평가자는 대표성 있는 시민)

◎ 정당 수 증가를 통한 다양한 의견 공존

◎ 건강검진 시 소통능력검사 의무화

◎ 기업별 소통지수 측정 (국가지원금 지급)

◎ 공감능력 척도

◎ EDP (감정민주지수, 정치영역 외에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정도를 가늠하는 지수. 가족, 직장에서 내 감정이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되었는지 등)

◎ 국가경제민주화 지수

◎ 근무능력 평가 ('협력'의 가치에 중심을 둔)

◎ 자기 애정, 자기선택 척도

◎ 소외 없는 측정 도구로 '소외지수'에 참여·협력 포함

◎ 여유지수

◎ 자기성찰지수

◎ 신문 읽은 횟수

20대가 상상한 2045년에는 단순히 투표율뿐만 아니라 참여와 소통, 자율성을 측정하는 지수들이 민주화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소통과 관련된 지수들을 살펴보면, 현재 20대들이 얼마나 소통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치인의 투명성 척도 지표'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대들은 민주적 소통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정치인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과 참여를 통해 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에서 그려낸 '2045년 미래상상 뉴스'의 정치 관련 뉴스 내용을 소개한다.

'2045년 미래상상 뉴스' 리포트 내용

◎ 2045년엔 '사랑당'이 만들어져 15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15세가 투표권 얻는 세상이 아니라 당선되는 세상을 꿈꾼다.
◎ 2045년 통일 대한민국이 드디어 OECD 국가 중 EDP(emotion democracy percentage) 즉, 감정민주지수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모든 국민이 감정의 민주화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질적평가 기준으로, 서로의 진심을 지표로 나타냄으로써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 소셜픽션 콘퍼런스 '민주주의' 상상테이블 '미래지표' 중

2장

미래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앞장에서 살펴보았듯 청년들의 미래정치 비전은 소수 엘리트 계급이 다수의 시민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거부한다. 이와 같은 20대의 미래비전은 평범한 시민이 지역공동체의 살림살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실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것이 참여민주주의다.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의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일에 참여하는 지역참여 예산제 등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현되며, 곧 민주정치가 실현되는 길이다.

민주주의는 '연대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세대 내 연대와 세대 간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세대부터 기성세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이후 국가는 자본가/투자자로 자신을 스스로 바꾸어 통치성격을 변화시켜 왔다. '극단적' 통치전략을 통해 국가의 문제들을 개인의 해결에 맡기며, 국가의 책임을 은폐해왔다. 이로 인해, '국가 없음'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정치 난민'도 급증하는 실정이다.(김현미, 2010.) 용산참사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 청년들 모두 정치 난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보수적 공동체로 회귀하려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패'의 세력이 아닌 '연대'의 세력으로 혁신을 일구어야 한다.

좋은 삶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점검할 것들

- 가족 내 민주화가 이루어졌는가 (성역할 이분법·세대간 노동·종내 경쟁 탈피)
- 장시간 일하는데 물질적 삶이 풍요로운가 (워킹푸어·빚더미 중산층 탈피)
- 평생 공부하는데 지성적인가 (과도학습 '학력인증' 탈피)
- 평화, 안전,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는가 (비인간에 대한 관심 필요)

출처: 김현미(2015),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한국청년, 삶의 '재배열'"

1. 투표율을 높여라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투표율이 최하위 수준이다. "OECD 사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투표율은 46.1%로 OECD 국가 평균 투표율 70%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보다도 낮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한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투표율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낮은 투표율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해도 안 바뀐다'는 인식, 정치 냉소와 정치 혐오를 정치 비판으로 착각하는 세태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012년 9월 참여연대는 투표 불참의 원인이 투표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과도 관련 있다며,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2.) 경남대 이재영 박사는 "투표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령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30%라면, 외피로서는 민주주의이지만 내피로서는 30%의 의사만 반영된 통치자가 통치를 해 30%에 의한 독재가 되는 꼴"이라고 설명한다.(김용한, 2014.)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원활한 투표를 도울 방안을 더 찾아내고 도입해야 한다.

유권자 의식조사 진행

◎ 제19대 총선 투표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179명)를 대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과반수 정도인 52.8%가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고 응답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비투표층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추정됨. 다음으로는 '정치에 관심 없어서'(14.5%), '개인적 일/시간 때문에'(11.0%),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10.0%),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8.4%), '귀찮아서'(1.6%) 순으로 조사됨.

⦿ 대부분 계층에서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높은 가운데, 20대는 '정치에 관심 없어서'(23.3%), '개인적 일/시간 때문에'(21.1%)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투표를 못한 이유로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다.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임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8%로 나왔다. 비록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지만 제약 상황에 놓인 유권자가 많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이는 선거일을 하루에 국한하지 않고 더 확대하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4.11)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pp.27~28

1) 투표율 상향 정책

호주 및 유럽 국가[70]의 투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참정권을 얻기 위한 노력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국가들에서는 투표를 의무로 인식하고 있고 국가가 제도로 투표 참여를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물론 투표율이 높은 국가들이 모두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OECD 국가별 투표율을 보면 덴마크 87%, 스웨덴 82%, 오스트리아 81%, 네덜란드 80%, 뉴질랜드 79%, 독일 78%, 노르웨이 77%, 스페인 75%, 일본 67%, 핀란드 65%, 영국 61%이다. 이 국가들은 별도의 벌칙이 없는데 투표율이 높다. 벌칙 부과 등 의무투표제의 강압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사전투표제는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든 제도이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미리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2014년 5월 30~31일 전국에서 사전투표를 시행했다. 전국 읍면동사무소 총 3,506곳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외여행자를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배려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지방선거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었다.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과 달리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68.4%, 1998년 52.7%, 2002년 48.9%, 2006년 51.6%, 2010년 54.5%를 기록했다.(주간경향, 2014.05.27.)

70. 오스트레일리아 95%, 룩셈부르크 92%, 벨기에 91%. (출처: OECD 통계표(stats.oecd.org/index.aspx))

[표 5-1] 주요 국가의 사전투표제 운영 현황

국가	기간
미국	- 선거일 전 2일~1개월 (주별로 다른 사전투표 제도) - 조기투표, 조건 없는 부재자투표, 조건부 부재자투표, 전면적 우편투표 등으로 분류(제주발전연구, 2014, p.6.)
일본	선거일 공시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기일 전 투표)
캐나다	선거일 전 3일
오스트레일리아	선거일 전 2주
스위스	선거일 전 2~4일
스웨덴	선거일 전 18일 (가장 개방적인 사전투표 시스템 운영)
덴마크	선거일 전 3주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10),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 현황과 국내 도입 방향"

한국의 대선 투표율(약 60~70%)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투표율이 50%이고 당선자의 득표율이 50%라면, 전체 유권자 중 25%의 지지만 받은 셈이다. 무려 75%의 유권자가 자신이 표를 던지지 않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을 대표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 후보가 일정 수준의 표를 나눠 가질 경우 30%대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당선자의 권력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른바 '정통성'[71]이 부실해지는 것이다. 유권자가 당선자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게 되고, 당선자는 흔들리는 리더십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당선자가 최종적으로는 50%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72]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웨덴은 후회투표제를 인정하는 나라이다. 사전투표를 했더라도 선거 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다시 찾아가 재투표를 할 수 있다. 다소 과도해 보일 수도 있지만 투표권을 질적으로 최대한 보장하려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71. 어떤 사회에서 그 사회의 정치체제·정치권력을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는 일반적 관념. 정당성(正當性)이라고도 부른다. 국가 통치권이나 조직의 지도력은 정통성이 있어야만 국민 또는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복종이 이루어지고 그 권력은 권위를 갖게 되어 안정된 지배가 확립된다. (출처: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2010.3.25., 새정보미디어)

72.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충분한 수(과반수 혹은 4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 제도를 말한다. 이회투표제라고도 한다. 결선투표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의회나 대통령선거에 사용되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ko.wikipedia.org/wiki))

투표자에게 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도 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하원의원 선거 때 집에서 투표소까지 왕복할 수 있도록 국영 철도요금을 70%까지 할인해주는 등 교통비를 지원한다. 일본에서는 투표자 인센티브제를 선거세일[73]로 부른다. 일본에서 투표확인증은 투표참여로 인한 출근 지연이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나 단체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투표확인증이 투표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다.(고선규, 2010.) 비영리단체 '나는 시민이다' 이재영 대표는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과 간접세금을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다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한다.(김용한, 2014.)

2) 정치 진입 장벽의 제거

2014년 6.4 지방선거에 용산구의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서정원 씨는 기탁금제도와 선거비용 등 높은 진입 장벽이 시민의 정치생활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며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서정원, 2015, pp.148~153.)

"한국의 선거제도는 후보자가 '기탁금'을 내고 참가 자격을 얻도록 하고 있다. 후보 자격을 갖춘 다음에도 엄청난 '선거비용'을 들여야 완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정치 신인의 데뷔를 어렵게 하는 진입 장벽임이 분명하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정치권도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할 텐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젊은 사람들에게 전혀 유리한 방식이 아니다."

[표 5-2] 주요 국가의 기탁금 현황

국가명	기탁금액	반환기준	비고 1인당국민소득 (US$)
영국	500파운드 (945,000원)	총 유효투표수의 5% 이상 득표 시	36,298
일본	300만엔 (32,000,000원)	총 유효투표수의 10% 이상 득표 시	42,325

73. 한국에서는 '투표참여캠페인'이라 지칭하는 개념의 캠페인이다.

캐나다	1,000캐나다달러 (867,000원)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 득표 시	45,888
호주	350호주달러 (271,000원)	총 유효투표수의 4% 이상 득표 시	54,869
뉴질랜드	300뉴질랜드달러 (165,000원)	총 유효투표수의 5% 이상 득표 시	31,588
오스트리아	미화 430달러 (570,000원)	기탁금 반환 안됨	43,723
싱가포르	8,000싱가폴달러 (5,480,000원)	총 유효투표수의 12.5% 이상 득표시	42,653
한국	15,000,000원	총유효투표수의 10% 이상 득표시	20,165

출처 : 이종문 (2010), "기탁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입후보 진정성 제고 방안", 『선거연구』 제 2 호

이종문은 2010년 기탁금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기탁금제도가 재력이 미약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에서 경쟁을 제한해 민주 선거의 기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은 기탁금 규정이 없고,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소액의 기탁금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연구는 현재까지 치러진 선거 관련 통계를 분석해 기탁금 제도와 후보자 수의 관계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해 출마의 진정성을 담보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투표제 보완 외에 청년 스스로 후보가 되어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정치혐오와 정치 냉소, 정치 무관심은 청년들이 원하는 시민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낸 청년 정치인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청년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는 사례 #1

아나 미 아렐스레브 (Anna Mee Allerslev)
코펜하겐 시장·30대 초반의 한국인 입양아 출신 여성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코펜하겐시 남부의 그레베(Greve)시에서 성장하고 학교에 다녔다. 19살이 되어 정치학을 공부하기 위해 코펜하겐시로 이주해 지금까지 살며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다. 코펜하겐대학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코펜하겐 시장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법학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정치에 대한 토론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환경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언제나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면 그 상황에 끼어들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의 포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정치학을 공부하며, 그와 같은 포부는 정치적 약속과 책임으로 변화해 사회자유당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정치적 고향을 찾았으며,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출처: 서울시 런던-코펜하겐 사회혁신 연수 (2014), "런던에서 코펜하겐까지, 시민소통 참여로 만들어가는 사회혁신의 현장", 『2014 서울시 기획연수 사전자료집』, p.74

청년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는 사례 #2

서정원

2014년 6.4 지방선거 용산구의원 무소속 후보

Q.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A. 첫 번째로는 너무나 높은 진입 장벽. 진입 장벽 중 하나가 기탁금이라는 건데, 다른 나라는 기탁금이 한 달 생활비 정도에요. 우리나라는 기탁금이 높은 편이라 마을활동이나 공적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선거비용을 투표율에 따라 국가에서 보조해주잖아요. 10%를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50%를, 15%를 득표하면 100%를 보전해줘요. 그러다 보니 돈을 써서 표를 얻어야, 선거에서 이기거나 비용 보전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돈을 얼마나 쓰는지가 표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선거 과정에서 대면하게 된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참 힘들었어요. 연령별로 달랐는데 노인들은 무척 보수적이어서 '여성, 진보, 젊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노년층 대부분은 투표를 성실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반면 젊은 세대에게 느낀 것은 정치적 무기력감과 패배주의였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선거운동하면서 "왜 그 더러운 정치판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어차피 당신도 거기 들어가면 똑같아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젊은 세대가 살면서 정치적 효능감이 낮을 수도 있고,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선거 기술이 부족했던 게 힘들었어요. 선거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부족했어요. 선거도 하나의 프로젝트잖아요. 게임의 규칙(에 대한 지식)과 자원을 동원하고, 사람을 운영하고, 조직하는 능력이 아예 없었죠. 훈련된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의 기술이 부족했어요. 특정한 사람들만이 향유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운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습하거나 내면화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몇 정당에서 선거 아카데미가 열리긴 하는데, 시민사회에서도 준비해줘야 하지 않나 싶었고, 이런 교육이 일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처: 서정원 씨와의 인터뷰

청년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는 사례 #3

김승수

똑똑도서관 관장·30대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임

Q. 일반시민들은 왜 자신이 대표가 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까요.

A. 귀찮기 때문이죠. 동대표 하면서 느낀 것은 국회의원이나 시장, 동대표 모두 규모만 다를 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기반해서 실제 정책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역할이나 맥락은 다를 게 없어요. 리더를 욕하기는 쉽지만, 사람들은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해보라고 하면 책임지기 귀찮아해요. 동네 일이나 동대표는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리더의 결정을 관망만 하고 있을 뿐이죠.

Q. 그렇다면, 구의원 등 정치적 대표가 되는 건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A. 정치를 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정당 공천도 받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평범한 일반 주민이 할 수 없는 구조에요. 구의원 등의 선거에 나가려면 열심히 동네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정치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감이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 정치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없지요. 아마 많은 분이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막기 위해서 선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당이 있어도,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정당이나 정치인 사례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동네 일을 한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라고 말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좋은 리더'를 뽑으면 돈도 절감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데,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하죠.

Q. 대표 활동의 보람을 꼽는다면요.

A. 보람이라면 지금도 그때를 그리워하는 주민들에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함께 활동했던 주민들이 언젠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오겠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젊은이들이 많아져서 그들 중 동대표도 나오고 정치도 해야 해요. 그래야 삶과 정치가 같이 호흡할 수 있어요.

출처: 김승수 씨와의 인터뷰

3) 총론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정치적 무기력감과 패배주의, 정치 냉소, 훈련된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 기술 부족, 책임 회피, 최선이 아닌 최악을 막기 위한 선거 등이 투표율 저하의 원인이다. 정치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 선거 때마다 남발하는 공약들, 반복되는 공약 불이행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이어지게 한다. 정치권의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2002년 11월 광화문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대규모 시민 집회 문화가 정착하고, 노유진의 정치카페[74]와 같은 정치 관련 팟캐스트의 다운로드 수가 4,200만 회 이상을 기록할 만큼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욕구는 적지 않다. 청년세대는 이 같은 현상에 더욱 민감하다.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유권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한다면, 한국 사회의 투표율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2.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완결된 내용과 형태의 민주주의가 존재해서 그것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공동체 운영의 원칙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려 애쓰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 상황, 수준을 구성원이 함께 평가하고, 더욱 민주적인 공동체 운영의 방향 설정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현하는 과정이다.

한국의 교육은 그동안 주입식이고 체제 순응적인 특성, 일상적 감시와 규제 아래 국가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의 교육이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20대 청년들의 절실한 요구를, 이번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75] 그 방향 설정 작업의 하나로, 공교육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생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라도 부여해보면 어떨까.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74.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이 진행하는 팟캐스트로, 현재 팟캐스트 다운로드 횟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정치 관련 팟캐스트가 재미만을 추구하거나, 너무 음모론적 해석에 치우쳤다면, 노유진의 정치카페는 사실에 근거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들이 다루는 소재는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환경, 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 노유진의 정치카페 방송분 중 14가지 꼭지를 뽑은 책 "생각해봤어?"가 출간되었다.

75. 본 연구보고서 p.132 참조. (Part 5 1장 4. 시민성에 대한 성찰)

무엇보다 자신의 욕구와 의견을 개진하고, 갈등에 직면했을 때 타협 혹은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세와 협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욱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의 변화까지 끌어내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요구되는지 연구하고 실험해야 한다.

투표율이 낮은 한국에서 명실상부한 제1당은 '무당파'가 되었다. 정당이론의 패러다임을 개척한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는 "투표 불참자 수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억압된 크기를 보여준다"고 했다.[76] 이 논리를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 사회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20대의 무책임 때문이 아니라, 20대의 요구를 반영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성 정당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의제, 정당, 언론 등 민주주의의 기본 틀 자체가 위기에 빠져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새로운 국가경영 모델에 대한 요구가 절박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상부구조 자체가 문제이다. 시민이 나서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성찰하는 시민이 부족하다. 민주정치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시민 의식의 내면화와 정착이 필요하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국가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 정치교육 등으로 다르게 지칭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음선필, 2013)의 정의는 다양하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정치 현상에 관한 지식과 정치참여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해, 책임 있는 정치 행위의 주체가 되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배우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사회의 여느 공간보다 철저하게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고 지키는 공간이어야 한다. 학교는 사회의 진전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학생들과 배우고 나누는 공간이므로, 교사와 학생은 학교 운영에서 이 같은 학교의 성격을 철저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 안 민주주의 교육의 방향을 세우고 내용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의 근본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교가 지켜야 할 원칙과 민주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수원시평생학습관, 2014.)

76. "광범위한 투표불참에 대한 책임을 인민의 무지·무관심·무기력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동체 내의 좀 더 부유한 계층이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행태이다. 이는 어떤 정치 제제에서나 늘 하층계급의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논리다. 이보다 더 나은 설명이 있다. 기권은 투표 불참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선택지와 대안이 억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샤츠슈나이더 (2008), "절반의 인민주권")

한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내지는 '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공교육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주로 사회 과목에서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함에 따라 범 교과[77]로서 민주시민교육이 도입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 덕성 교육 등 이름과 내용을 달리해서 진행되기도 하고, 일부 자치 교육청에서는 재량권 안에서 교재를 편찬하고, 학생에게 사회참여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여전히 제도화 수준이 낮고, 여건상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공교육의 틀 안에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민주시민교육의 국제 동향

스웨덴의 '시민교육'은 성인교육 정부 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시민교육에 재정 지원을 하지만, 정부 통제로부터는 자유롭다. 스웨덴의 시민교육은 다양한 NGO 부문과 강한 유대를 맺고 사회 변화를 주도한다.(주은경, 2010.)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체계를 잘 갖추고 있고,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기구와 노조, 교회, 정치재단, NGO 등에 의해 학교 밖에서도 정치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연방정치교육원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교육에 반영되도록 조율자이자 지원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방정치교육원의 활동은 정치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민교육'을 학교 교과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국 시민교육의 중심에는 "학생은 시민이다.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학교가 가르쳐야 한다"는 명제가 놓여있다.(김원태, 2012.) 2001년 영국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Skills)가 국립교육연구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에 의뢰한 '시민교육의 효과와 성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교육은 분명히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사회 기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78]

77. 경기도 교육청은 2014년 3월, 창의지성교과서의 일환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 (2014.02),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2014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워크숍, 경기도교육북부청사. 4종을 개발해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교과서들은 교육지표 '더불어 사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실현과 창의지성교육을 통한 '자기 생각 만들기'를 위해 2013년 11월 개발되었다.

78. 시민교육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교육은 분명히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와 기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치참여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불어넣었다. 둘째, 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역시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조가 인상적이다.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연계해 이뤄진다. 미국의 청년들은 고등학생 정도 나이만 되어도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을 지지하는 영 데모크라트(Yong Democrat)[79], 영 리퍼블리컨(Young Republican)[80]으로 자유롭게 활동한다. 지도교사도 이들과 함께 학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학생을 정치에 참여하게 해도 될지, 정치 갈등이 심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청년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해서 지난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한 것은 청년층의 표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이한승, 2013.)

프랑스 학교의 '시민교육'은 토론 학습을 중시한다. 교과서가 있기는 하지만 신문기사, 학술저널, 전문서적, 삽화, 통계자료, 사진 등 매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중립적' 시민 교육을 위해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 것이 프랑스 시민교육의 핵심이다.(김원태, 2012.) 시민교육을 통해 일과 직업, 노동조합, 노사 간의 갈등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한다. 노동자의 시위와 파업, 실업으로 인한 문제, 각종 사회운동 등에 관한 사진 자료나 신문기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안을 자유롭게 논함[81]으로써 '현재 프랑스 사회'와 '현재 교실 안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일본의 민주시민교육인 '공민교육'은 초 중등학교의 '사회(공민)' 과목, 고등학교 공민계의 '현대 사회', '정치 경제', '윤리' 등의 과목에서 이뤄진다. 민주주의의 역사·사상 체계, 선거제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의회민주주의 제도 및 조직, 지방자치, 매스컴의 역할 등을 교육하고 있다.(선거연수원, 2011, pp.40~46.)

신념과 기대감이 향상되었으며 자신감을 얻었다. 셋째, 청소년 시기의 시민교육에 대한 경험 여부가 성인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79. 미국의 '젊은 민주당원'을 일컫는다. 민주당의 청년위원회(Youth Council)는 모든 구성원이 36세 미만이고 전국위원회의 4개 지역(동부·중서·남부·서부)에서 선출된 12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출처: (www.democrats.org) 한국의 정당들은 청년위원회(31세~45세), 대학생위원회(30세까지)를 따로 구성하고 있다.

80. 미국의 '젊은 공화당원'을 일컫는다. 미국 공화당의 청년 보수운동은 대학공화당원(College Republican)과 청년공화당원(Young Republican)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학공화당원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공화당원은 18세부터 40세에 해당하는 캠퍼스 밖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보수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대학공화당원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 (출처: 이상민, "미 보수운동은 대학생들이 만든다", 『뉴데일리』, 2013.01.22)

81. 예를 들어, 프랑스의 중학교 4학년용 시민교육 교과서(2002년, Nathan)는 한 프랑스 대기업의 일자리 축소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시위 사진을 게재하고, '어떤 방법으로 노조 대표들은 노동자를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가'라고 묻는다. 학생들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하는가 하면,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놓고 직접 실수령액을 계산해보기도 한다. (출처: 전혜원, "프랑스 학생들도 이런 교과서 본대요",『시사인』, 2014.01.15)

3) 총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한 "국내외 초등학생 교실 학습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전효선 외, 2007.)에 따르면, 교실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영국 60.6%, 프랑스 60.0%, 일본 28.7%인데 비해 한국은 15.9%로 매우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교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실천한다'라고 답한 한국 학생은 18.4%에 그쳤다. 이는 프랑스(63%), 영국(54.3%)의 3분의 1 수준이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목표와 지향점은 당연히 민주적 공동체를 운영,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시민'과 '적극적 시민' 양성이 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민주주의 원리, 헌법적 가치와 정신, 그리고 시민교육의 특성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 국민, 시민단체, 정당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환경의 민주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 외의 단체나 기관과 협조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성공하려면 전략적,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교육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추진하는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열린 세계시민교육 강화'[82] 사업은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 가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략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혁신 사례를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전면 확대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2015년 6월에 개최된 수원시평생학습관의 '2015 시민교육 심포지엄'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의 일환으로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거대담론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풀뿌리 차원의 접근과 시도 또한 더욱 확산해야 할 것이다.

82. 인터넷 상에서 관련 문서(seouleducation.sen.go.kr/5_promise/pdf/4/4-12-2.pdf)를 확인할 수 있다.

3. 민주주의의 미래, 숙의

1) 숙의민주주의의 필요성

>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이 100점 만점에 40점이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
> *–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위원장(5·18 광주인권상 수상자)*
> *『광주일보』 인터뷰[83] 중*

한국형 다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은 선거제도의 한계, 정당정치의 후진성과 불안정성,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불균형, 실질적 민주주의의 퇴보로 인한 사회경제적 열등 시민의 양산, 엘리트 중심 정책의 일반화 등에서 드러난다. 대의민주주의 그 자체의 한계는 정치권 내의 게임 규칙 수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숙의민주주의로 이를 보완해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에 따르면 이상적 숙의민주주의란 '공론장에서 이성적 주장이 정제된 여론 형성을 돕는 것'이다. 숙의는 시민의 쟁점 관련 지식과 정치적 효능,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켜 민주주의를 위한 '더 나은 시민'을 만드는 과정으로 기능한다. 이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는 결과 중심적인 대의민주주의와 달리 논쟁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를 중시한다. 제도정치의 영역을 넘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구현되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숙의의 조건은 시민의 정치적 지식·의식, 토론 능력, 정치적 참여로 집약할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 배제된 국가권력의 일방적, 폐쇄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은 국가권력과 시민 간의 민심 소통창구와 사회경제적 약자집단의 소통채널을 필요하게 한다. 이에 시민참여와 공론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한국은 시민이 중심이 된 성숙한 숙의 토론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시민참여와 공론장 형성의 가치와 프로세스 평가체제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 한국 사회는 시민의 토론이 정책으로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시민민주주의가 절실하다.

83. 배명재, "한국 민주주의·인권 수준 40점... 현 정부, 과거 독재정권과 연관",『경향신문』, 2015.05.01.

2) 숙의 방법론 개발

고도의 갈등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최근 혁신적인 숙의 실험과 방법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합의 회의, 공론 조사, 시민배심원, 온라인 시민포럼 등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실험되고 확산해 왔다. 이러한 숙의 방법론을 모아 분류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유형 '정책도출형, 대화촉진형, 현실진단형, 과제발굴형, 토론교육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숙의 방법론이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담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흩어져 있는 그동안의 다양한 숙의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혁신적 숙의 토론 문화를 실험해야 한다. 이어 복제 가능, 결합 가능한 프로그램 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숙의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그동안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과 관련해 어떤 방법론이 시도되면, 그것이 유행처럼 번져 어디서나 비슷한 내용과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특정한 한두 개의 도구나 방법론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숙의 과정에 대한 수요에 대처할 수는 없다. 토론을 끌어내는 방법의 개발도 더 필요하고, 토론을 심화하는 방법과 토론의 결론을 다듬어가는 도구 또한 필요하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과 더불어 토론문화 성숙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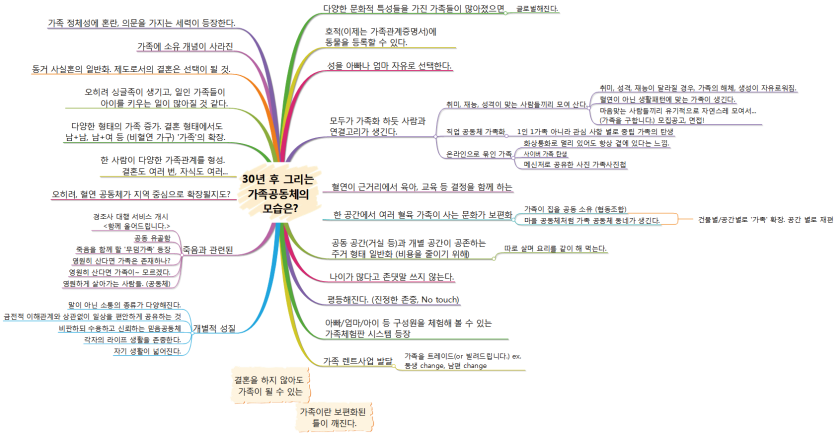
3) 총론

소셜픽션 콘퍼런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의 세부 프로그램의 하나로, 주제에 상관없이 30년 후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언콘퍼런스 '상상테이블'이 전국에서 개최됐다.

서울대 부모학생 모임인 맘인스누(Mom in SNU)에서 '2045년 가족 친화적 캠퍼스 상상'을 주제로 연 상상테이블에서는 다양한 처지에 놓인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캠퍼스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내 문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도출했다. 학생이 출산과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참가자들은, 변화를 통해 이러한 제약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기쁨을 표현했다.

'2045년 전주의 가족공동체'를 상상한 전주의 청년 모임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공동체뿐만 아니라 혈연 공동체보다 큰 단위로서 가족이 사라진 인류공동체를 상상하며 아래의 지도를 만들어냈다.

[그림 5-3] 2045년 전주의 가족공동체 상상테이블 지도



이밖에 '자유의 교육학', '완주 아줌마, 무대 위에 서다',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 '앙코르 커리어, 인생 후반의 더 멋진 일자리', '2045년 서울의 미래', '30년 후, 부산의 모습', '행복한 미래교육 금천 2045', '마케팅 2045', '미리가 본 2045년 통일 한국'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25개의 상상테이블이 펼쳐져, 살고 싶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후속 작업이 시작되는 중이다.

2015년 위기사회를 사는 모든 세대에게는,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함께 모여 생각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시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는 가정, 학교, 마을, 도시, 국가, 지구촌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여론조사나 인터넷 댓글 등 숙의에 기초하지 않은 피상적 국민 여론의 위험성을 극복하면서, 적확한 국민 의사의 확인과 공익을 위한 합의가 촉진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권과 시민의 괴리는 점차 감소하고, 시들어가는 민주주의가 재활성화될 것이다. 비로소 정치는 한국 사회의 비전을 다듬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는 단지 갈등 관리를 위한 기법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해 갈등을 제도화하고, 더 나아가 민주정치의 성격과 그 틀 자체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길이다.

Part 6
결론

언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언어가 생산되고 소멸하기도 하지만, 같은 언어를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만난 2015년을 사는 20대 청년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 속 언어는 익숙하지만 생소했다. 그들이 말하는 배움, 일, 복지, 민주주의는 우리가 익히 들어오던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을 설명하는 그들의 언어에는 그들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있었다.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만난 20대들은 대학만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충실하게 학교 교육에 순응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최소한의 생계비 확보에도 허덕이고 있었다. 그들은 국민 개개인의 연령대와 특성에 맞는 기본 복지를 원했지만,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의 발언이 가족과 사회에 전달되기를, 지역과 국가의 일에 당당하게 참여하기를 바랐다.

그들의 언어에는 그들의 희망이 담겨 있다. 그들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고 교사와 학교를 떠올리는 대신, 부모와 마을을 소환했다. 그들이 꿈꾸는 '일'에는 정당한 고용계약과 안정적인 급여보다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과 관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권을 보장받는다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는 마을 이웃과 더불어 구축하고 싶어 했다. 투표 이전에 자신도 한 명의 주민이자 국민으로서,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싶어 했고,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세우고 싶어 했다. 자신이 직접 지역과 국가의 일원으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다.

2015년의 청년이 원하는 미래는 기존의 언어와 제도로는 담아내기 어렵다. 옆집 아저씨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말하는 청년에게 교육기본법은 배추 한 포기도 마련해줄 수 없다. 일은 의무가 아닌 문화여서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청년에게 근로기준법은 해줄 것이 없다. 청년들은 말했다. 우리는 늘 복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무언가를 욕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적도 없었다고. 민주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내게 돌아온 대답은 무급인턴으로 바닥부터 기라는 말이었다고. 그들은 살아갈 광복 100년에는, 그들이 만든 새로운 언어의 집이 지어지길 원한다.

소위 기성세대로선 이해하기 힘들고,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청년들의 제안에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미래는 판을 뒤엎는 일종의 전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 사회에 사는 청년세대는 신자유주의, 사회 양극화라는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맞벌이 중산층 가정에서 아파트 열쇠를 목걸이 삼아 학원을 전전하며 입시 위주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줄타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고자 했으나 벼랑 끝에 놓인 현실에 절망하면서, 그들은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미래에 대한 상상을 제기한다. 그들의 미래사회 비전은 앞선 세대와

는 분명 다른 경험과 맥락 위에 있으며, 그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위치와 통찰력도 앞선 세대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90년대에 등장한 X세대와는 또 다른 21세기의 신인류가 탄생하고 있음을 표명하고자 한다.

그러한 신인류가 꿈꾸는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결국 그들은 자유로우면서 평등한 삶을 꿈꾼다. 그것은 전 인류가 상상해왔던 미래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목도한 그들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앞선 세대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그들은 계급, 인종, 지역, 성적 선호, 민족, 직업, 장애 여부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차이를 메우는 평등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등이 실현될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희망제작소의 연구보고서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는 청년들을 삼포세대, 오포세대, 칠포세대로 명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 자신의 바람과 희망을 불러내는 출발점이 되고자 했다.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통해 청년들이 바라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30년 뒤의 이상적인 대한민국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그 미래에 다가가기 위한 배움, 일, 복지, 민주주의 네 개 영역의 정책을 제안했다.

청년들이 상상하는 미래에 미처 담기지 못한 오늘의 현실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는 청년이 스스로 발언하고 상상하고 제안하는,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첫걸음이다. 광복 70년을 맞아 새로운 세대에게 걸맞은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자 하는 희망제작소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를 시작으로, 희망제작소는 앞으로 청년세대가 새로운 국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을 지원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참고문헌

Part 1 서론

이원재 외 (2014), “소셜픽션 지금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어크로스

Part 2 배움

[국내문헌]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교육부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교육부

2015 꿈의학교 추진 기본계획(안), 경기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4

박영숙 (2015), “유엔미래보고서 2045”, 교보문고

송순재 (2010),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덴마크 자유교육”, 민들레

오연호 (2014),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마이북

최창욱 외 (201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유경 외 (2012),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외국문헌]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관련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

서울특별시교육청 꿈사다리 http://kkumsadari.sen.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빅픽처스쿨 http://www.bigpicture.org/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http://yesan.ep.go.kr/

[관련기사]

김기찬, "남녀 격차 100대 63", 『중앙일보』, 2015.02.11.

고동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시사인』, 2007.10.01.

류현정 유진우, “몽골서도 MIT 강의 '접속'… 美 대학 절반이 사라진다”, 『조선비즈』, 2014.09.01.

김용래, “고교생들 ‘관심 가져주는 교사’ 가장 좋아해”, 『연합뉴스』, 2015.05.13.

유성열, “딸 손잡고 행복한 출퇴근… 점심시간엔 회사서 ‘모녀 데이트’”, 『동아일보』, 2014.10.02.

안승찬, “女心 잡는 기업들... 출산휴가 '기본' 육아휴직 '필수'”, 『이데일리』, 2013.11.14.

안승찬, “육아휴직 150%..맘(Mom) 편한 직장 '롯데'”, 『이데일리』, 2013.11.14.

여성가족부. "국내 13개 대표기업, 여성고용 확대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선도적 실천사례 제시!", 2014.12.16.

김호정, “아빠를 휴직시킨다면”, 『중앙일보』, 2014.10.18.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남성 육아휴직률', 『위키트리』, 2014.01.08.

이종일, “경기교육청, 혁신교육지구 8개 지자체와 협력사업 강화키로”, 『뉴시스』, 2014.09.29.

송채경화, “국가정책 속 어린이는 나라의 찬밥”, 『한겨레 21』, 2015.05.04.

시흥저널,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곳,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문 열다”, 2015.04.28.

조현경, “마을은 배움터로, 아이들은 마을 주인으로”, 한겨레, 2015.05.04.

홍용덕, “온 마을이 학교 시흥의 새로운 실험”, 한겨레, 2015.03.24.

가리&이소연, “은평구 ‘마을엔문화예술학교’, 함께 배우고 얘기하고 치유하자!”, 월간마을 6월, 2014.06.20.

이성은, “《빅 픽처 스쿨》 한 명의 아이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려라!”, 평생학습아카이브 와, 2014.09.03.

[기타-영상자료 외]

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5편(교육)

Part 3 일자리

[국내문헌]

오연호 (2014),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마이북

자크 아탈리 (2005), “인간적인 길,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를 위하여”, 에디터

이정전 (2012), “시장은 정의로운가”, 김영사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유럽연합 각국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이승렬 (2014), “독일의 청년 노동시장 성과와 직업교육제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하이너 드립부쉬 (2014), “독일의 노동조합“,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송태수 (2014), “청소년의 노동의식 및 노동교육 실태조사결과 분석과 함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은수미 의원실 ·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송태수 (2005), “국내 및 외국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황”,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레그란드, 츠카구치 도시히코 외 (2013), “스웨덴 스타일”, 이매진

신필균 (2011), “복지국가 스웨덴”, 후마니타스

메리 힐슨 (2010), “노르딕 모델”, 삼천리

김재훈 (2013),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한울아카데미

박노자 외 (2013),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꾸리에

장하나 외 17인 (20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4.10.02

김득갑 (2012),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이현경 (2003), “영국 학교노동교육의 실태”, 선진 5개국 학교노동교육 실태, 한국노동교육원

배경내 (2005),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방안”, 참교육실천보고대회

한눈에 보는 사회 2014, OECD

최봉 (2015), ‘서울시, 생활임금 표준안 만들어 제도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 해야’, 서울연구원 이슈페이퍼

이기재 (2014),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최종보고서’, 한국통계학회

김복순 외 1인 (2014), “2014 비정규직 노동통계”, 노동연구원

배규식 (2012), “장시간 노동체제속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질 향상방안 포럼자료집, UNI-KLC포럼

인수범 외 1인 (2008), “노동조합의 지역사회복지체계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영두 (2007), “외국 노동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용사례”,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유길상 외 1인 (1999),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관련홈페이지]

OECD www.oecd.org/

고용노동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lab_suda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http://saesayon.org/

인권재단 사람 http://www.hrfund.or.k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http://basicincome.kr/

ICOOP 생협블로그 http://blog.naver.com/icoopkorea/

[관련기사]

인수범, “연대노동정책, 노동유연화에 대응하는 스웨덴 금속노조의 선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 2013.05.19.

정경섭(마포민중의집 공동대표), “스웨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라는 곳“, 한겨레, 2014.11.21.

황경상, “[창간 65주년 특집]8대 제안 ⑦ 노조 조직률 50%로”, 경향신문, 2011.10.16.

김수현, “대한민국 노조조직률 OECD 최하위권“, 새사연 이슈리포트, 2012.05.17.

전순옥, “전순옥 의원, 노동권 교육 의무화법 발의”, 전순옥 의원실, 2015.04.23.

최지용, “[어서와, 노동은 처음이지?②] 프랑스 독일 미국의 노동교육 방법”, 오마이뉴스, 2013.12.

신기섭, “한국 최저임금의 적정선은 얼마인가” 한겨레신문, 2015.04.10.

윤성민, “한국의 최저임금 근로자 주66시간 일해야 빈곤탈출… OECD 최저임금 보고서”, 국민일보, 2015.05.11.

한정애 국회의원 블로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정은, “한국남성 가사노동 시간, OECD 국가 중 가장 적어”, 오마이뉴스, 2012.05.16.

국제협력담당관실, “덴마크 노동시장정책 현황”, 국제노동정책브리프 22호, 고용노동부, 2009.01.22.

[기타-영상자료]

EBS 다큐멘터리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1편 - 노동, EBS 다큐프라임, 2013.01.14.

2015 기본소득학교 1강 '기본소득의 개념, 역사, 유형'

독일 개황, 외교부, 2011.

Part 4 복지

[국내문헌]

김현미 (2011), “중산층의 욕망과 커지는 불안들”, 창작과비평 153호: 38-54.

신혜수 (2013),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동향과 주요 논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특집

마경희 (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돌봄”, 『페미니즘연구』 제11권 2호.

한지희 (2010), “스웨덴의 일가족 양립정책”, 『경기여성정보웹진 우리』 제116호

최정은 (2015),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새사연 2015 전망보고서』

윤홍식 (2010),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18: 14-25

윤홍식 (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페미니즘연구』 제11권 1호: 167-207.

조효제 (2008), “인권의 풍경”

조효제 (2009), “사회권 영역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들”, 한국인권재단 인권아카이브.

장은주 (2006), “사회권의 이념과 인권의 정치”, 사회와 철학 연구회 논문집 『사회와 철학』제12호.

흰고래. 통깨,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인권오름』 제343호, 2013.04.24.

고은채 (2011),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주간인권신문『인권오름』제258호.

국가인권위원회 (2009),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김수현 (2011), “2012 진보의 주택 부동산 전략”, 사회디자인연구소

김태섭, “주거 불안 해소... 임대주택 선진화 발판 마련”, 『정책브리핑』, 2015.01.21.

이광준,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대도시를 떠나 지역으로 가는 이유”, 『예술경영』224호 특집, 2013.08.08.

서울연구원, “유치원생과 노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통합형 마을놀이터 개소”, 『세계도시동향』 제271호, 2011.09.19.

박권일, “청년 빈곤: 세대의 문제냐 성장의 단계냐‘, 『서강대학원신문』 132호, 2015.04.08.

사이토 준이치 (2009), 『민주적 공공성』

하승우, “풀뿌리민주주의, 정치의 고정관념을 뒤집다”

하승우, “풀뿌리 민주주의와 아나키즘”

하승우, “풀뿌리민주주의, 정치의 고정관념을 뒤집다”

음선필 (2013),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13-22-5-4」, 한국법제연구원

장은주 외 4명 (2014.12), “왜 그리고 어떤 민주시민교육인가?-한국형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 (2014.02),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2014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워크숍, 경기도교육북부청사

세계환경발전위원회 (2005), “우리 공동의 미래”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4.06), 2014년 6월 개요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2014), “복지국가에서 온 청년의 이야기”

유창복 (2013), “마을이 혁신이다 -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유창복 (2015),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살이”, 일본 시민섹터정책기구 발행 『사회운동』 2015년 3월호, ‘한국에 배우자’

[외국문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관련홈페이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5727&efYd=20140101#0000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2012) 모니터링 블로그 http://upr2012.tistory.com/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668231

희망플래너 블로그 http://hopeplanner.tistory.com/261#.VUYgsk1O6Uk

티타임즈 http://www.ttimes.co.kr/index.html?no=2015020819257733115

[관련기사]

노대명, "복지혜택조차 양극화… '사회권의 위기'", 『한겨레』, 2010.07.25.

새사연, "〈스티글리츠 보고서〉에 담긴 '행복GDP'의 내용은?", 『오마이뉴스』, 2009.10.28.

김준영, "서울 청년 5명 중 1명은 '주거 빈곤층'", 『세계일보』, 2015.04.22.

"20대 서울 청년층 2명 중 1명 '논다'", 뉴시스, 2015.04.19.

황정일, "한국 공공주택 OECD 절반 안돼… 행복주택 도입할 만", 『중앙일보』, 2014.02.26.

김하수, "[사람이 답이다] 빚내는 청년에게 빛을 드립니다-청년 주거문제 주택조합으로 해결…임경지 민

달팽이유니온 대표", 『이코노믹리뷰』, 2015.05.03.

고찬유, "'국민 63%, 보편도 비례도 아닌 비례적 복지를", 『한국일보』, 2015.02.23.

변태섭, "세금 투입되는 무상급식 보육부터 비례복지 밑그림을", 『한국일보』, 2015.03.12.

김윤태, "오세훈은 모르는, 우리는 아는, 복지국가 혁명!", 『프레시안』, 2010.12.10.

김윤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프레시안』, 2015.02.09.

김윤태 이상이 이대근 좌담,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의 재구성, 길을 찾다", 『프레시안』, 2011.03.03.

한국노총, "시민-노동자-돌봄모델 도입 필요", 『노사저널』2013.5(870호).

이철환,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한가?", 『머니투데이뉴스』, 2015.04.28.

최서윤 ([2030 세상보기] '취사 선택적 소통', 『한국일보』, 2015.03.25.

뉴스시사, 2015.01.27. '박 대통령 지지율 35.6%… 계속된 하락세'

중앙일보, 2014.10.13. '대학생 58% "朴정부 국정운영 부정적"'

정수현, "경기교육청, 전국최초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개발",『에듀뉴스』, 2013.11.26.

파주신문, "경기도교육청, 초중고 '민주시민교과서' 활용률 97.8%", 2014.06.25.

윤근혁, “고교생들,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배운다” 『참세상』, 2015.02.24.

김미연, “위기의 20대, 대안을 모색하다”, 『서울대학신문』, 2010.05.09.

“서울시 청년정책, '현실 지원'으로 바뀐다”, 『머니투데이』, 2015.04.19.

손선희, “국회 국토위, 취약계층 주거수준 개선 ‘주거기본법’ 통화”,『아시아경제』, 2014.04.30.

고수현, “서울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5대 핵심전략 추진”, 『시민일보』, 2015.04.29.

윤원철, “[비상식의 사회] 한국은 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됐을까”, 『주간경향』제1124호, 2015.05.05.

이봉주, “[더나은미래] 생애주기별 복지가 중요한 진짜 이유”, 『조선일보』, 2015.01.13.

연합뉴스, “주거기본법 국회 통화... ‘주택 공급’서 ‘주거 복지’로”, 2015.05.29.

[기타-영상자료 외]

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1~3편(노동/의료/주거)

김현미 (2015),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한국청년, 삶의 ‘재배열’”

Part 5 민주주의

[국내문헌]

김현미 (2009), “신자유의적 권위주의 국가와 생활정치”, 창작과비평 145호: 94-113.

김현미 (2010), “신자유시대의 ‘국가없음’의 상황과 사회권”, 2010 제주인권회의: 16-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4.11)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제주발전연구 제18호 (2014.12), “사전투표제의 의미 및 과제 : 6.4 제주지방선거”

고선규 (2010.02), “일본의 투표자 인센티브제도와 투표참여”,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1호.

이종문 (2010), “기탁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입후보 진정성 제고 방안”, 『선거연구』 제2호

서정원 (2015),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

서울시 런던-코펜하겐 사회혁신 연수 (2014), “런던에서 코펜하겐까지, 시민소통 참여로 만들어가는 사회혁신의 현장”, 『2014 서울시 기획연수 사전자료집』

음선필 (2013),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현안분석] 13-22-54.

수원시평생학습관 (2014.03), “[평생학습 초점] 시민교육을 말하다 - 학교의 시민교육 :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안 민주시민교육”

주은경(2010), “스웨덴 민주주의의 힘은 시민교육에서 나온다”, 『시민교육』제3호.

강현선 (2012), “함께하는 정치교육, 국가는 거들 뿐”, 희망제작소 수원시평생학습관 해외평생학습동향 7호.

박상훈 (2011), “정치의 발견”

최현섭 (2004.01), “미국의 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원

송용구, “프랑스의 학교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제42권 2호, 2010.06.

선거연수원, “외국의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현황”, pp.40~46. 해외통신원 지정과제 제2011-4호, 2011.06

전효선 외, “국내외 교실 학습 연구(I)-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7-1, 2007.12.

박병석, “민주시민교육, 메타플랜과 함께 하면 훨씬 재밌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지침서 제1권, 2002.

이원재 외 (2014), “소셜픽션 지금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외국문헌]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4, DOI:10.1787/soc_aag-2014-31-en

샤츠슈나이더 (2008),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영국 시민교육재단 외 (2008), 『영국 시민교육 지침서(Making Sense of Citizenship)』,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련홈페이지]

OECD 통계표, http://stats.oecd.org/index.aspx#

http://www.democrats.org/

http://seouleducation.sen.go.kr/5_promise/pdf/4/4-12-2.pdf

광복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홈페이지 http://hope2045.org/

[관련기사]

임석규, “박 대통령 지지율 35.6%… 한달 전보다 8%p 급락”, 『한겨레』, 2015.01.27.

한국일보, [사설] 정치문화 개선 가능성 보여준 사전투표제, 2014.07.27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2-08호 (2012.09.27),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주간경향, “[표지이야기]사전투표제, 투표율 효자 될까”, 2014.05.27.

한겨레, “사전투표제 ‘깜깜이 선거’ 부를라”, 2014.05.19.

김용한, 오마이뉴스,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는 방법일까”, 2014.06.01.

배민욱, “선관위, ‘투표 인센티브제’ 1차례만 활용”, 『중앙일보』, 2013.10.21.

김원태, “학교폭력, 시민교육이 답이다!”, 『오마이뉴스』, 2012.06.25.

이상민, “미 보수운동은 대학생들이 만든다”, 『뉴데일리』, 2013.01.22.

이한승, “미 공화대선 패인은 청년층 외면”〈폴리티코〉, 『연합뉴스』, 2013.06.03.

전혜원, “프랑스 학생들도 이런 교과서 본대요”, 『시사인』, 2014.01.15.

윤석만 윤정민, “영국 프랑스처럼 초 중 고서 토론식 시민교육 하자”, 『중앙일보』, 2014.12.31.

송현숙, “[광복 70주년 기획-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 ‘신민’ 만들기가 ‘국민’ 만들기로... 일본도 버린 ‘잔재’ 여전히 답습”, 『경향신문』, 2015.02.13

배명재, “한국 민주주의 인권 수준 40점... 현 정부, 과거 독재정권과 연관”, 『경향신문』, 2015.05.01.

희망리포트 [2015-01]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발행인 박재승
편 집 희망제작소 연구조정실
디자인 안영삼
발행일 2015년 6월
발행처 희망제작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Tel 02.3210.0909 Fax 02.3210.0126
www.makehope.org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희망리포트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